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일 전략 수립과 남북한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전략 모색과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홍석훈·전병곤·신중호·오경섭·이기태·허문영·홍양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일 전략 수립과 남북한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전략 모색과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홍석훈·전병곤·신종호·오경섭·이기태·허문영·홍양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전략 모색과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일 전략 수립과
남북한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인 쇄 2017년 4월

발 행 2017년 4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손기웅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2023-8000
(팩시밀리) 02-2023-8298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세일포커스(02-2275-6894)

인 쇄 처 (사)한국신체장애인지원회인쇄사업장(02-6401-8891)

ISBN 978-89-8479-874-8 93340

남북 통일 문제

340.911-KDC6 / 320.9519-DDC23 CIP2017014835

가 격 9,500원

© 통일연구원, 201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전략 모색과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요약	vii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2. 본 연구의 차별성	5
3. 기대효과	6
II. 역대 통일전략 평가와 새로운 통일전략의 필요성	7
1. 역대 정부의 통일전략 분석 및 평가	10
2. 통일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통일전략의 필요성	35
III. 통일전략 수립을 위한 새로운 접근	45
1. 북한인권 개선을 통한 통일전략	48
2.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통일전략	70
3. 독일통일 사례를 통한 통일전략	92
IV. 통일공감대 확산방안	111
1. 대내적 통일공감대 확산방안	113
2. 대외적 통일공감대 확산방안	123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전략
모색과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V. 결론 193

참고문헌 199

최근 발간자료 안내 205

표·그림목차

표 III-1	1990년대 중반 이후 외부정보 유입 방법	65
표 III-2	북한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촉 수단	65
표 III-3	대북방송 현황	67
표 III-4	독일과 한반도 체제 및 주변환경 비교	94
그림 IV-1	한러 양국 국민이 평가하는 자국에 중요한 협력 국가	139
그림 IV-2	상하이 협력 기구 구조	184
그림 IV-3	독일과 러시아간 교육 및 연구 협력 사례	187
그림 IV-4	독일과 러시아간 학자 교류 및 지원 사업 사례	189
그림 IV-5	한국인의 러시아 관련, 러시아인의 한국 관련 정보 출처	191

북한 김정은 정권이 2016년 4차, 5차 핵실험을 연이어 감행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남북 관계는 크게 경색되었으며 동북아 정세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보 긴장감 조성과 함께 중국의 공세적 외교정책의 추구,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출범 등에 따라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를 예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롭게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를 반영한 적절한 통일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우리 정부의 기존 통일전략을 분석·평가하고,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이후 변화된 국내외적 통일환경을 고려하여 새로운 통일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변화된 미·중 관계와 북한정권의 핵개발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반영하여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통일정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체제 중심적 통일 논의에서 벗어나 북한 인권, 인문학적 접근법을 통해 새롭게 통일전략을 제시하고 국내외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남남갈등 및 국론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공감대 형성 방안 제언을 국내에만 한정하지 않고 통일한국을 위한 주변국,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같은 한반도 주요국들의 이해와 협조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새로운 통일전략과 연계하여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새로운 통일전략, 통일공감대, 대북정책, 북한인권, 통일인문학, 독일통일사례

Seeking a Unification Strategy Based on the Changed Conditions for Unification After the North Korea's 4th and 5th Nuclear Tests and Ways to Spread the Public Consensus on Unification

Hong, Sukhoon et al.

As the Kim Jong Un Regime pushed ahead with the 4th and 5th nuclear tests in 2016 and continuously conducted the mid-to-long range missile tests, the inter-Korean relations have been hampered by a huge margin, bringing significant changes in the Northeast Asian landscape. It is hard to predict how the situation in East Asia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will unfold in the future, due to a series of the following events: the Kim Jong Un Regime's attempt to create tension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China's pursuit of aggressive foreign policy; the advent of the US Trump administration.

A proper unification strategy should be pursued and crafted with a reflection of the newly changing circumstances in Northeast Asia so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an dampen the ambition of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nd bring about a peaceful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o that end, this research attempts to primarily evaluate and access the existing unification strategy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and explore various ways of formulating a new one, based on consideration for the chang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ditions for unification after North Korea

conducted a series of nuclear tests.

This research aims to seek a unification policy from more comprehensive perspective, which reflects the changed US-China relations and the rapidly changing circumstances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result of the Kim Regime's relentless pursuit of nuclear development. It also sets out a unification strategy in new perspective with a humanistic approach on North Korea's human rights issues, going beyond the existing system-centered approach on fostering unification-related discussion. It also presents a way for addressing South-South Conflict and conflicts of opinion on matters of national importance, which could occur both in the process of and after unification, by looking into how to build and spread the public consensus on unification both at home and abroad. Lastly, it lays out a way for building the public consensus on unification, fostering an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of not just domestic actors, but also of major stakeholders, such as the US, Japan, China, and Russia, in connection with a new unification strategy.

Keywords: New Unification Strategy, Public Consensus on Unification, Policy toward North Korea,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umanistic Approach on Unification, German Case of Unification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북한이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9월에 5차 핵실험과 지속적으로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실시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크게 경색되었으며 동북아 정세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도발 지속과 함께 중국의 공세적 외교정책의 추구,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출범 등으로 인해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를 예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7년 북한 김정은이 핵보유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동북아의 긴장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지속되는 핵위협과 핵·미사일 위협은 남북관계 경색을 조장하고 한반도 주변국의 안보적 대결구도를 양상했으며, 북한은 이를 이용하여 한반도에서 자신의 입지를 높이고 정권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결정하고 전면적 대북 경제봉쇄 및 강경정책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대북 제재와 경제봉쇄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향후 대북·통일정책의 일관적 추구가 힘든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반을 구축해야 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와 같이 담보상태에 있는 남북관계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변화 유도를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안정적인 동북아 정세를 동시에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롭게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변화를 반영한 적절한 통일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우리의 기존 통일전략을

분석·평가하고,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 이후 변화된 국내외적 통일환경을 고려하여 향후 새로운 통일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우리정부의 통일전략과 정책을 리뷰하여 장·단점 및 현재의 통일정책 수립에 필요한 요인들을 추출하여 현재 북한의 핵위협, 동북아 국제질서, 북한 체제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변화하는 통일환경을 분석하려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동북아 국제질서를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정책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로 인한 미·중 관계의 변화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진화와 한계를 반영하여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통일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 틀을 벗어나, 북한인권 개선을 통한 북한 내부 변화유도와 독일통일 사례를 분야별로 나누어 우리 통일전략에 필요한 요인 분석기법을 활용(역사적 고찰 연구방법)할 것이다.

여기에 새롭게 모색한 통일정책과 그 맥을 같이하여, 남북관계 경색 및 동북아 긴장 국면 장기화에 따른 통일 여론의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통일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우선 북한인권 문제를 화두로 삼아 우리가 추구해야할 통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국내적 통일공감대 확산방안의 기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한국을 대비하여 경제·안보·정치체제의 외면적 연구와 함께 우리사회 내부의 통합을 위해 다양한 준비와 연구를 진행하는 차원에서 통일인문학적 접근법을 통한 국내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통일인문학은 우리의 분단 경험을 인문학적으로 성찰하고 분석하여 통일과정 및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사회내부의 갈등을 예방하고 남북통합의 보편적 가치와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통일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새로운 통일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한국 사회내부의 통일 공감대 확산 방안을 도출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독과정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통일전략과 이를 거울삼아 국내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을 새롭게 조명하려 한다.

또한 본 연구는 통일공감대 형성을 국내에만 한정하지 않고 통일한국을 위한 주변국,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같은 한반도 주요국들의 이해와 협조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새로운 통일전략과 연계하여 제시하고 있다.

2.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변화하는 국제환경을 새롭게 분석하여 기존 통일전략의 대안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며, 뉴노멀 시대 미·중 관계에 따라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향후 남북한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 이후 변화하는 정세에 발맞추어 우리의 통일전략을 새롭게 집대성하고 향후 보다 효과적인 통일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단기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주력한다.

새로운 통일전략과 효과적인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한 연구방법 도입을 위해서 기존 통일정책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통한 새로운 통일 전략을 수립하려 한다. 또한 독일통일 사례를 재분석하여 향후 남북한 통일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통일전략을 모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문학적 접근법을 통해 우리의 통일전략을 고민하고 통일공감대 형성방안에 접합하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효과적인 한국 사회 내부의 통일공감대 형성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I
II
III
IV
V

결국 본 연구는 대내외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들의 대외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북한 내부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새로운 통일전략과 국내외 통일공감대 확산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3. 기대효과

본 연구는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 이후 변화된 통일환경 속에서 정부가 통일전략을 수정·보완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하고 우리정부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통일전략을 수립해 나아가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정부가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통일에 대한 국내 여론을 개선하고 통일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체제 중심적 통일 논의를 벗어나 북한인권, 인문학적 접근법을 통해 새롭게 통일전략을 제시하고 통일공감대 확산을 방안을 분석함으로써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남남갈등 및 국론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우리사회 내부 갈등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역대 통일전략 평가와 새로운 통일전략의 필요성



전략이란 “특정주체가 특정한 환경 속에서 가용자원을 잘 배분하고 이용하여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전략이란 “당면 또는 변화하는 통일환경 하에서 가용자원을 잘 배분, 활용하여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¹⁾ 따라서 통일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통일환경(국제·남북관계·북한정세), 가용자원(국력), 방책(기본방향과 종합적·체계적 방법)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역대정부의 통일전략이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법적 정통성을 바탕으로 통일을 주도한다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가 구현되는 방향으로 한반도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역대정부는 해당 시기별 국제 및 한반도 정세, 북한의 대남전략 및 내부 상황, 남북한 국력의 차이, 안보 상황, 남북관계 진전 상황, 국민여론 등을 종합하여 최고지도자의 특성과 결단에 따라 통일전략을 마련하여 왔다. 통일전략은 역대정부가 당시의 통일환경의 여건과 상대방인 북한의 입장에 따라 그 실행력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통일전략 구도 속에 적절하다고 선택된 통일 및 대북정책을 통해 구현되었다. 통일정책(통일방안 포함)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기본 방향과 접근방법이라면, 대북정책은 역대정부가 주어진 임기 내에 중·장기적 통일정책 구도하에 중·단기적 관점에서 분단의 안정적·평화적 관리, 당면 남북관계 현안 대처, 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1) 통일전략은 ‘통일에 접근하는 방식과 방법론을 포함하며 통일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구상’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통일정책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하는 가용자원과 수단’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통일연구원,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 3.

역대정부의 통일전략을 분석,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일전략, 통일방안, 통일정책, 대북정책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역대 정부의 통일전략 분석 및 평가

가. 역대 정부 통일전략 변화

역대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의 기초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구이며, 점진적·단계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평화·민주통일의 구현을 공식적인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의 무력공격이나, 급변사태에도 대비(contingency plan)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기사태를 통한 통일은 우리에게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초래되기 때문에 가능한 평화통일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일차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전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평화적인 통일전략은 우리가 주도하여, 국력(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동질성과 당사자 간 통일의지를 높여 나가는 한편,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내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속에, 평화적으로 연착륙(soft landing)하는 통일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적인 통일전략이 이상적 형태(ideal-type)의 통일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일전략의 하부 구성전략은 우리의 통일역량 강화전략, 한반도 평화정착 전략, 남북교류 협력전략, 북한변화전략, 통일외교전략, 통합대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당시의 국내외 정세 여건, 국력, 북한의 대남전략, 국민여론 등으로 인한 제약 때문에 이와 같은 통일전략을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구현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정권마다 최고지도자의 특성과 다른 이론적 기반 하에 선호하는 접근방법과 정책수단이 달라 지속가능한 효과가 누적되지도 못했다. 이와 같은 이상적 형태의 통일 전략을 염두에 두면서 역대정부의 통일전략(통일정책, 대북정책 포함)을 살펴보고, 분석·평가해보고자 한다.

(1) 이승만 정부~김영삼 정부 시기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이 유엔이 승인한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입장에서 불법단체인 북한이 잠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실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북한과의 협상불가론과 북진통일론을 개진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남침한 6·25전쟁을 기회로 무력북진통일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유엔 감시 하에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통한 통일을 추구하였다.

윤보선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불가론은 여전히 견지하면서, 대신에 무력북진 통일론은 폐기하고 평화통일론으로 선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유엔감시 하에 남북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였다. 윤보선 정부 시기에서는 현실적인 입장을 취하였는데 ‘선 건설, 후 통일’의 원칙을 밝혔다. 이 원칙은 다음 정부인 박정희 정부에 계승되었다.²⁾

박정희 정부는 출범 전후로 ‘반공’을 제1의 국시로 하면서, ‘국토통일을 위한 실력배양(선 건설, 후 통일)’을 통일의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그리고 유엔감시 하에 남북자유총선거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추구하였다. 그 이후 1969년 닉슨 독트린과 미·중 데탕트로 인한 국제

²⁾ 이승만 정부와 윤보선 정부의 통일정책은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통일문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5), pp. 199~201; 양영식, 『통일정책론』 (서울: 박영사, 1997), pp. 11~31.

I
II
III
IV
V

정세의 변화로 북한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갖고, 새로운 방향으로 통일 정책을 모색하여 나갔다. 그리하여 1970년 8월 15일 ‘평화통일 구상선언’과 1973년 6월 23일의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6·23 선언)’, 1974년 8월 15일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발표를 통해 ‘선 평화, 후 통일’ 정책노선을 취하였다.³⁾ 북한지역에 공산정권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인도적문제의 해결, 비정치적 문제의 해결, 정치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남북문제 해결의 3단계론’이 1970년대 이후의 통일 접근방법으로 등장하였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기능주의를 중시하는 접근방식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⁴⁾ 1972년 ‘7·4남북공동선언’ 발표와 인도적 문제를 다룬 남북 적십자회담과 정치적 문제를 다룬 남북조절위원회가 열렸다. 그리고 남북한 내정불간섭과 불침략을 제시하고, 남북한 UN 동시 가입을 반대하지 않았다. 우리는 UN 가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주권국가로 인정받아 남북관계를 풀려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반대 등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가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정희 정부의 통일전략은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기능주의 접근법을 기초로 한 ‘선 건설, 후 통일’과 ‘선 평화, 후 통일’ 전략이라 하겠다. 그리고 남북한 체제 경쟁을 선언하였으며, 이전 정부의 남북협상 불가론에서 대화 있는 대결구도를 만들어나갔다.

1980년대 초 출범한 전두환 정부는 적극적인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박정희 정부시기에 기능주의 접근법에 제도적 부분을

3) 「평화통일구상선언」,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양영식, 『통일정책론』, pp. 160~180 참조.

4) 통일노력 60년 발간위원회,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전라남도: 다해, 2005), p. 96.

강조하는 신기능주의 접근법을 합쳐, 1982년 1월 22일 대통령 국정연설을 통해 통일정책의 기본구상을 담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통일을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해야 한다면서, 통일을 ‘과정’으로 보고 통일국가를 이루기 위해 민족화합의 과정이 있어야 하며, 남북대표가 통일헌법을 제정해 이 헌법에 따라 통일 민주국가를 완성시키자는 것이다.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실천초치로 7개항의 ‘남북한 기본관계에 대한 잠정협정’을 체결하자고 했다. 그 내용은 ①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관계 유지, ② 모든 분쟁의 평화적 해결, ③ 내정 불간섭, ④ 현존 휴전체제의 유지 및 군비경쟁 지양, ⑤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개방 추진, ⑥ 남북이 각기 체결한 모든 국제조약 존중, ⑦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 설치 등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 최고당국자회담(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하였으며, 또한 민족화합을 위해 1982년 2월 1일 국토통일원 장관 명의로 서울-평양 간 도로 연결·개통, 설악산·금강산을 자유 관광지역으로 개방, 이산가족 편지 교류 및 상봉, 남북 쌍방 정규방송 자유 청취, 남북 쌍방 기자들의 상대지역 자유 취재 보장, 자유 공동어로구역 설정, 남북 자원 공동개발 및 이용, 비무장지대 군사시설 완전 철거, 남북 간 군비통제 협의 등 ‘20개 시범실천사업’을 제시하였다. 당시로서는 모든 분야를 포괄한 획기적인 내용들이었다.⁵⁾ 이러한 시범실천사업과 통일문제 협의를 위해 남북한 고위급 비공개 협의가 상당기간 있었고,⁶⁾ 1980년대 중반에 수재물자 인도·인수, 남북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과 체육·적십자·국회·경제회담 등 다변적 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아웅산 테러 관련 북한 측의 사과문제, 북한의

⁵⁾ 양영식, 『통일정책론』, pp. 189~214.

⁶⁾ 박철언,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 1』 (서울: 랜덤하우스중앙, 2005), pp. 148~216; 통일노력 60년 발간위원회 편,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pp. 149~152.

대남 간첩선 침투사건 등으로 정권 후반부에 보수적 성향이 강해지고, 남북관계 경색으로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전두환 정부는 적대적 공존 하에서도 현실을 바탕으로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 접근법, 그리고 군비 통제적 접근방법도 포괄하여 나름대로 종합적인 통일전략을 마련하였고,⁷⁾ 이를 위해 비공개 접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까지도 적극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권 후반부에 보수적 입장으로 선회하여 남북정상회담 추진도 중단하고, 남북관계는 경색되었다.

1980년대 말 급격한 냉전의 종말이 진행되는 환경 하에서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탈냉전의 국제환경과 상대적인 대북 국력우위, 그리고 우리의 국제적 지위의 향상 등을 배경으로 공세적인 대북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 포용정책)을 추진하였다. 적극적인 공산권 외교와 공세적인 대북정책을 포괄한 북방정책을 추진하였다.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북한을 타도대상인 적이라는 인식보다는 통일을 위한 동반자라는 인식하에 남북관계 개선, 북한의 변화와 통일을 위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남북 간의 화해, 협력과 공존을 통해, 그리고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유도하여 민족동질성을 회복하여, 평화통일로 나아가겠다는 통일정책 기초를 취하였다.⁸⁾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한국정부의 통일방안의 골간으로 지속되고 있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1989년 9월 11일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를 대외 선전용이 아닌 명실상부한 실천조치로 구현하고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990년 8월에 ‘남북 교류협력법’을 제정·공포하

⁷⁾ 군비통제이론은 평화를 위해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인데, 정치적 신뢰 구축을 거쳐 군사적 신뢰구축을 마련하고, 이어서 군축 등의 군비통제를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평화를 확보해나가는 이론이다. 이것은 유럽에서 1970년대 중반에 헬싱키프로세스를 통해 적용되었다.

⁸⁾ 박철연,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 2』 (서울: 랜덤하우스 중앙, 2005), pp. 23~29.

였고, 남북 당국 간에 고위급 회담을 적극 추진하여, 남북관계의 기본 장전이라 할 수 있는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도출해내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당시의 여야 4당의 합의로 채택되어 명실상부한 국민적 합의를 거친 통일방안이기 때문에 지속력을 가졌으며, 공식적으로 우리의 통일접근법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다. 과거의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 군비통제이론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사회학적 접근법을 가미하여 점진적으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먼저 비정치적인 ‘민족공동체’를 형성한 후에 통일국가로서 정치적 통일인 정치공동체를 궁극적으로 달성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 발전하는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The Korean Commonwealth)’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단계적인 통일방법이 되었다.⁹⁾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북 관여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그동안 국가보안법에 의해 일체의 대북 접촉·교류협력이 금지된 것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을 통해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남북 당국 간의 합의로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모든 내용, 즉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의 내용이 포괄적·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다.¹⁰⁾ 1980년대 말 국제사회의 중요 안보문제로 등장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함에 따라 남북당사자 간 해결기반을 만들었다. 그리고 공산권 국가와의 수교, 남북한 UN

⁹⁾ 정부가 ‘남북연합’에서 ‘연합’의 영문표기가, 국제정치학에서의 국가연합에서의 ‘연합’의 영문표기인 ‘confederation’이 아니고, ‘commonwealth’로 표현된 것은 영연방과 같은 느슨한 연합체를 상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¹⁰⁾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전문내용은 통일부, 「남북합의서」나 외교통상부, 『한반도 문제 주요현안 자료집』 (서울: 외교통상부 북미국, 2004) 참조.

I
II
III
IV
V

동시 가입을 실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유리한 통일환경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노태우 정부는 유리한 국제환경과 국력우위를 전략적 기회로 잘 활용하여 포괄적이면서, 점진적·단계적인 통일전략을 적극 실천하여 큰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¹¹⁾ 북한이 1993 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후속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더 이상의 남북관계의 확대·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북한이 1980년대 후반부터 형성된 불리한 국제환경으로 인한 체제위기를 느껴 ‘체제생존전략’ 차원에서 4~5년간의 남북고위급회담 진행과 남북합의문 채택 과정을 통해 시간별기를 하면서, 남북이 평화공존을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일단 위기를 넘겼기 때문이라고 본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이행되지 못함으로써 북한 핵문제가 그 이후의 남북관계 진전의 중요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통일전략과 대북정책이 북핵문제 해결에 많은 비중을 두는 요인이 되어 버렸다.

김영삼 정부는 대체로 노태우 정부의 통일 및 대북정책의 기초(화해, 교류협력, 공존과 북한 변화를 통한 평화통일이라는 점진적, 단계적 접근 방법)를 바탕으로 하여 출범하였다. 그러나 출범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북한이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북핵문제로 한반도 정세가 냉각되자 김영삼 정부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대와는 결코 약속할 수 없다(1993년 6월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고 하면서 남북문제의 진전과 핵문제의 해결을 연계시키는 ‘핵연계 전략’을 취하였다. 그 이후 1994년 6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평양방문과 김일성과의 회담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

¹¹⁾ 박철언,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 2』, pp. 38~61; 신장섭, 『김우중과의 대화』 (파주: 북스코프, 2014), pp. 100~109.

어지게 되었으나,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열리지 못하게 되었다. 이어 김일성 조문파동으로 남북관계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노태우 정부에서 발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좀 더 분명히 통일과정의 단계를 구분하는 ‘화해협력 단계 → 남북연합 단계 → 통일국가완성 단계’의 3단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 명칭에서 “한”을 삭제)’을 제시하였다. 그 이후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은 3단계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기본으로 유지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북한과의 화해협력과정을 제시하였지만, 북한이 1990년대 중반에 북한주민이 대량 아사하는 고난의 행군시기를 목격하자, 북한이 곧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예측 하에 급변 대비 전략을 고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북한을 ‘고장난 비행기’로 묘사하면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착륙(hard landing)대신에 연착륙(soft landing)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한편으로 북한의 어려운 식량난이 국제사회에 대두되자 대북 인도적 지원문제가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정부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이후로 대북 인도적 지원문제는 후속 정부에 있어서 포용정책이나 압박정책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대북정책이 기본적으로 핵연계 전략에 의해서 남북관계가 관리되었다. 북핵 해결을 위한 ‘미·북 제네바합의문’이 채택된 이후야 1994년 11월 남북경협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이 핵연계 전략을 취하는 김영삼 정부와는 남북대화를 배제하고 미국과의 대화만 추진하게 됨에 따라 남북관계의 우리의 주도력이 많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김영삼 정부는 남북관계의 주도력을 회복하려고 많이 노력하였다. 미·북 회담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려고 하거나, 미국을 설득시켜 한반도 평화문제 해결을 위한 4자회담(남·북·미·중)을 성사시켰다. 김

영삼 정부 기간 동안에는 북핵문제와 남북 간의 갈등으로 적대적 대결이 지배하였다.

(2)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 시기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김대중 정부는 철저한 현실가능성을 기초로 먼 미래의 통일문제보다는 집권 기간 중에 할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통일정책보다는 대북정책에 우선 집중하였다. 물론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도 그 동안의 우리정부의 통일정책의 기초를 승계하고 있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역점을 두고, 우리의 주도하에 능동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유화적인 포용정책(햇볕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적극적인 포용정책 추진은 국제환경으로서 미국 클린턴 정부의 ‘개입과 확산(engagement and enlargement)의 국가전략’과 김대중 대통령의 평소 통일철학도 작용하였다고 본다.¹²⁾ 유화적 포용정책은 북한이 단기간 내에 붕괴될 가능성이 적으며, 또한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점진적 변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흡수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남북 간의 화해·협력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북한의 변화(개방, 체제전환)를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통한 평화 정착과 궁극적으로 통일로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³⁾

12) 클린턴 정부의 ‘개입과 확산의 전략’은 미국의 국익을 위하여 세계문제에 개입하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세계의 많은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아시아에 적극적으로 개입과 확산을 해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70년대부터 통일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져왔었고 본인의 통일철학을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론화 시켜왔다.

13) 통일부, 『통일백서 1998』(서울: 통일부, 1999); 통일부, 『통일백서 2000』(서울: 통일부, 2000); 임동원, 『피스메이커』(서울: 중앙북스, 2008), pp. 330~354, 400~406.

김대중 정부의 유화적 포용정책은 구체적으로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북핵과 남북관계 병행전략 포함), 적극적인 대북 경제지원 및 협력의지(베를린 선언, 금강산 관광사업), 정경분리원칙(민간차원의 경협 활성화), 비동시·비등가·비대칭적 상호주의(先供後得), 조건 없는 대북식량 지원 및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의 자율성 보장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해교전 사태 때도 금강산 관광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경제지원 등이 제시된 ‘베를린 선언(2009년 3월 9일)’이 촉발하고, 북한의 실리전략이 작용하여 성사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확대·발전하였다. 남북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각종 남북회담이 활성화되었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3대 경협사업(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 금강산관광사업, 개성 공단사업)을 비롯하여 민간차원의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정부와 민간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남북교류협력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남북 경협사업을 위한 군사적 보장은 이루어졌지만 군사분야 자체의 문제는 다루어지지 못했고 따라서 군사분야에서의 획기적 진전은 없었다. 그리고 2002년 10월 발생한 2차 북핵 위기로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에 큰 장애물이 발생하였다.

2차 북핵 위기를 안고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유화적 포용정책기조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평화변영정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변영을 위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병행전략을 취하였고, 남북교류협력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 나아가 김대중 정부 시기에 미흡했던 군사안보 분야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대북 경제협력을 지렛대로 하여 접근하였다. 그리하여 기존의 개성공단사업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해주공단,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사업, 지하자원 공동

I
II
III
IV
V

개발사업, 조선업, 농업·수산협력사업 등 다양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새로 적극 추진하고자 하였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활성화하여 남북관계 진전도 가져오고, 이를 통해 군사안보 분야에서도 진전을 가져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이룬다는 구도를 실천시키고자 하였다. 그 이론적 기초로 평화경제론이 등장하기도 하였다.¹⁴⁾ 경제를 통해 북핵문제 등 안보문제를 풀 수 있다는 낙관적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 차원에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시키면서 그 유인책으로 200만 Kw의 대북 전력 지원도 제시하였다. 안보상의 핵심 이슈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인 틀인 6자회담과 더불어 남북회담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는 김대중 정부와 달리 시야를 넓혀 우리가 주도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동시에 이룩한다는 구상을 펼쳤다. 그리하여 정부에 ‘동북아시아대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우리가 동북아시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여 대내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지원사업을 적극 펼친 결과, 역대정부에서 가장 많은 지원 실적을 낳았다.¹⁵⁾ 그러나 역대 정부의 최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1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안보상의 위기가 발생하여 ‘퍼준다’, ‘끌려다닌다’는 논란이 생겼다. 그리고 정권 말에 남북정상회담과 ‘10·4선언’을 통해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 합의함으로써 시기적 적절성의 논란을 낳았으며, 차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면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로 남북 간에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UN결의안 표결에 기권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¹⁴⁾ 통일노력 60년 발간위원회 편,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pp. 402~410.

¹⁵⁾ 정부와 민간차원의 지원을 합쳐, 김영삼 정부는 2,314억 원, 김대중 정부는 8,557억 원, 노무현 정부는 18,833억 원, 이명박 정부는 2,492억 원 규모의 대북지원을 하였다.

(3)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 시기

기존의 유화적 포용정책에 근본적 비판의식을 갖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이 어렵다는 입장에 '비핵·개방·3000' 정책을 제시하였다.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인 경제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북한경제가 성장·발전하고, 그리하여 남북경제 공동체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통일로 나아간다는 '상생과 공영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동안의 유화적 포용정책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외형적 양적 확대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질적인 변화는 없었던 인식을 갖고 있다. 북한의 대남도발이 지속되는 등 대남 적대시정책의 변화가 없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더욱 가속화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대화에는 적극적이었지만,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등 안보문제 논의에는 매우 소극적이었고, 우리가 원하는 이산가족 상봉의 활성화나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 문제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북한인권 문제의 개선도 없으며, 군사적 전용문제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고압적인 자세에 퍼주기나 끌려다니기식의 대북 저자세는 곤란하다는 것이다.¹⁶⁾ 이러한 비판적 입장을 갖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개혁·개방화, 북한의 인권 개선, 평화통일이라는 목표와 가치를 지향하는 데 철저한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 위협과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빌미로

¹⁶⁾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이명박 정부 국정백서 5권』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2013), pp. 54~60.

I
II
III
IV
V

사전에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구현함에 있어서 방법론은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압박적 관여정책(포용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남북관계에 있어서 사전 대가를 요구한 남북정상회담을 거부하였다.¹⁷⁾ 금강산 여성 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금강산 관광을 즉시 중단하였고,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는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 모든 남북 협력사업을 중단하는 '5·24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 UN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 등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대북 인도적 지원도 과거 정부의 '퍼주기'식을 지양하여 종전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은 지원을 하였다. 북핵문제에 관해서는 미국 등과 국제공조 노력을 기울였고,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해서도 주변 국가들과 전략적 대화도 하였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종래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좀 더 세분화하여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등 '3대공동체 통일구상'을 제시하였다.¹⁸⁾ 또한 급변 대비 통일을 생각하게 하는, 통일이 '언젠가 올 것' 또는 '갑자기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통일세' 공론화를 비롯한 통일 자원 마련 추진 등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강조하고, 통일 편익을 강조하는 등 국민들에게 통일 미래비전을 제시

17) 북측이 남북정상회담 조건으로 옥수수 10만 톤, 쌀 40만 톤, 비료 30만 톤, 아스팔트 건설용 피치 1억 달러어치, 북측의 국가개발은행 설립 자본금 100억 달러 등을 요구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시간』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2015), pp. 325~337.

18) 2010년 광복절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것으로, '3대 공동체'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공동체', 남북 간의 포괄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제의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제시하였다. 처음에는 '정치공동체가 먼저 실현된 후 '경제공동체'를 실현한다고 했으나, 최종적으로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는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하였다.¹⁹⁾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핵심 통일전략인 ‘비핵·개방·3000’ 정책이나 원칙 있는 대북정책이 결과적으로 저조한 남북교류협력, 대결적 남북관계와 더불어,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하는 등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는 논란을 낳았다.

이명박 정부처럼 대북관계에서 보수적 성향을 띠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의 기초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도 통일 및 대북정책의 핵심전략으로 ‘신뢰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남북 간에 많은 합의와 약속이 있었지만, 남북관계가 진전과 후퇴를 되풀이하고, 북한의 도발로 위기가 조성되면 타협과 보상이 이루어지고 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북한의 도발과 위기가 조성되는 등 악순환(도발 → 위기 → 타협 → 보상 → 도발)이 되풀이 되는 근본 원인은 남북 간의 ‘신뢰의 부재’에 있다고 보았다. 남북 간에 근본적인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신뢰가 있어야 대화든, 교류든, 협력이든 의미가 있고, 신뢰에 기초해야 북한의 변화와 진정한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²⁰⁾ 남북 간에 신뢰형성을 위해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키며, 호혜적으로 교류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축적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북한이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함으로써 태도변화를 유도하고 협력의 길로 나오게 하는 것도 신뢰 축적의 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진정성 있고 올바른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 형성만이

19)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9월 25일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초청 청와대 녹지원 다과회에서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문단속을 잘 해야 하는 것처럼 남북통일도 평소에 잘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통일준비를 강조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시간』, pp. 363~366.

20) 통일부, 『통일백서 2014』 (서울: 통일부, 2014), pp. 12~15;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6 통일문제이해』, pp. 215~226.

I
II
III
IV
V

상호이익이 된다는 것을 북한에 주지시키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변화를 견인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뢰프로세스’는 실제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원칙을 매우 중시하는 정책으로 나타나고, 안보에 위협을 주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강경한 정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원칙과 압박의 대북정책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겠다. 실제로 출범 전 북한의 3차 핵실험이나 출범 이후 개성공단 잠정중단 사태, 2015년 비무장지대에서의 목침지뢰 도발사태, 2016년의 4차, 5차 핵실험 등에 강경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2013년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 중단조치 이후 재개를 위한 남북협상 시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여 북측으로부터 재발방지와 개성공단의 국제화조치 노력을 약속받고 개성공단을 재개하였으며, 북한의 목침지뢰 도발 사태에 대해서는 북측의 유감 표명을 받아내었으며, 4차 핵실험 때는 전격적인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를 취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강경한 대북 제재조치를 견인해 나갔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에 북핵문제 해결에 ‘의지의 싸움’을 할 정도로 최우선 해결과제로 생각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²¹⁾ 한편 박근혜 정부는 우리가 주도하는 신뢰 프로세스를 위해 2014년 3월 28일 ‘드레스덴 선언(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2014년 8월 15일 ‘환경·민생·문화의 3대 통로’와 2015년 8월 15일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안은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별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

²¹⁾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6월 13일 제20대 국회개원 연설문에서 “이제 북핵문제는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비핵화라는 지난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의지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서는 이명박 정부처럼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강조하였다. 통일편익을 의미하는 ‘통일대박론’이라는 통일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통일준비와 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2차례의 ‘통일 박람회’ 개최나 매년 개최되는 ‘통일교육주간’ 행사 등을 통해 국민들의 통일의를 고양시키는 통일교육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이와 같은 노력은 국민들의 통일의지와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본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장마당 활성화와 외부정보 유입 확대 추세를 활용하여 북한의 내부 변화 유도 노력에 중점을 두는 한편 ‘북한인권법’ 시행과 더불어 국내외적으로 북한인권 개선 촉구 활동에도 역점을 두었다. 또한 과거와 달리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정권과 중간간부 및 주민들을 분리하면서, 북한 중간간부를 겨냥하거나, 북한주민의 탈북을 통한 대한민국 이주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²²⁾ 한편으로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시아대구상’과 비슷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협력을 촉진하여 이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하였으나, 북핵문제와 국제적 여건 미성숙으로 별 성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김영삼 정부나 이명박 정부처럼 북한의 붕괴에 대비하는 급변 통일전략도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신뢰프로세스’로

²²⁾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8월 15일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주민 여러분!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핵과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새로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데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또한 2016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주민 여러분들이 희망의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젠가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였다.

I
II
III
IV
V

요약되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전략은 출범 초 발표한 ‘신뢰프로세스’에서의 희망적 기대와 달리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군사모험주의와 이에 대한 강 대 강의 대결적 대응, 그리고 남북관계 운용과정에서 엄격한 원칙 적용으로 유연성이 부족하여 남북관계는 경직되고 적대적 대결관계로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 역대 정부 통일전략 특징 분석

역대 정부는 대체로 당시의 국제 및 한반도 정세, 북한의 대남전략 및 내부 상황, 남북한 국력의 차이, 안보상황, 남북관계 진전 상황, 국민 여론을 종합한 바탕 위에 최고 리더십의 특성과 결단에 따라 통일 전략을 마련하고 실제 운영되었다. 그리고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이와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점차 규범성보다는 현실가능성이 중시되고, 이전 통일정책들이 보다 발전적으로 계승되고, 구체화되어 왔다.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 통일 전략에 있어서는 변화하지 않는 기본 틀은 유지되면서 당시의 상황과 역대 정부의 성향에 따라 구체적인 접근 방법에는 차별성을 가지고 운용되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론적 기초를 가지고 통일전략을 마련하였다.

우리의 국력이 약하고 국제사회에 영향력이 약했던 시절인 이승만 정부부터 박정희 정부의 초기단계까지는 대한민국을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한 UN의 권위를 빌려 통일을 추구하는 규범적 전략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래서 UN감시하에 자유총선거를 통한 남북한 통일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추구하였다. 물론 소련과 북한의 거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때도 최고 리더십의 성격과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이승만 정부 때는 ‘북진무력통일론’을 주장하였고, 윤보선 정부와 박정희 정부는

‘선 건설 후 통일론’과 ‘평화통일론’을 주장하였다. 동일한 입장을 가진 윤보선 정부와 박정희 정부에 있어서도 전자는 이승만 정부처럼 북한과의 협상불가론을 견지하였으나, 후자는 현실적인 고려하에 북한과 대화있는 대결 입장을 취하였다.

1970년대 들어 미·중간의 데탕트 등 국제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여, 북한지역에 공산정권의 현실적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있는 대결 입장을 취한 박정희 정부는 평화통일의 방법을 고안하면서 인도적 문제 해결, 비정치적 문제 해결,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문제 해결이라는 3단계론을 수립하면서 통일전략에 있어서 기능주의 접근법을 기초로 하였다. 이때부터 그 이후의 정부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공통적으로 기능주의 접근법을 기초로 한 현실적 전략을 취하였다. 물론 기능주의 접근법에 제도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신기능주의 접근이 전두환 정부 시기부터 추가되고, 또한 유럽에서 운용되어지는 군비통제 이론도 전두환 정부 때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여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군비통제 이론은 그 이후의 정부에 공통적으로 이론적 기초로 적용되었다. 북한은 그들의 대남전략에 따라 정치·군사적 문제의 우선 해결을 주장하였으나, 우리 측은 남북 간의 엄연한 분단 및 안보현실을 고려하여 비정치적 문제부터 시작하여 정치적 문제로 접근하는 방법이 현실적이고 타당하다고 하면서 인도적 문제나 비정치적 문제의 우선 해결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남북 간의 팽팽한 주장은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의 의제 설정과정에서 팽팽한 대립을 하다가, 결국에는 타협하여 정치, 군사, 교류협력을 모두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1980년대 말 미·소 데탕트와 공산권이 급격히 무너지는 탈냉전시대에 우리 국력이 상대적으로 북한보다 우위에 있고 우리의 국제적 지위의 향상 등을 배경으로 하여 노태우 정부 때부터 북한에 대해 포용적이

면서 한편으로 공세적인 통일 및 대북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북한을 적대적 대상이면서도 통일의 과정에 동반자라는 이중성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통일방안에 있어서 기존의 이론적 기초에 더해 사회학적 접근방법을 가미하여 민족공동체 형성과 중간단계로서의 남북연합을 설정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마련하였다. 당시의 여야 4당의 동의하에 명실상부한 국민적 합의를 거친 실행력 있고 지속성 있는 통일방안이 되었고 그 이후 정부에 연속적으로 계승되어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이 되었다. 이제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실현하며,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였다. 실천적으로 북한에 대한 공세적인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 포용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화해와 협력, 평화공존, 그리고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향의 통일전략은 상황에 따라 정도의 변용은 있더라도 그 이후 정부의 통일 및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1980년대 말 등장하기 시작한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노태우 정부 말에 이어 김영삼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한 대북정책의 핵심이 되고, 그 이후의 모든 남북관계의 진전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어느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나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특히 대북 경제지원 및 협력) 진전을 연계하는 전략과 병행하는 전략 간에 대립이 있었다. 연계전략은 김영삼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같은 보수적 성향의 정부가 채택하였고, 병행 전략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같은 진보적 성향의 정부가 채택하였다. 그러나 연계든 병행이든 그 어떠한 전략도 결과적으로 북한의 연속적인 핵실험과 미

사일 발사를 저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북한의 내구성과 붕괴 가능성에 대한 입장 차이에 따라 평화 교류와 공존을 거치는 점진적 통일전략과 급변 대비 통일전략이 대비되었다. 1980년대 말 동구 공산권의 연속적인 붕괴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목격하고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이 우려되어 김영삼 정부 시기에 한때 급변 대비 통일전략이 고려되기도 했다. 그리고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및 사망에 따라 20대 후반의 김정은으로 권력세습이 된 때를 전후하여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한때 북한정권의 붕괴에 따른 급변대비 통일전략을 생각하던 때도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외부의 우려와 달리 독특한 체제 나름의 내구성을 유지하고 있어 점진적 통일전략이 기본으로 작동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들어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되기 힘든 통일문제보다는 우선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역점을 두는 대북정책에 집중하면서 유화적 포용정책을 구사하였다. 그리고 같은 성향의 노무현 정부도 유화적 포용정책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유화적 포용정책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출범한 보수적 성향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원칙 있는 포용정책, 압박의 대북정책을 구사하였다. 이와 같이 정책성향이 다른 정부에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 입장과 이에 따른 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론이 다른 대북정책을 구사하였다. 유화적 포용정책이 평화경제론에 일부 기반을 두고 있다면 압박적 포용정책은 민주평화론에 일부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화적 포용정책은 남북경협을 강조하며, 압박적 포용정책은 북한의 민주화, 자유화를 강조한다. 앞으로도 정부의 성향에 따라 대북정책의 방법론상의 차이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역대정부 간 정책상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역대정부의 통일전략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통일 미래국가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I
II
III
IV
V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여 인간의 자유와 복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일과정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튼튼한 안보를 기본 바탕으로 하면서, 남북관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전략과제로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화해와 동질성 증대, 북한의 올바른 변화 유도 등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국내역량 강화와 국제적 지지 확보 노력을 한다는 데 있다. 그리고 역대 정부의 통일전략은 점진적으로 발전해왔고,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 계속 보완되어가고 있다.

다. 역대 정부 통일전략 평가²³⁾

역대 정부는 나름대로 통일을 위하여 70여 년 동안 당시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노력하여 왔지만, 통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없다. 역대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과 통일을 위해 다양한 접근 방법을 구사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통일로 가기 위한 전략적 과제인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민족화해와 동질성 증대, 올바른 방향으로 북한의 변화 유도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그 어떤 정부도 이 전략과제 모두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노태우 정부 이후부터는 핵심 안보과제인 북한 핵문제 해결이 대북정책의 핵심이 되었으며,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난제의 형태로

²³⁾ 홍양호, “한반도 정세 변화속의 새로운 통일전략의 모색,” 『혼돈의 시대! 통일을 논하다』, (여의도연구원 외교안보통일분과 토론회, 2016.10.27.), pp. 34~38.

진행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과 연속적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비대칭 전략무기 능력을 고도화시켜 한반도 안보 현실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관계도 진전과 중단, 협력과 대결이 반복되면서 상호 적대감 해소 및 동질성 증대에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최근에는 상호 적대감이 증대되는 대결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북한체제가 근본적인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국제규범을 지키는 정상국가로 되지 못한 채 불량국가로 잔존하고 있다. 세계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봉건적인 왕조세습국가, 1인 통치 독재국가로 지속되고 있다.

통일 실현 근접이라는 목표 관점에서 보면 역대 정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전략적인, 궁극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북한정권이 김씨 왕조세습 유일 독재체제로서 남조선혁명 전략과 체제 생존적 방어전략에 집착하여 군사국가의 공격적 모험주의와 필사적인 방식으로 체제를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부로부터, 또는 밑으로부터의 자생적인 체제 변화의 힘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치제도상 단임 임기의 정부로서 정책을 실효성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전략적 관점에서 유의미하게 역대 정부의 통일전략을 개괄적으로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승만 정부는 김일성 공산세력의 무력남침을 UN의 도움을 받아 방어해 자유민주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사수하였으나, 국제환경의 한계와 국가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북진무력통일을 주장함으로써 현실성이 부족한 정책을 취했다고 본다. 박정희 정부는 북한보다 열세인 국가능력(군사력·경제력)을 정확히 인식하여 성급한 통일열망보다 '선 건설 후 통일', '선 평화 후 통일'이라는 현실에 바탕한 전략을 세우고 남북관계 관리와 국력의 배양을 우선하는 정책에 집중하

I
II
III
IV
V

여 타당한 전략을 세웠다고 본다. 노태우 정부는 공산권 진영이 무너지는 국제환경의 세계사적 전환과 북한보다 월등한 국력을 전략적 기회로 활용하여 자신감 있게 보다 공세적으로 관여(engagement)적인 통일전략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과감하게 실천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노태우 정부 이후 연속되는 정부는 국제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하고 우리의 국력이 우세하다는 전제하에 개별 정부의 성향에 따라 차별화되는 대북정책을 구사하였다. 대별해보면 노태우·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유화적 포용정책과 김영삼·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원칙적·압박적 포용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로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의 변화 유도에 대한 유효한 정책이라고 선택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형상이 되었다.

현재의 시점에서 새로운 통일전략을 모색하는 데 현실적 의미가 있는 유화적 포용정책과 원칙적 압박정책을 상세히 비교·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유화적 포용정책의 공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체로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시켜 우리의 통일방안의 1단계인 화해·협력단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남북주민 간의 다양한 접촉·교류를 통해 남북 간에 차이를 확인하고 동질성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촉진시켰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보겠다. 이산가족교류의 진전으로 분단의 고통이 다소 해소되는 데 기여하였으며, 대북 인도적 지원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어려운 동포를 도와줌으로써 동포애를 증진시키고 북한주민의 대남 적대의식을 어느 정도 약화시키는 한편 우호적인 의식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었다. 이와 같은 동포애와 우호적인 인식 축적은 남북 사회통합 과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남북 경제 교류협력으로 호혜적인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남북경협을 활성화하여 우리 기업들의 활로를 개척해주는 한편 북한의 대남

경제의존도를 높여 대북정책 추진의 레버리지가 점차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남북주민 간의 빈번한 접촉과 상호 방문으로 우리는 북한의 열악한 경제현실을 파악함으로써 우리체제의 우월성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우리 사회의 풍요로운 발전상이 북한주민에게 알려지면서 북한주민의 잘못된 대남관이 어느 정도 교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세한 경제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선의와 낙관적 기대, 그리고 일방적 지원에 경도됨에 따라 전략적 과제에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반면에, 오히려 북한은 우리가 경제지원한 자원(현금, 쌀, 비료, 원자재, 물품 등)을 가지고 그들의 경제난 해소에 활용하면서 우리가 지원한 자원 일부와 북한의 자체 중요자원은 핵무기 개발 등 군사력 강화에 우선 투입함으로써 북한정권 및 체제 유지와 강화에 역이용당한 꼴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비용 투입 대비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지 못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북한의 변화를 꾀할 만하게 이끌어내지 못하여서 ‘퍼주기’, ‘북한에 끌려다니기’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경제 분야의 지원과 교류의 규모와 속도에 비해 비경제적인 분야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고, 특히 정치·군사적인 분야의 진전은 부진하였다. 특히 전면에서는 화해 및 교류협력의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뒷전에서는 비밀리에 핵,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의 기만적인 행동을 저지하지 못했다.

원칙적·압박적 포용정책의 공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명한 원칙을 강조, 견지함으로써 북한의 위협·협박에 단호히 대응하여 ‘끌려 다니기’, ‘퍼주기’ 논란을 불식시켰다. 그리고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정책에 역이용 당하지 않았다. 그 결과 북한의 위협적이고 기만적인 행동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에 경도되어 있던 국민적 인식을 건강한

안보관, 객관적 북한관도 함께 갖추는 균형 감각을 회복하게 하였다. 그리고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 대북지원의 투명성 강조,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재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규범과 대북정책의 조화를 유지하였다. 국제사회와의 조화로운 공조는 향후 통일외교 추진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그러나 규범적·원칙적인 것을 강조함으로써 유연성은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남북교류협력이 저조 또는 전면 중단되어 통일에 필요한 민족동질성 증진과 남북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들이 약화되었다. 또한 어려운 북한동포를 돕는 인도적인 지원이 약화되어 동포애의 증진 등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사는 활동이 저조하게 되었다. 안보 이슈가 중심이 됨에 따라 남북 간에 군사적 대결구도가 장기화되고 그 결과 통일을 위한 동반자적 요소보다 적적(敵的)인 요소가 강화되어 상호 적대감이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화적 포용정책이든, 원칙적 압박정책이든 기본적으로는 당시의 정세하에 당면한 문제와 전략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느 방법도 통일로 가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적 과제들을 포괄적으로, 선순환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데 역부족이었다고 보겠다. 특히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가졌지만, 북한의 5차례의 핵실험과 수많은 미사일 발사 시험을 저지하지 못하고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안보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면 안보는 나라의 존폐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핵심가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력을 다해 대처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심각한 안보상의 위기가 올 때는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은 부조화가 발생하고, 선순환적인 통일로 가는 길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과 상호 간의 선순환적 작용을 갖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리고 북한이 스스로

근본적으로 올바른 변화의 길을 가지 않을 때는 외부의 노력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제 미·중 패권경쟁의 급변하는 국제정세,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군사적 모험주의와 비대칭 전략무기능력의 고도화, 북한 내부 시장의 활성화와 외부 정보 유입 증대 추세,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개선 촉구 활동 강화 등 달라진 통일환경을 고려하여 통일을 위한 전략적 과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새로운 통일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통일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통일전략의 필요성

가. 통일환경의 새로운 변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통일환경이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다. 첫째, 국제적으로는 미·중 전략경쟁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는 한반도가 속한 동아시아에 새로운 지정학적 위기를 초래함으로써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제한해 왔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미사일 도발 지속이라는 전략적 옵션의 가능성을 조성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s)’ 강조를 통한 공세적인(assertive) 대외정책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시도, 일본의 보통국가화 노력 및 이를 위한 미일동맹의 강화 추세 등도 한반도의 통일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세 차례(2013년 2월, 2016년 1월과 9월)의 핵실험과 수십 차례의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의 현상 변경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I

II

III

IV

V

인해 경제난과 대외적 고립은 더욱 심화되는 추세에 있다.

셋째, 국내적으로도 과거에 비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의 통일에 대한 인식 차이는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또한 대북·통일정책의 목표와 수단 등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고,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함에 따라 한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동북아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고, 북한이 여전히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남북한 간 신뢰도 여전히 부족하다. 하지만 한반도에 나타난 위기국면을 극복하고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통일전략의 장점은 계승하되 새로운 통일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통일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나. 통일 3.0 패러다임의 필요성

지금은 우리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위해 통일 3.0 패러다임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때다. 분단 70년 동안 우리는 분단질서를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수립하려는 다각적 방법을 다양한 노력으로 추구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우리의 통일노력을 패러다임²⁴⁾을 중심으로 살펴볼

24) 패러다임의 사전적 의미는 '전형적인 사고의 틀 또는 패턴'이다. 미국 과학사학자 토마스 쿤(Thomas Kuhn)은 패러다임(paradigm)을 "현상이나 사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 독특한 규칙이나 사고의 체계"로 정의한다. 토마스 쿤, 김명자·홍성욱 역, 『과학혁명의 구조』(서울: 까치글방, 2013); 패러다임은 특정 시대에 사회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을 이해하는 사고의 틀이다. 따라서 주변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며, 결국 지배적인 가치판단 기준 및 성공적 정책 실행을 위한 원리의 변화를 요구한다. 냉전시대에는 냉전시대에 적합한 패러다임이 형성되며, 그 패러다임에 의하여 냉전시대의 지배적인 가치판단 기준과 문제해결 방식이 제안된다. 국제적 정치환경이 냉전시대에서 탈냉전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패러다임이 변화하며,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하여 지배적인 가치판단 기준과 문제해결 방식이 변화하게 된다. 허문영 외,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서울: 통일연구원, 2014), p. 12.

때, 크게 2가지 통일 패러다임 단계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통일 패러다임이란 통일에 관한 존재론과 인식론 및 방법론의 총체를 의미한다. 통일 패러다임은 통일에 관한 지배적인 관념이자 포괄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분단시대 남북한을 지배하고 있었던 통일문제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천적이며 구체적인 일체의 통일방안을 통일 패러다임에 포함할 수 있다. 남북한에 의해 제시되어 왔던 통일정책을 비롯하여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경주해 왔던 총체적인 통일노력도 통일 패러다임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통일은 미래지향적 작업이기 때문에 통일 패러다임에는 통일국가에 관한 미래상도 담겨 있어야 한다. 통일국가의 이념이나 형태, 제도와 문화를 비롯하여 심지어 대외관계까지도 포괄하는 국가공동체 전반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구상과 전망도 담겨져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통일미래상, 통일방안, 통일전략을 통일 패러다임의 핵심 구성요인으로 볼 수 있다.²⁵⁾

첫째는 통일 1.0 패러다임 단계이다. 1950~60년대 냉전기 적대적 대결 통일론의 통일 패러다임이다. 1950년대 한국전쟁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그 결과도 통일이 아닌 분단고착화에 불과한 것임을 깨달았다.

둘째는 통일 2.0 패러다임 단계이다. 1970년대 긴장완화기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탈냉전기를 거쳐 2016년 현재까지의 유화적 대화통일론이다. 1970년대 7·4 공동성명과 제1차 남북대화기, 1980년대 제2차 남북대화기, 1990년대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에 기초한 제3차 남북대화기, 2000년대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10·4 공동성명에 기초한 4차 남북대화

²⁵⁾ 통일담론의 변화와 새로운 통일·대북전략에 대해서는 통일연구원 『통일담론 3.0과 북한변화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5) 참조.

기가 그것이다. 지난 40년 이상의 남북대화 경험을 통해 긴장완화까지는 갈 수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대량 살상 무기개발이라는 결과에 봉착하고 말았다. 1990년대부터 치열하게 전개되어 온 햇볕론(온건론)과 바람론(강경론)은 그 주장의 강열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1990년대부터 필자는 두 논의가 극심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한 틀 속에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전자는 한국정부가 따뜻하게 대해주면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올 것이며 합의통일에 도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후자는 강경하게 밀어붙이면 북한이 밀려서 항복하고 나올 것이고, 안 나오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두 논의는 모두 한국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정책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은 틀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이 독립변인이고, 북한의 정책변화가 종속변인이라고 보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정책변화는 우리 정책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다.²⁶⁾

또한 한반도 분단의 장기화는 남북한이 통일을 위해 개발한 통일 패러다임의 비현실성에서 비롯된다고도 할 수 있다. 현재 통일 패러다임 연구는 전반적으로 남북한 모두 냉전 이후 1990년도 전후로 형성된 2000년대 이전 통일방안 연구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국내 민주화 운동으로 시작한 ‘1987년 체제’를 중심으로 제시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핵심 기조로 통일 패러다임을 현재까지 지속시키고 있다. 북한 역시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 1991년에 발표한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논의를 중심으로 하는 남북한 통일방안에서 머물러

²⁶⁾ 북한의 대남 및 통일정책과 대외정책은 이른바 3대혁명역량의 편성상황과 북한지도부의 정세인식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허문영, “북한의 대남 및 통일정책,” 양성철 엮음, 『북한외교정책』 (서울: 서울프레스, 1995), pp. 131~172; 허문영, “외교정책,” 김영수 엮음,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pp. 407~466.

있다. 남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진행된 동구권의 몰락과 글로벌 시대라는 전환기적인 세계사적 흐름을 배경으로 제시된 한반도 통일방안을 현재까지 진행시켜 오면서 한반도 통일방안에 대한 갈등을 장기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남한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고수하면서 남북한 간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²⁷⁾

다. 새로운 통일전략의 기본방향

이제 정·반·합의 완성단계인 통일 3.0 패러다임을 모색·수립해서 실천해야 할 때다. 통일 3.0 패러다임은 어떤 것일까? 그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창조적으로 : 한민족형 통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냉전체제 하에서 분단·대립해 오던 나라는 모두 4나라였다. 그 중 3나라는 통일을 실현했다. 먼저 베트남은 1975년 북베트남에 의해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을 이뤄냈다. 그러나 전쟁에 의한 무력통일은 국토의 황폐화, 생산시설의 파괴, 막대한 인명 피해 등을 수반하여 주민 간 이질감과 적대감을 증폭한 채 통일후유증을 심각하게 초래했다. 게다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통일은 일당 독재체제하 공포와 빈곤, 부자유의 어려움을 실감하게 하였다. 필자도 1990년대 이후 수차례 방문과정에서 현지실상과 학자들과의 면담에서 이를 느낄 수 있었다.

²⁷⁾ 허문영 외,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p. 13.

그 다음 독일이 1990년 서독에 의해 ‘합의에 의한 편입통일’을 이뤘다. 독일은 통일을 외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통일을 위한 사실상의 준비를 국내외적으로 잘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제2인자 외교(No. 2 Diplomacy, 세계적 차원에서는 미국을, 유럽지역 차원에서는 프랑스의 우위를 먼저 존중해 줌)’를 전개함으로써 제1차·2차 세계대전 주범국의 침략성 잔재를 지우고 우호적 통일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 동서독 관계에서는 기왕의 종교교류를 지속하면서 1973년 관계정상화 이후 우편·통신교류 및 학술·환경·사회·문화·스포츠 등 지속적 사회문화 및 경제 교류협력을 통해 동독주민의 ‘친서독화’를 이뤄내어 결정적인 시기에 평화적인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통일 이후 통합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반성하게 한다. 정치통합은 1년 내 잘 이뤄졌고, 경제통합도 10여 년에 걸쳐 성과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사회문화 통합은 여전히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0여 년 걸릴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현실은 30여 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회의적으로 언급된다.

마지막으로 예멘이 ‘합의통일(1989) 후 내전과 재통일(1994)’ 방식으로 통일을 이뤄냈다. 남북 예멘 지도부는 통일 저항세력의 반발을 우려해 통일협상을 비공개하고 빠른 통일을 단행했으나,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세력들에 의해 정치사회적 혼란과 더불어 내전에 돌입했다.

우리는 분단국 통일 사례 검토를 통해 통일준비를 위한 ‘후발주자’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베트남과 예멘 통일 사례는 물론 독일 통일 사례도 타산지석일 뿐이다. 우리가 반드시 따라 가야 할 모범 사례는 아니다.

그러면 우리 통일방식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우리민족의 통일은 무력통일이 아닌 평화통일로, 일방적 편입통일이 아닌 쌍방적 합의통

일로, 지도부에만 의한 통일이 아닌 국민적 통일로 되어야 함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합의통일에 있어서도 그 수순은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통일이 아닌 문화·사회 → 경제 → 정치 통일 순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온 민족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고, 분단 70여 년 이상 남북이 각각 축적해온 제 분야의 역사적 유산들을 긍정적 차원에서 융합·승화·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 국가통일, 후 국민통합 방식이 아니라 선 국민통합 후 국가통일 방식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변혁적으로 : 공동체적 통일

통일 대한민국은 창의 통일 국가가 되어야 한다. 남한체제 확산론이나 남북한 체제 수렴론을 넘어, 남북한 모두 공동체 지향의 변혁론적 접근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상대방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부터 사랑·정의·평화사회를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다. IMF 경제위기 사태(1997), 북핵위기(2002)와 3차례 북핵 실험(2006, 2009, 2013),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2010), 김정일 사망(2011)과 미·중 패권충돌 가능성(2010년대), 그리고 국토분단 70년과 함께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와 끊임 없는 위협 등 역사적 사실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야 하며 깊은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

동서독 대결에서 서독중심의 통일을 이뤄낸 브란트식 대북정책과 미소냉전대결에서 소련의 붕괴를 이끌어낸 레이건식 대북정책의 한계를 극복한 변혁적 통일정책을 적극 모색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독 브란트수상의 대동독 정책은 접촉을 통한 변화를 시도하였고, 통일이 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대소련 정책은 경쟁을 통한 변화를 모색하였고, 소련의 붕괴와 냉전 해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났다. 햇볕정책은 전자를, 비핵개방 3000 정책을 비롯한 강경정책은 후자를 모방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결과는 모두 한계를 노출했다.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통일(대북)정책방향은 협력을 통한 변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목표에 있어서는 인구대국 중국, 영토대국 러시아, 경제대국 일본, 유일초대국 미국을 넘어 통일 대한민국이 창의대국이 되도록 해보자. 평화대국을 지향하되 군사적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팩스 코리아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기초로 평화를 추구하는 통일 한반도를 지향해보자.

전략에 있어서는 북한 변화 방향과 관련하여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희망적 사고에 기초한 북한 조기 붕괴설은 자제해야 한다. 북한정세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기초로 우리의 통일역량을 제고하며 상황반응적 대책이 아닌 상황주도적 정책을 수립해서 변혁적 통일을 이뤄가야 한다.

수단에 있어서는 제재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관여를 병행하자. 북한의 반응을 얻어내며, 주변 4국과도 협조를 이뤄가야 평화적 통일이 가능하다.

(3) 미래적으로 : 상생적 통일

우리민족의 분단은 3중적 의미가 있다. 한반도 차원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민족분단선이다.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해양세력인 미일 대 대륙세력인 중러의 지정학적 대치선이다. 세계적 차원에서는 유일초강국 미국 대 도전국가인 중국의 패권대결선이 된다. 3중적 해법이 충족될 때, 우리 민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분단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나라가 함께 살게 된다.

따라서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문명사의 흐름을 볼 때, 세계 중심의 대양이 서진해 온 것을 발견할 수 있다. 4세기부터 14세기 중세시대는 지중해가 중심이었다. 문예부흥과 종교개혁 이후 16세기부터 20세기 근세시대는 대서양을 중심으로 문명의 꽃을 피웠다. 그리고 21세기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문명 시대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태평양 인접국가들이 주고받는 무역총액이 대서양 인접국가들의 무역총액을 1996년부터 앞서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한반도는 대륙의 힘이 강할 때에는 대륙의 영향력 하에 머물게 되었고, 해양의 힘이 절대적일 때에는 해양의 속국(일제의 식민지)이 되었다. 그리고 대륙과 해양의 힘이 팽팽하게 대결할 때, 분단국(미일 대 중소 대결구도하의 남북한)으로 전락하였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륙과 해양 세력의 대결구도는 여전하다. 아니 오히려 미국의 21세기 세계패권 유지전략과 중국의 21세기 소강사회건설을 위한 일대일로 전략의 충돌, 그리고 일본의 정상국가를 표방한 군사력 강화 전략과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에 기초한 패권회복 전략으로 인해 마찰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동아시아가 대결과 전쟁으로 퇴락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에 의해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21세기 태평양시대에 우리민족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점에서 대결의 상태로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과 아프리카를 이끌었던 '로마제국'처럼 우리 민족도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통해 '해륙국가'를 이뤄 한반도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인류의 공동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의지를 갖고 통일문제를 진취적으로 풀어내야 한다.

G-8과 G-5를 넘어 G-3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벌이는 것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통일한국을 이뤄 미국·중국과

I
II
III
IV
V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통일한국은 OECD 국가 중 4위 인구인 8000만 독일과 같은 나라가 된다. 통일비용만 우려하고, 분단을 지속하려 할 때가 아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인류사적 소명을 생각해야 한다.

Ⅲ. 통일전략 수립을 위한 새로운 접근



앞서 역대정부의 통일전략 평가와 새로운 통일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최근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는 동북아 정세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군사적 모험주의와 비대칭 전략무기능력의 고도화는 한반도 정세를 급변시키고 있다. 또한 북한 내부 시장의 활성화와 외부 정보 유입 증대 추세, 북한 핵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참과 북한 인권개선 압박 등 변화되고 있는 통일환경을 고려할 때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새로운 통일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 우리정부의 체제 중심적 통일전략에서 벗어난 새로운 통일전략을 제3장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 북한 내부의 외부 정보 유입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북한정권의 인권 침해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인권 개선 요구를 통해 전 인류의 보편적 권리인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한 사안일 것이다.

과거 우리의 통일전략은 남북한 체제통합에 치중하는 정치, 경제적 관점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정치·이념적 대립 약화와 전 세계적 자본주의 확산은 사회적 통합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볼 때 인문학적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인문학은 인간 본연에 대한 근원적 가치와 의미에 집중하는 학문으로 남북한 통일문제에 새롭게 논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통일전략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인문학적 접근법을 통하여 새롭게 우리의 통일전략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 통일 사례에서 한반도 통일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미 독일 통일 사례 연구가 선행되었다고는 하나, 과거 독일 통일의 과정은 한반도 통일 추진과정에서 재고해 볼 수 있다.

I
II
III
IV
V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패권경쟁 구도와 통일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재조명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독일과 한반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분단체제의 특징을 비교하고 서독의 통일전략 수행 과정과 통일과정을 냉철하게 분석함으로써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 그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진화에 대응해 새롭게 통일전략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북한인권 개선을 통한 통일전략

가.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유엔총회에서 11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제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유엔은 2004년 인권위원회의 결의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해 왔고,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를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개선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13년에는 북한인권 침해를 반인도범죄로 규정하고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북한인권 가해자로 지목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권고하는 ‘북한인권조사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국가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미국은 2004년 북한주민의 인권 신장과 탈북자 보호 등을 명시한 북한인권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2008년과 2012년 재승인 법안이 통과되면서 북한인권 문제가 미국사회의 중요 이슈로 부각되었다. 일본도 2006년에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 북한인권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유럽연합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거나 탈북자 증언을 청취하는 북한인권 청문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며, 강도 높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이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북한인권 운동은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적 이슈화와 북한인권 운동 역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북한인권 운동 전개 방안과 실효성 있는 북한인권 개선 방안 모색에 대한 과제도 안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국제사회와 북한인권 단체들의 노력에 비해 북한인권 개선 속도가 더디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 문제의 구조적인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근본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위해 북한인권 운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짚어보아야 한다. 북한인권 문제의 본질과 원인,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면밀히 살피는 노력은 그간의 북한인권 운동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매우 의미있는 과정이다. 따라서 북한인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북한인권 담론에 대한 논의의 확산과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접근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의 특성에 기반한 현실성 있는 북한인권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통일 친화적인 북한인권 개선 전략, 북한인권 운동과 북한 민주화 운동의 결합, 북한주민 우선 북한인권 개선 노력 등과 같은 대안적인 문제인식과 실천과제들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I
II
III
IV
V

나. 인권과 통일 논의의 결합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통일의 궁극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통일정책의 최종 목표는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회복하는 데 있다. 민족공동체의 복원도 필요하고, 남북분단의 극복이나 통일강국의 희망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당면 과제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이다. 북한주민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다운 권리를 향유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반대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은 한반도 통일의 '촉진제'가 될 것이다. 북한주민의 인권 수준이 향상될수록 남북한 통합은 더 용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주민들이 인권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북한의 정상국가화가 실현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증진된 남북한 사회의 동질성이 높아지는 만큼 통일의 가능성도 그만큼 증대될 것이다.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유력한 방법이 바로 통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통일의 주체인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증진 없는 한반도 통일은 통일 이후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반목을 야기할 수 있다. 북한주민의 낮은 인권인식과 민주의식은 남북한 통합의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북한주민의 권리에 대한 자각과 민주화 요구는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진해 한반도 통일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통일의 궁극적 가치 중의 하나가 북한인권 증진이며,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유력한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통일이다.²⁸⁾

인권의 개념과 가치가 한반도 통일에 어떤 의미와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담론적 검토는 통일과 인권의 상관성과 연계성을

²⁸⁾ 김윤태, “북한정권은 통일과 북한인권의 공동장애물,” 『시대정신』, 제71호 (2016), p. 148.

파악하는 데 매우 의미 있다.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통일의 원칙으로는 ‘자주·평화·민주’를 적시하고 있고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는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제시하였다.”²⁹⁾ 통일의 궁극적 가치가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의 향유를 통한 행복추구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는 세계사의 큰 흐름이며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로 정립된 지 이미 오래이다. 한마디로 통일코리아의 기본가치가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인 것이다. 통일이 지향하는 궁극적 가치를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구현과 남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인식은 세계사적 추세와 한반도 통일의 철학과 윤리에도 부합한다. 우리의 통일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회복한다는 조건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 또한 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정립 되어야 한다. 통일한국의 정체성은 남북한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인권통일’에 있다. ‘인권통일’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합치되며, 인류 문명 발전의 자연사적인 흐름에도 부합한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개선되면 될수록 남북한의 친화성이 증대되어 한반도 통일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북한인권 개선을 통한 통일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통일담론을 확장해야 한다. 북한인권 담론의 확장을 통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²⁹⁾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통일부 통일교육원, <<https://www.uniedu.go.kr/uniedu/home/brd/bbsatcl/nsrel/view.do?id=16206&mid=SM00000534>>. (검색일: 2017.1.15.)

I
II
III
IV
V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인권 운동이 언론이나 특정 대상을 상대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인권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이슈들과 연계하여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 북한인권 담론의 확장을 위해서는 ‘통일과 인권’을 결합시키거나, ‘인권과 북한 민주화’가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이 다르지 않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북한인권 담론의 확산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통일과 인권에 관한 통합론적인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사회에서 ‘통일’과 ‘북한인권’을 연관시켜 생각하는 논의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 개선을 통일 논의와 결합하기 위한 NGO들의 활동 노력들도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사)북한인권시민연합의 ‘2015뷰티풀드림 콘서트’나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2015 북한인권 국제영화제’ 등의 개최는 북한인권 문제를 대중적인 문화콘텐츠를 통해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서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높이 평가된다. 행사규모나 참석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행사내용 및 행사진행 수준도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 담론을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통일 이슈와 결합하여 진행한 ‘통일서포터즈’, ‘통일아카데미’, ‘통일가요제’ 등의 개최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권과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를 한반도 통일과 연계하여 접근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과도기 정의란, 권위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체제 전환국 또는 분단국가들에 새로운 체제가 들어설 경우, 과거 체제 하에서 행해진 각종 인권유린 범죄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국가에 의해 인권유린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통일 이후 북한의

인권범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정치화합과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과도기 정의 기제는 일반적으로 사법적 정의와 비사법적 정의를 포괄한다.³⁰⁾ 반인도범죄 등 심각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차원에서 형사처벌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경미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비사법적인 차원에서 진실 규명을 통해 보다 더 큰 맥락에서의 화해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통일 초기 정치적 불안정이 우려되는 조건에서 과거의 인권 범죄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진상규명은 철저히 하되 법적 처벌은 최소화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국민통합을 위해 과거의 인권침해 행위를 적당히 덮어두고 가자는 것도 문제이다. 과거청산을 제대로 마무리 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사회갈등과 법적갈등을 야기해 국민통합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통일독일이 법치국가의 원리에 근거해서 과거청산을 철저하게 진행했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아르헨티나가 진실규명에 입각한 화해와 통합을 중시하였던 점을 모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과거청산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미래지향적인 견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청산은 법적 처벌 자체가 목표가 아닌, 국민통합의 실현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과거사 청산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법에 의한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북한인권의 견지에서 보면 과도기 정의의 실현은 통일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논의 과제이다. 인권과 통일 담론의 확장을 위해서도 과도기 정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I
II
III
IV
V

³⁰⁾ 김수암 외, 『한반도에 있어서 과도기 정의』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 29.

다. 통일친화적인 북한인권 개선 전략

북한인권 문제의 본질이 북한체제와 정권의 문제라고 볼 때, 북한의 정상국가화 과정 없이는 북한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은 요원하다. 북한의 민주화가 달성되지 않는 이상 북한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다. 북한인권 문제의 개선은 남북한의 체제와 문화의 친화성을 증대시켜 한반도 통일을 위한 토대 구축에 기여한다. 북한 당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한인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북한 내부에서부터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전략과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북한인권 개선 노력도 이제 북한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문제를 새로운 이슈로 삼아야 할 때가 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과 민주화, 한반도 통일 논의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 보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민주화 없는 북한주민의 근본적인 인권개선이 어렵고, 현실적인 통일 논의도 불가능하다. 북한문제의 본질이 북한의 정권과 체제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해법을 찾을 수 없다. 결국 북한인권 개선 노력이 북한의 민주화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통일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통일과 북한인권에 대한 연계는 두 가지 과제 모두 그 결정적 장애물이 북한정권이다. 한반도 통일의 결정적 장애물도 북한정권이고,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행위 주체도 북한정권이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이 존속되는 한 한반도 통일 논의와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김정은 없는 북한’, ‘김정은 이후의 북한’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의 개선 없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 공존을 위한 공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남북관계는 북한체제의 안정에 기여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칙 없는 남북관계는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 여부에 따라 부침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고 중국에는 북핵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핵전력의 고도화와 완성화 단계로 진입하려하는 조건에서 핵개발이 북한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반인권적 형태임을 문제 제기해야 한다. 대북 인권압박을 통한 핵개발의 명분과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연계전략이 요구된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핵 포기는 북한을 정상국가로 나아가게 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기에 이 과정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된다. 통일논의의 진척을 위해서도 북한인권 문제 제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합의에 의한 평화적인 방식의 통일을 지향한다고 볼 때, 현재의 수령독재 체제와는 통일이 불가능하다.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 없이 한반도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 변화를 통한 인권침해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야 한다.³¹⁾ 인권을 대북정책에서 분리하거나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오히려 핵심적 가치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대북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³²⁾ 북한인권 개선 노력은 한반도 통일과의 친화성을 증대시켜 통일기반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북한주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의식이 높아질수록 통일은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며, 통일과정의 혼란도 줄일 수 있다.

31)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 54.

32) 위의 책, p. 47.

I
II
III
IV
V

라. 북한인권 개선을 통한 한반도 통일전략

(1) 북한주민 우선의 북한인권 개선 전략

북한당국은 수십 년 동안 이상화 교육을 실시했다. 북한주민에게 인간의 보편적 권리 의식을 교육하지 않았다. 북한주민은 당국으로부터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면서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가 심각한 것은 북한당국이 북한주민을 감시와 폭력으로 억압하고 학대할 뿐 아니라,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자체를 박탈했기 때문이다. 북한 내부로부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북한주민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것이다. 북한주민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 북한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외부 사회의 실상, 북한사회에 대한 비판적 안목, 자기 권리에 대한 이해, 북한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을 담은 다양한 콘텐츠를 북한주민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주목해야 할 새로운 이슈 가운데 하나는 북한주민의 인권의식을 높여, 북한 사회의 변화를 끌어내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인권 개선 노력이 외부 압박에만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 외부의 지원만이 아닌 북한 내부의 변화 움직임이 결합될 때 북한인권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 북한인권 개선의 실질적 주체는 북한주민이다. 때문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해법도 북한주민들 스스로가 나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북한주민을 인권개선의 주체로 내세우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의 인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노력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북한정권이 아닌 '북한주민우선'의 원칙에 기반하여야 한다. 결국 북한인권 개선은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는 노력이어

야 한다. 북한인권 개선의 주체인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 제고와 북한 내부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주민의 권리에 대한 자각과 자유에 대한 열망,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작지만 의미있는 노력들이 북한인권과 한반도 통일의 희망이다. 북한인권과 통일 논의의 주체는 ‘북한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주민은 권리의 객체가 아닌, 권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북한인권 문제 해결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북한인권과 통일 실현을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주민들이 인권개선과 통일운동의 주체가 되게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인권 운동은 북한주민들을 인권개선의 수혜자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의 성장이 동반되어야 한다. 북한인권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북한주민을 북한인권과 통일 논의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서는 권리의식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주민들의 권리에 대한 자각, 즉 인권 및 민주주의 의식의 함양이 중요한 과제이다. 북한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하려 할 때, 북한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통일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지원해야 한다. 북한주민들은 초보적인 수준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이고, 자신의 권리를 내놓고 주장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그러나 이금순(2010)과 홍우택(2009)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난 이후 북한주민들의 권리개념이 경제적 측면에서 미약하나마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외부와의 비교기회를 가짐으로서 초보적인 수준에서나마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자각하는 계기를

I
II
III
IV
V

갖게 되었다고 한다.³³⁾ 이러한 변화는 향후 북한에서 정치적 저항과 사회운동이 태동할 수 있는 맹아적 토대가 될 수 있다. 결핍과 불만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공동의 이익실현을 위해 행동에 나서게 된다. 다만 북한은 불평과 불만이 원자화, 내면화 되어 있어 이를 조직화하여 이끌 수 있는 대안세력이 없는 조건에서 집합이념과 집합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당분간은 쉽지 않다.

그러나 북한 내에 지배엘리트의 분열과 권력투쟁, 조선노동당의 형해화(形骸化)와 권력기구 약화, 경제적 곤궁과 시장 확산, 정보유입에 따른 의식변화와 불만 확산 등과 같은 질적 변화를 추동하는 미시적 변화가 지속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수령절대독재와 북한의 자유화, 민주화, 시장화는 양립할 수 없다. ‘최소한’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허용이 있을 때 북한 내에도 정치적 저항과 사회운동의 여지가 마련될 수 있다. 시장경제화는 북한주민의 경제적 권리에 대한 자각과 욕구를 증대시켜 정치적 저항과 사회운동의 토대가 될 것이다. 개혁개방의 절박함과 시장 확대의 필요성을 적절히 자극한다면 북한 내 경제적 자유 증진에 일정한 변화가 추동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제화는 북한주민의 경제적 권리에 대한 자각과 욕구를 증대시켜 정치적 저항과 사회운동의 토대가 될 것이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의 다양성과 다원성이 증대되어야 정치적 저항과 사회운동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대부분의 체제전환국들이 그랬듯 사회변동의 시기에 친목모임이나 이익집단의 결성과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적극 활용한다면 이를 통한

33) 이금순, 『북한주민 인권인식 실태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10); 홍우택,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인권외교의 방향』(서울: 통일연구원, 2009). 김윤태 “1990년대 식량난 이후 북한주민의 생애경험이 인권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pp. 58~59에서 재인용.

정치적 저항과 사회운동이 확산될 수 있다면 낮은 수준이나마 시민사회의 형성으로 갈 수 있다.

(2) 시장화 촉진을 통한 권리의식의 강화

북한주민의 인권의식의 형성을 위해서는 북한의 시장화 촉진과 연계된 북한인권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1990년대 중후반의 대량 아사를 겪은 북한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자신들의 생존을 의존해 왔다. 북한주민들에게 시장은 없어서는 안 될 생계의 터전이다. 또한 시장은 북한주민들이 제한적이거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내부 정보유통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시장화의 진척은 북한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하나의 단초가 되고 있으며, 북한주민의 경제적 권리를 일깨우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초보적인 수준이나마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공받기 시작하였다. 북한주민들은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북한 내의 시장화가 강화될수록 북한주민들의 소유욕과 경제적 권리에 대한 욕구는 증대되어 개인주의와 권리의식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의 존재는 북한주민들에게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³⁴⁾

³⁴⁾ 북한의 시장은 1950년대부터 존재하던 '농민시장'이 변화하여 2003년 5월 이후 '종합시장'으로 공식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까지 시민들의 생활권역별로 농민시장이 10일마다 하루씩 열려 식량을 제외한 농산물에 한정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농민시장은 1990년대 중반 국가의 식량공급이 사라졌던 시기에 시민들이 먹을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비공식적 상설시장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2003년에 북한정부가 이미 상설화된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인정하였다. 현재 북한에는 25개 시와 147개 군, 33개 구역, 그리고 2개의 구와 2개의 지구, 267개 노동자구에 각각 최소 1개소에서 많게는 4~5개의 종합시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 '장마당'이란 본래 '농민시장'이 10일마다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시장의 동향과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들을 직접 상대로 한 시장화 지원 방안이 무엇이며, 북한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 일례로 시장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돈주의 경우 중국을 비롯한 국제 곡물가나 환율 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중국을 오가는 무역상들이나 밀수꾼들의 경우 북·중 국경상황이나 시장·경제 정보 전반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이러한 경제 및 시장에 대한 정보들을 북한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권리나 요구를 증대시켜 시장의 활성화와 확대를 촉진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단은 민간차원의 대북방송이나 북·중 국경지역을 통해 시장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인적 접촉이 증대할 경우에도 각종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민되어야 한다. 북한주민들이 시장에 참여할 기회가 많을수록 경제적 권리에 대한 각성의 계기는 그만큼 늘어난다. 북한주민들의 시장참여는 자본주의적 가치관 확산으로 이어져 북한사회를 아래로부터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시장이 확산될수록 북한주민들의 권리의식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북한의 시장화가 북한주민의 의식변화 특히 인권의식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 북한의 통제체제의 이완이 발생하면 이를 계기로 북한의 시장화 확산을 북한인권 운동과 연결시키기 위한 논의와 실천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향후 남북대화 모드나 북중관계의 복원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이를 계기로 북한의 개혁개방 흐름과 시장화 확산

개설되는 장소를 일컫는 말이다. 지금은 상설시장이 설치된 '종합시장'을 장마당이라고 부른다.

과 연계시키기 위한 북한인권 개선 전략도 고민되어야 한다. 남북경협이나 인도지원 시 인권 문제와 연계시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의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절대적 비중이 중국산이다. 북한시장에 한국산이나 일본산 등의 해외물품들의 유통이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만약에 북한의 시장에서 개성공단 제품이나 대북지원 물품 등이 비공식적으로나마 자유롭게 유통만 될 수 있다면,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 확대 자체가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변화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의 시장화가 극단적 기아상태와 빈곤을 막아 역설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화 확산이 북한의 체제불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시장 확대에 따른 경제적 과실이 정치적 순응을 낳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시장화는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경제적 권리에 대한 주장의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정치 저항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장에는 북한의 시장화 진척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일과 체제전환 또는 사회변동의 시기에 대비한 시장화 지원 방안(프로그램) 등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다. 향후 북한체제의 변동이나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다양한 시도들은 북한의 시장화 지원을 정책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북한 내의 시장화 확산은 남북한을 시장친화적인 경제시스템으로의 통합을 촉진시켜 남북한 경제통합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유익하다. 북한의 계획경제는 반시장적일 뿐만 아니라 반통일적인 경제시스템이다. 남북한이 통일을 지향한다고 할 때 북한의 기형적인 경제제도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북한의 경제시스템은 국가가 아닌 수령 개인과 그 가계들에 의해 생산수단이 장악되어

I
II
III
IV
V

있는 기형적인 구조이다. 한마디로 북한의 경제시스템은 ‘수령경제’ 시스템이다. 수령경제와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방식의 통일경제는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다. 북한의 수령경제 시스템을 걷어내지 않고는 남북한의 통일경제를 논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북한을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시장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통일준비의 원활함이나 통일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도 북한의 시장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북한의 시장화 확산을 위해서는 시장화를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불특정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다양한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에게 대북 라디오방송, USB 메모리카드, 유인물, CD(또는 DVD) 등을 통해 국제 물가, 환율정보, 시장경제의 원리, 그리고 구체적인 소기업 운영방법과 성공사례, 부정부패 척결문제 등 외부의 경제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민간 차원의 대북라디오 방송이나 대북전단, 국경을 통한 직접 보급 등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은 단기간에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북한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시장의 건전성을 조금씩 확보해 가는 데에는 기여 할 수 있다. 둘째, 중국체류 북한인(무역일꾼, 친척방문자) 및 북한거주 중국인(화교)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우선 국제기구나 중국 정부 차원에서 중국 내 체류 중인 북한인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시장경제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나, 가능하다면 무역이나 장사를 위해 합법적으로 중국에 와 있는 무역일꾼들과 중국에 있는 친척들을 방문하기 위해 체류 중인 친척방문자들을 대상으로 민간 차원에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시장활동에 관한

교육(시장 경제의 운영 원리, 창업 및 소기업 운영 방법, 수공업에 필요한 기술 교육,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교육, 북한 경제의 발전 방향 및 자신들의 역할에 관한 토론 등)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향후 북한의 시장화를 활성화를 위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국 국적자에 대한 시장교육의 실천 프로그램으로 '마이크로 파이낸싱(Micro-Financing, 소액신용대출)'³⁵⁾의 시범적 운영을 검토할 수 있다. 시장경제 교육에 참여한 북한 거주자를 상대로 일정금액의 소액대출을 하여 북한에서 보다 큰 규모의 장사나 기계를 활용한 소규모 공장제 수공업을 일으키도록 돕는 것이다. 물론 이 프로그램은 수혜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요구해야 한다. 일정기간 경과 후에 반드시 대출금을 갚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출금의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중국에서 멘토링과 프로그램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사업은 북한의 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외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축적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북한의 시장화에 외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측면이 매우 제한적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장화를 통한 북한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노력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주민의 중심의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북한인권 개선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 외부정보 유입·유통을 통한 정보자유 확대

북한주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부 정보 유입과 북한 내부에서의 외부정보 유통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북한을 상대로 한 외부정보 유입 및 확산 노력은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와 권리의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주민들이

³⁵⁾ 김운태, “북한정권은 통일과 북한인권의 공동장애물,” p. 154.

I
II
III
IV
V

외부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환경을 조성해, 그들 스스로가 권리를 자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북한인권 개선은 북한주민 스스로가 주체로 나설 때 가능하다. 북한사회의 변화를 아래로부터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외부정보의 확산을 통한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가 동반되어야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기회의 확대는 인권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권리에 대한 옹호의지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주민들에게 외부세계와의 비교의식이 높아지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내면화가 이루어진다면 인권과 민주주의 의식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 내 한류문화 확산 및 친한의식 강화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북한정권은 발전한 남한의 존재 자체를 가장 두려워한다. 외부정보가 유입되면 북한주민들이 한국의 발전상을 알게 되고 동경하기 마련이다. 드라마와 영화, 음악을 통해 진행되는 ‘북한판 한류문화’의 확산은 정치의식 성장으로 바로 나가지 못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 틀림없다. 북한판 한류의 확산이 북한주민들에게 상대적 우위에 있는 남한의 존재와 발전상을 인지시켜 북한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으로서는 남한의 존재 자체가 대단히 큰 위협요인이고 이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역으로 북한주민의 정서적 반발을 초래해 정치적 저항감을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북한주민들에게 외부세계와의 비교기회가 확대되면 될수록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각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이해의 기회 또한 많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내부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한류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정보 소비자인 북한주민들의 입맛에 맞는 유의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더불어 북한주민들이 이러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매체들을 대거 배포하는 노력도 견주되어야 한다.

표 III-1 1990년대 중반 이후 외부정보 유입 방법

외부유입방법		외부정보 유입내용
북중 국경 지역	탈북 후 귀환자(자진/ 강제송환)	•식량난 등으로 탈북 후 중국에서 들은 외부정보 등을 가족·지인들에게 전파
	공식·비공식 무역 종사자	•공식 및 비공식 무역(밀수)을 통해서 들은 정보가 유입되고 이 과정에서 중국 휴대폰을 통한 상시적 정보가 상호유통 •공식 및 비공식무역(밀수)을 통해서 다양한 미디어 기기와 외부영상매체와 한국드라마·영화를 포함한 외국영상물의 공식적/비공식적 유입 •북한 내 화교를 통한 정기적인 최신 정보의 유입 및 유통
	재중 방문자	•재중 친척방문자·유학생·노동자 등을 통한 외부세계 간 접경험 •일시 귀국 시 다양한 외부정보를 유입하고 이를 가족/지인들에게 전파
다양한 미디어	영상저장매체	•CD/VCD/USB/DVD를 통한 외국영상물의 유입(주로 한국 영화, 노래, 드라마 등)
	미디어 플레이어	•MP3/MP4/MP5, 노트북 및 넷북 등 영상매체 플레이어의 유입을 통한 외부영상물의 북한 내 확산
	외부라디오/ TV	•한국 및 외국의 라디오(단파·중파) 수신을 통한 정보유입 •한국 및 중국방송(연변조선말방송)의 북한 일부지역 수신을 통한 외부정보 유입
인적 접촉	한국과의 직간접 접촉	•한국 입국 탈북자 약 3만 명을 통한 송금·뉴스 통한 외부 정보 유입 •남북한의 직접접촉에 따른 간접적 외부정보 유입

출처: 오경섭 외, 『북한 내 정보유입실태조사』, (서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2011), p. 26.

표 III-2 북한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촉 수단

매 체	국방연구원	북한인권정보센터	인터넷미디어(복수응답)
라디오	15.5%	14.1%	18%
DVD, CD 등	21.8%	37.2%	39%
TV	18.3%	11.6%	17%
구전	17.6% (중국사람)	22.4%	84%
전단	5.6%	5.9%	-
기타	14.4%	8.8%	10%
계	100%	100%	-

출처: 사단법인 남북언론연구회, 『대북방송 백서 2013』 (서울: 사단법인 남북언론연구회, 2013), p. 90.

북한주민들을 상대로 한 ‘외부정보의 전파’는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발하여 북한주민들을 통일과 인권의 주체로 나서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북한의 정보화는 북한주민의 눈과 귀를 트이게 하여 북한주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권리의식을 키우는 계기가 된다. 민주주의 운동의 국제적 경험 속에서 폐쇄된 국가에서의 정보 확산은 사회 전체를 아래로부터 변화시키는 매우 강력한 동력이 된다는 사실은 널리 입증되었다. 대북정보 자유화 촉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북심리전 방송이나 대북전단 배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역할 분담 차원에서 민간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대북선전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차원의 대북 라디오 방송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보인다. 현재 민간 대북 라디오 방송사들은 해외에 위치한 송신소에서 값 비싼 주파수를 임대하여 단파로 대북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그러나 송신소가 멀고 주파수의 출력량의 부족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높지 않다. 정부가 국내에서 중파 방송이 가능하도록 송신소와 주파수 문제의 어려움을 해소해 준다면 그 효과가 크게 강화될 것이다. AM중파를 임대하거나 제공하여 민간 대북 방송사가 겪고 있는 재정 및 주파수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그 외 대북 TV방송, 대북전단 배포, 휴전선 인근 대북 심리전 방송 강화 등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들의 USB 배포 지원, 미국 정부 및 구글(Google) 등과 협의하여 무료 위성 인터넷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남북교류나 협력을 북한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III-3 대북방송 현황

구분	방송사명	송출시기	기타사항	
국내	민간방송	KBS한민족방송	1948년	2007년 사회교육방송으로 개칭. 한반도와 주변국 정세전망, 한국의 경제, 문화, 스포츠 소식
		국민통일방송	2015년	구)열린북한방송과 구)자유조선방송이 2015년에 합병하여 창립함.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
		자유북한방송	2005년	탈북자가 운영. KBS한민족방송의 전신인 사회교육방송이 진행한 내용을 상당부분 포함
		북한개혁방송	2007년	탈북자가 운영. 개혁강좌'를 정치, 경제, 사회문화로 나누어서 강좌를 진행하며,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을 소개
	종교방송	순교자의소리	2008년	국제기독교단체 '순교자의 소리'가 운영
		광야의소리	2006년	북한선교단체 '모퉁이들 선교회'가 운영
		북방선교방송	1995년	초교과 방송 선교단체
		희망의소리	1956년	'재림교회 세계대총회'가 운영
국외	미국	미국의소리방송	1942년	2000년대 들어 송출시간확대. 주로 뉴스로 편성.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를 제작방송
		자유아시아방송	1997년	미국의회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국제방송사. 정보전달을 기본으로 삼고 있음.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이 대부분
	일본	시오카제	2005년	북한에 납치된 일본 피해자를 위한 방송
		고향의바람	2007년	일본 내각 산하 '납치대책본부'가 운영주체

출처: 김익환, “대북 라디오 방송청취 실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논문, 2010), p. 15. 내용 일부 수정.

북한주민들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북한주민들의 정보접촉이 가능한 한민족 방송 등과 같은 공영방송을 보다 대북방송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한민족 방송의 경우 주파수의 출력이 높아 여타의 다른 방송보다 북한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청취할 수 있다. 한민

I
II
III
IV
V

족방송의 방송 방향과 주요 콘텐츠를 북한주민의 눈높이와 요구에 맞게 재정비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민족 방송을 북한주민 친화적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민간 대북 방송의 라디오 주파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현재 한국에는 국민통일방송(前자유조선방송, 열린북한방송)을 비롯한 북한개혁방송과 자유북한방송 등 3개의 민간 대북 방송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 방송의 경우 방송의 내용과 콘텐츠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방송을 만들어 송출하고 있지만, 낮은 주파수 출력 문제로 북한주민들이 용이하게 청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정부가 민간 대북 방송사에게 200~300kw 상당의 AM 주파수를 제공한다면 북한주민의 청취율을 상당한 수준으로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디오를 통한 외부정보의 유입과 확산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대북 방송사들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대북 위성방송을 송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북한주민들의 경우 대다수가 한국 드라마나 영화, 음악 등에 친숙하게 동화되어 있다. 한국의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의류, 악세사리 등 한류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감안할 때 북한주민들이 한국의 위성방송과 같은 영상물을 상시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국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위성 안테나와 셋톱박스의 보급이나, 북한주민 맞춤형 영상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송출은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북한 내 정보기기 유통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좀 더 저렴하고 소형화된 다양한 정보매체들을 개발하고 제작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 북한 내에 디지털 정보기기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도 부합한다. 300만 대가 넘는 이동전화 가입의 증대로

지역 간 정보 단절이 완화되고 있고, CD·USB·DVD 기기의 보급으로 정보확산의 속도와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외부 정보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는 라디오나 위성 단말기의 보급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에 매우 중요한 매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의 정보자유 확대 노력은 북한주민의 자유에 대한 갈망과 권리의식을 일깨워 북한 인권 개선의 주체로, 미래 한반도 통일의 주역으로 설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실천과제이다.

마. 통일친화적인 북한인권 개선 노력

북한의 변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개개인의 권리의식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상의 혁명’이 동반되어야 한다. 북한 변화의 주체는 북한주민이며, 변화를 촉진하는 힘과 동력도 북한주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물론 외부의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와 북한 내 변화를 추구하는 대안세력의 형성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주민의 의식 성장과 북한 내 변화 주도세력의 형성 없이는 북한의 자유화와 민주화, 시장화는 지속성과 대안성을 갖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의 북한체제가 변화를 거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정기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향후 북한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변화를 하든 변화의 시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치적 자유나 민주주의, 시장경제화를 수용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치·사회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정권의 변화 여부와 무관하게 지금부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리하는 정책과제가 아닌 일관

되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인권의 가치와 정책과제들이 통일 및 대북정책 전반에 적극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과제 내 북한인권 정책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져야 한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전반에 인권의 가치를 주류화(main-streaming)할 필요가 있다.³⁶⁾ 통일친화적인 북한인권 개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과 북한인권 개선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인권친화적인 한반도 통일정책 수립과 통일지향적인 북한인권 개선 노력들을 병행하는 전략과 로드맵이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정책과 북한인권 개선 전략과의 상보성(相補性) 및 연계성(連繫性)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북한의 시장화와 정보화는 북한사회 전반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의 친화성을 증대시켜 통일 친화적인 사회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통일 친화적인 북한인권 개선 노력은 북한주민들의 권리의식을 깨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2.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통일전략³⁷⁾

가. 통일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의 의의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학문이자, 근원적 가치와 의미에 주목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문학은 인간 삶의 조건에 대한

³⁶⁾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p. 38.

³⁷⁾ 김종균(건국대학교) 교수의 원고를 바탕으로 정리·재구성 하였음.

냉철한 인식과 비판적 성찰을 추구한다. 그런데 이러한 인문학은 그동안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문제에 쉽사리 접근할 수 없었다. 분단과 통일의 문제는 특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들이기에, 인문학보다 정치학·경제학·사회학 등과 같은 사회과학이 더 적합하다는 일반적 인식이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의 통일전략 역시 대체적으로 남북의 정치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삼는 체제통합, 나아가 이를 위한 남북의 현안 정책들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1980년대 냉전적 반공논리가 조금씩 사라지고 1990년대 독일의 통일과 함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논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자, 인문학 영역에서의 통일논의 역시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렇게 등장한 인문학적 통일담론 역시 통일에 대한 당위적 또는 낭만적 이해에 머물고 말았다. 이를테면 “통일문학의 형상화나 통일운동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인문학에서의 통일논의들은 원민족적인 동질성이라는 정서에 근거하여 동질성의 회복이라는 신화로 회귀하거나 단일민족국가의 건설이라는 당위를 전제하였다.”³⁸⁾

이런 점에서 기존 통일전략이 갖는 한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³⁹⁾

첫째, 이제까지의 통일전략은 통일의 당위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인 효과를 확산하고 대중적 설득력을 가져오는 데 부족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분단 70여 년 동안 통일의 민족사적 당위성에 대한 주입식 교육은 남북사회에서 강도 높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정작 분단극복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과 관심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통일의 당위성은 추상적 당위성이 아니라

³⁸⁾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편, 『통일에 대한 인문학적 패러다임』 (서울: 도서출판선인, 2011), p. 17.

³⁹⁾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편, 『통일인문학』 (서울: 알렘, 2015), pp. 5~7.

I
II
III
IV
V

분단의 구체적 고통에서 비롯된다. 더구나 분단의 고통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우리 생활세계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다.

둘째, 기존의 통일전략은 체제통합에 치중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사회통합적 차원에 대한 연구는 이제 초창기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물론 통일은 서로 다른 두 국가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정치경제적 문제가 핵심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단 현실의 증층성과 다면성을 염두에 둘 때, 정치경제가 본질이고 사회문화는 부수적이라는 체제통합에 대한 우선적 시각은 냉전체제로부터 시작되고 자생적인 매커니즘 속에서 발전해 온 강고한 분단질서를 깨뜨릴 수 없다. 특히 한반도는 체제갈등이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비화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제통합을 지향하는 통일전략이 쟁점화될수록 오히려 통일에서 멀어질 우려가 있다.

셋째, 기존 통일전략은 민족동질성 회복론이나 부국강병적 민족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변화된 21세기의 전지구적 문화지형에 걸맞는 범세계적 시야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질성 회복론’은 다양한 정체성을 억압하는 획일주의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부국강병론’은 한반도의 주변강대국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

넷째, 기존 통일전략은 남북의 통일을 항상 하나의 ‘완결된 결과’로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는 점이다. 통일 이후에도 동서독 간의 사회문화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통일이 남북의 모든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 오히려 통일은 남북이 분단 70여 년 동안 만들어 낸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상호이질적인 두 집단이 인정과 공존을 통해 지속적으로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

위와 같은 기존 통일전략의 한계들은 ‘통일’과 ‘인문학’의 만남, 즉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통일전략 모색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 있어서 인문학적 연구들이 보여 왔던 추상성을 지적하면서 당장의 현실적인 정치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는 비판들 역시 존재한다. 실제로 인문학이 자칫 빠질 수 있는 한계는 당위적인 옳고 그름과 선악 등 추상적인 가치만을 강조할 때 발생한다. 인간다움의 의미와 가치탐구에만 치중한 나머지, 그러한 가치의 모색이 향하는 인간다움의 실천을 위한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요소를 미처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문학은 정치·경제·법·제도와 같은 장치들을 넘어서 인간의 정서와 감정, 생활양식과 문화, 가치와 이념들을 그들 삶의 배경 속에서 성찰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 또한 인문학은 단순히 학문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문적 가치와 의미들을 구체적인 사회현실 속에서 정립하는 ‘실천적인 학문’을 이상향으로 갖는다. 이런 점에서 통일문제와 연관되어 인문학은 “인간다움, 인간성을 형성하는 사유함, 이성의 자기 비판적인 의식 활동일 뿐만 아니라 역사를 창조해 가는 인간 자신의 비판적이고 실천적인 학문활동”⁴⁰⁾인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통일담론 내지 통일전략 역시 인간의 삶을 총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통일은 분명 남북 주민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통일 자체가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 통일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분단 상황이 남북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구조적으로 위협하기 때문”⁴¹⁾이다. 통일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은 우선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남북한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이자 자유와

40)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편, 『인문학자의 통일사유』 (서울: 도서출판선인, 2010), p. 15.

41)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편, 『통일에 대한 인문학적 패러다임』, p. 62.

I
II
III
IV
V

평등, 인권과 민주주의와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회로서 이해한다.

하지만 인문학이 통일이라는 실천적 과제와 전면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의 전유물'로 간주되었던 '체제-제도 통합'의 관점을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인문학 내부에서 자기 극복의 성찰 또한 수행되어야 한다. 그간 인문학이 자기 스스로 실천적 삶의 장으로부터 후퇴하여 텍스트 내부의 이론적 장으로만 몰입해 들어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상적 이론과 가치의 탐색에 머무는 인문학이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 적용 가능하고 일상생활에서 작동 가능한 인문학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인문학적 시각은 통일을 분단구조가 만들어 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상태로 남북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통일전략의 핵심은 서로 이질적인 체제, 제도, 이념 속에서 살아온 두 집단이 서로 '소통'함으로써, 분단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새로운 민족공동체로의 '통합'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²⁾

이렇게 볼 때 통일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 갖는 의의와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모색할 수 있는 통일의 개념적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 대체로 그동안 통일은 분단이 초래한 남북 이질화를 극복하고 남북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과제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질적인 타자를 전제로 하지 않는 통일은 차이와 공존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우려가 크다. 우리

42)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편, 『통일인문학』, p. 8.

가 익히 확인할 수 있듯이, 남과 북은 함께할 수 있지만 단 시간 내에 하나가 될 수 없는 타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서로의 타자성을 인정할 때에만 통일은 동질화의 폭력이 아니라 평화의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통일의 진정한 의미는 남북 간의 공통적 요소를 찾고 만들어 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타자성을 인정하면서 공존이라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새롭게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통일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은 통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하고 생성하는 데 적합하다.

예를 들어, 기존의 통일전략은 분단된 남북 주민에 대한 문화적이고 내면적인 접근에 치중하지 못했으며, 사회문화적 접근조차 흡수통일의 관점에서 북한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분단과 통일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은 분단 상황으로 인해 야기된 남북의 반인문적 생활양식을 비판적으로 조명함으로써 통일전략의 새로운 인식론적 전환을 모색한다. 나아가 통일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은 통일 인문학은 한반도의 현실에만 타당한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및 세계 전체와 공유할 수 있는 평화·생태·인권과 민주주의·자유와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 실현 등에 주목한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은 남북통일이라는 특수한 한국적 현실 속에서 출발하면서도,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근원적 성찰에 바탕을 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통일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은 얇 중심의 편향성을 벗어나 인간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통일에 대한 감수성과 분단이 낳은 상처에 대한 치유를 포함함으로써 통일담론의 인간적 확장과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존의 통일담론은 정치경제학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과학적 통일담론이 주를 이루고 왔다. 그런데 사회과학적 지식은 주로 인간 외부의 제도와 체제, 시스템과 구조, 정치 환경과 매커니즘을 다루는

I
II
III
IV
V

경향이 있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수치들과 자료들로 반영될 뿐 그들의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고뇌, 욕망, 이상 등은 사상되고 만다.

하지만 인문학적 접근은 무엇보다 인간의 주체성, 욕망과 믿음체계, 의지와 상처 등 온갖 다양한 인간적 태도와 가치를 탐구하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렇기에 통일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은 분단으로 인한 여러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내용을 중요하게 포함한다. 또한 한반도 분단체제가 낳은 레드 콤플렉스, 군사주의와 군사문화 등 우리 사회 내부에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된 여러 부정적 아비투스의 극복을 포함한다. 분단이 낳은 여러 가지 트라우마와 부정적인 믿음체계는 정치 경제의 통일을 위한 노력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인문학적 성찰을 요구한다.⁴³⁾

셋째, 이것과 연관하여 통일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은 분단의 상처와 적대를 실질적으로 극복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식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 분단의 고통들은 하루아침에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처방을 요구한다. 분단의 고통을 고통으로 실감하지 못하는 불감증을 극복하기 위해선, 분단 극복과 통일의 필요성을 사회구성원이 모두 참여하고 체험하는 일상의 일로 만드는 인문적 대중교육이 필요하다. 분단 상황 속에서 발생한 정서적 상처, 국가주의와 같은 이념적 적대, 타자를 배제하는 삶의 방식을 고통이나 병증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이를 치유하려는 다각적인 방법론과 실천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실제로 분단 60년을 지내오면서 남북한 사회에서는 체제대립이 심화되고 서로를 무시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미워하는 정서를 내면화시켜

⁴³⁾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편, 『소통, 치유, 통합의 통일인문학』 (서울: 도서출판선인, 2009), p. 22.

왔다. 또한 자기검열로 인해 사고의 폭을 제한하거나 폐쇄적으로 만들고, 적과 나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횡행하고, 증오와 불신의 고착화 등 인문학적 상상력이 위축되고, 반인문적 사고가 자라났다. 이처럼 분단이 공동체의 바람직한 발전과 개인의 자유로운 삶, 나아가 학문의 건전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단학문적 폐쇄성을 극복하고 한반도에 철저하게 내면화된 냉전문화를 해체하는 통일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넷째,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통일논의의 중심에 놓는다는 점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은 곧 서구중심의 인식틀을 극복하고 전(全) 지구적 문화지형 속에서 통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보편적 통일담론을 생산할 수 있다. 현재 한반도는 근대화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탈근대적인 새로운 물결을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은 근대성의 성취와 더불어 근대성의 극복도 요구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

민족국가를 해체할 수도, 그렇다고 오로지 그것만을 절대선으로 삼을 수도 없는 오늘의 상황에서 근대와 탈근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통일담론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는 생태 위기가 전 인류적 위기로서 부각되고 인권이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인권과 환경 등 인류보편적인 가치지향을 담아내는 통일담론이 요구된다. 나아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개인의 차원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적 연대, 다양한 형태의 상호의존성과 자율성을 고려한 통일론의 관점이 필요하다.

다섯째, 통일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개방적이고 심층적인 후속 논의들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까지의 대다수 통일전략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하나로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왔다. 그리고 통일을 당위성 차

I
II
III
IV
V

원에서 고려하여 단일한 통일민족국가를 형성해야 한다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비해 통일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은 이질적인 사람끼리 조화롭게 사는 것에 초점을 두며 또한 살아있는 구체적인 나의 존재가 포함된 통일전략을 목적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은 남북한 주민들이 현 단계보다 나은 삶을 누리는 문제로서 한반도의 통일을 부각시킨다. 여기에는 사람의 존재가 무엇이며,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 나아가 인간다운 삶의 조건으로서 분단의 극복과 통일에 대한 사유가 담겨져 있다.⁴⁴⁾ 요컨대, 통일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은 남북 통일을 새로운 정치공동체의 형성으로 바라보는 한편, 남북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면서 그들 스스로 민주적 자기 입법의 주체가 되어 그들의 의지로 새로운 통일 한반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 인문학적 통일전략의 핵심 패러다임

(1) 한반도의 분단극복과 통일문제에서 인문적 비전

통일문제와 인문학의 만남은 체제와 이념 중심의 연구 또는 정치-경제적인 거시적 연구에 기반한 기존의 통일전략을 넘어서, 인문적 시각과 가치탐색을 통해 인간 삶의 방식에 대한 근원적 성찰과 전망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통일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테면 한반도에서 통일은 결국 사람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 어떠한 사회구조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줄 수 있는지와 같은

⁴⁴⁾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편, 『소통, 치유, 통합의 통일인문학』, p. 21~22.

근본적 질문을 수반하는데, 인문학적 성찰은 이와 같은 통일의 의미에 대한 개방적이며 심층적인 논의가 가능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점에서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통일전략은 통일이 결국 남북한 주민들이 현 단계보다 나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평화·인권·생태와 같은 인류보편적 가치가 실현되는 과제라는 점을 명확히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

분명 남북의 통일은 체제통합이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 남북주민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회문화적 통합일 때 진정한 의미를 획득한다. 또한 통일은 특정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서로 다른 타자를 수용하고 소통하는 지난하고 섬세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풍부해질 수 있다. 달리 말해 통일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분단구조가 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보다 나은 상태로 남북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동태적 과정’인 것이다. 통일은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체화해서 살아왔던 이질적인 두 집단이 서로 소통함으로써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통합적인 새로운 민족적 공동체를 창출하는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한편으로 한반도의 분단이 현재 한반도 구성원들의 일상적 삶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한반도의 분단은 ‘한반도의 분열과 파괴, 치명적인 상처’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 자신의 미래적 삶을 형성해가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통일론 내지 통일전략은 그 진실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 지점을 쉽사리 넘어설 수 없었다.

기존 통일담론은 체제와 제도의 통합에만 치중한 나머지 현재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차원을 도외시하는 경향을 띠는 것이 사실이다. 분단은 단순한 두 체제의 분단이 아니다. 두 체제의 분단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속에 분단

된 의식과 정서를 아로새겨놓는다. 따라서 통일은 두 체제의 분단을 극복하는 문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두 체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적대성을 극복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통일인문학, 즉 ‘지인(智人)의 학’으로서 인문학이 분단 극복과 통일 문제에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⁴⁵⁾

(2) 인문학적 통일전략의 아젠다, ‘사람의 통일’

따라서 인문학적 통일전략은 ‘사람의 통일’을 핵심에 두고 있다. 분단은 우리의 현재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의 가치와 정서, 문화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인문학적 연구와 실천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통일’은 독일통일이 전해주는 시사들로부터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해진다.

첫째, 우선 제국주의 식민지배의 결과이자 동서 냉전체제의 산물이었던 한반도 분단은 동서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이미 낡은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바로 이것이 독일과 한반도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분단의 지속은 단순히 두 국가의 갈등을 넘어, 민족 간의 갈등과 적대를 낳고 있다. 나아가 분단은 남북 모두 자국 내 비민주적 정치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기제로서 활용되었으며, 현재 이념갈등으로 치장된 ‘남남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 분단은 한국과 북한의 국가적 갈등을 넘어서, 민족 간의 적대심, 민족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낳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때, 독일과 한반도의 상황은 상호 간의 소통과 교류의 차이를 차치하고서라도 그 분열과 적대의 층위와 정도에 있어서 그 의미가 다르다. 따라서

⁴⁵⁾ 박영균 외, 『생명·평화·치유의 DMZ 디지털 스토리텔링』 (서울: 한국문화사, 2016), pp. 3~4.

‘사람의 통일’의 의미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발생하는 분열과 적대, 갈등과 반목을 치유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다.

둘째, 독일통일과 관련해서 한반도의 분단에는 국가 간을 넘어 민족 내부에서 확대되는 사회심리적인 요인으로서 상호 적대감이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북의 상호적대성을 기조로 하는 한반도 분단지속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 핵심은 현재 남북 사이에는 긍정적인 상호관계성 형성을 가로막는 가치-정서-문화적 성향과 믿음 그리고 적대적인 사회 심리가 강고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한반도의 분단이 지속되는 데에는 남북 구성원들의 집단 무의식에 내면화되어 있는 상호 적대성과 불신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⁴⁶⁾

셋째, 결과적으로 실제 독일통일의 사례는 통일이 정치경제적인 체제나 제도의 통합이론 완수될 수 없으며 일상생활의 통합문제와 직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익히 알다시피 독일은 통일된 이후에도 통일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통일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경제적인 체제나 제도의 통합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통합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독일통일의 경험은 정치경제적 통일이 결국 사회문화적 통일, 다시 말해 ‘사람의 통일’을 바탕으로 하는 것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통일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은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통일’을 추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체제와 제도, 이념의 통일을 모색하는 것이다.

⁴⁶⁾ 이병수, “통일과 평화의 길항관계-통일이념, 통일국가형태, 민족성과 국가성,” 『시대와 철학』, 제26권 1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5), p. 348.

그러나 그동안 ‘사람의 통일’ 문제는 적대적 분단체제로 인해 강고하게 체화되어버린 남북주민의 배타성과 적대성을 뛰어넘지 못했다. 분단이 ‘국가의 분단’ 이전에 ‘사람의 분단’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통일은 제도적 분단을 극복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분단을 실천적으로 극복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적대적이었던 남과 북이 서로 소통함으로써 남북 주민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배타성과 적대성을 치유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남북의 사회문화적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인 산물들을 생산하는 것이다.⁴⁷⁾

(3) 소통과 화해를 통한 정서적 통일공감대의 형성

사람의 통일은 남북 주민의 정서적인 배타성과 적대성을 극복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정서적 통일공감대의 형성이라는 문제의식은 ‘사람의 통일’을 만들기 위한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그런데 남북의 통일을 위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은 남북의 차이와 이질화를 전제로 한 주장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분단 현실에서 비롯된 남북의 이질화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남북 이질화에 대한 연구는 이데올로기가 가장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이념적 상이성에 국한하여 남북 구성원의 사고유형과 생활문화의 이질화를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질화는 이데올로기 측면뿐만 아니라 분단체제하의 남북 근대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그 긍정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체제 대립이 빚어낸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남북의 이질화는 극복되어야 마땅하지만, 남북 각각의 근대화 경험 속에서 형성되어온 정치적, 문화적 차이는 통일한국의 자원을 풍부히 하는 데 오히려 유의할 수

47) 박영균 외, 『생명·평화·치유의 DMZ 디지털 스토리텔링』, pp. 6~7.

있기 때문이다. 남북 이질화 극복을 위해서는 분단체제를 모든 부정적인 것의 원죄로 보는 편협한 분단환원론을 경계하고 지난 60년간 남북한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이룩한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즉, 다양한 차이는 남북의 문화를 풍부하게 하고, 나아가 이러한 차이들이 서로 소통함으로써 통일한반도의 문화적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 이질화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적대와 불신에 기초한 극복해야 할 이질성과 통일한국을 위해 공유해야 할 타자성을 구분함으로써 적대와 불신을 극복하는 한편, 남북의 소통과 연대를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북의 이질화가 종종 곧 남북의 정서적인 상호적대성을 낳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적대적 이질화의 극복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차이의 인정을 바탕으로 두고 남북 주민의 소통과 화해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한 주민의 소통과 화해는 단지 통일 이후의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분단이 낳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동반자적 관계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당장의 현실에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차이의 인정에 바탕을 둔 민족의 소통과 화해, 그리고 이를 통한 정서적인 통일공감대의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통일이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이해와 교류를 심화시켜 가는 과정이라고 할 때, 통일에 이르는 새로운 길은 그에 걸맞는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을 가져올 수 있는 ‘소통의 패러다임’을 필요로 한다. 소통 패러다임의 중심에는 차이의 인정이 놓여 있다.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사상이념과 정서, 그리고 생활문화를 존중하고 용인하는 데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이때 남북의 소통은 정치교류나 경제교류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내면화된 적대적 생활문화를 극복하고 서로를 내면적으로 이해하는 정서의 교감을 포함한다.

I
II
III
IV
V

소통의 패러다임은 통일 이후의 미래 문제만이 아니라 남북의 평화 공존이 절실한 지금 당장의 현실에서 필요하다. 소통의 통일과정이 생략된 체제통일은 전쟁 등 극단적 방식을 함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통의 패러다임은 세계사에서 유래 없는 장기간의 휴전체제를 종식시키고 교류협력 과정을 활성화하며, 평화 공존의 틀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의미에서 아무리 낮은 단계의 만남이라도 통일에 이르는 과정은 단순히 통일의 전단계가 아니라 그 자체로 통일의 핵심을 이룬다.

하지만 소통은 그 자체로 통일을 가져올 수 없다. 소통의 패러다임은 한반도의 분단극복과 통일에 있어서 필수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소통은 남북에 남겨있는 정서적 적대성을 극복할 수 있는 화해의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 무엇보다 분단은 단순한 체제 대립을 넘어 남북한 주민의 정서와 감수성, 욕망과 희망 등 삶의 곁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반인문적 생활문화의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다. 체제대립에서 비롯된 적대적 정서와 반통일의 정서, 전쟁을 통해 강화된 상호간의 증오심, 경제적 격차에서 오는 상호 괴리감, 이산가족의 문제와 같은 가족의 상처, 남북한에 작용하고 있는 분단의 트라우마와 레드 콤플렉스 등은 고스란히 분단의 상처로 민족 개개인의 마음에 남아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분단 상황 속에서 발생한 정서적 상처, 타자를 배제하는 삶의 방식 등 반인문적 생활문화를 치유할 수 있는 ‘화해의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이러한 소통과 화해의 패러다임은 ‘사람의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서적 통일공감대의 형성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은 단순한 정치-경제적인 체제의 통일이 될 수 없으며 소통과 화해를 통해 민족 공통의 생활과 정서, 그리고 문화의 공통성을 확장하는 작업을 통해 남북의 정서적 공감대를 강하게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만

이룩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소통과 화해의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분단 자체가 우리의 몸 속에 체화되어 하나의 심리적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분단이 남긴 트라우마는 분단에 뿌리를 둔 상처와 적대 그리고 반인문적 삶의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남북의 정서적 통일공감대를 가로막는 심리적 요소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유

소통과 화해는 분단극복과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현실적인 장애가 있다. 소통과 화해는 기본적으로 서로를 ‘대화적 상대’로 인정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인데, 대체로 북은 그러한 상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북은 호전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대상이거나, 공산주의적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호시탐탐 남한을 적화통일하려는 불순한 세력에 불과하다. 북은 평화롭게 언어를 통해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너무나도 이질적인 타자인 것이다. 심지어 북은 이질적인 타자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악(evil)’으로서 공포스럽고 괴기스러운 ‘괴물(aalien)’이 되기도 하다. 그래서 북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로서 소멸되고 제거되어야 하는 대상일 뿐이다.

이러한 타자와는 원활하게 소통하고 나아가 화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사 만남을 가진다 하더라도 대화과정에서 드러나는 서로의 차이는 다시 상대가 대화를 나눌 수 없는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하면서 결별하게 하고 서로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지난 분단의 역사가 이를 잘 보여주지 않는가.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거의 상관없이 남과 북은 교류·협력을 위한 만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무슨 공식과 같이 이내 갈등과 반목을 반복해왔다. 무엇보다 이러한 반복은 자신을 중심으로 상대를 판단하면서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중심주의로부터 탈피하여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하지만 남북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이처럼 차이의 윤리를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지닌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어찌면 본원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남북 상호 간의 적대성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 혹은 문화적 차이 등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분단과 전쟁이 낳은 ‘역사적 트라우마(Historical Trauma)’가 그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 축은 한반도의 역사적 트라우마가 어떠한 방식으로 분단의 적대성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야기하는지를 살피고 그것의 치유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근현대사는 그야말로 수난의 역사였다. 일제강점기에서부터 분단 그리고 전쟁에 이르기까지 코리안들은 수탈과 폭력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여만 했다. 하지만 그러한 수난의 역사가 과거 어느 한 시점에서 끝이 난 것은 아니다. 일제식민지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탓에 여전히 중군위안부, 독도영유권 등을 둘러싸고 한·일 간에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두 분단국가는 정치·외교·군사적 충돌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수난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난의 역사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단지 한·일 혹은 남·북 간에 분쟁과 충돌만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상처의 기억이다. 사람들은 그러한 분쟁과 충돌이 발생할 때면 어김없이 식민지 지배와 전쟁을 떠올린

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러한 기억과 함께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이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2년 서해교전과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한국전쟁을 떠올리면서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어떤 사람들은 생필품을 사 모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피난을 고민하기도 한다. 더 기이한 반응은 소위 ‘전쟁불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전쟁이 낳은 참상을 잘 알면서도 다시 전쟁을 해서라도 복을 섬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에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찾아보기 힘들다. 여기에는 ‘원한과 증오’의 감정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의식-합리성’이 아니라 오히려 ‘비의식-비합리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더구나 어떤 연상적 계기(trigger)가 주어지면 반복적으로 정서적인 마비, 과각성되면서 인격 왜곡적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서 정신병리학에서 말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를 닮아 있다.

여기에서 하나의 의문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대부분은 직접 분단과 전쟁을 경험한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마치 경험자인 것처럼 외상 경험을 상기하고 PTSD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가? 그것도 집단적으로 말이다. 이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 이에 대해 일찍이 도미니크 라카프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트라우마는 집단 내에서 ‘전염’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직접적인 경험자 뿐만 아니라 “후세의 사람들”⁴⁸⁾에게까지 전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역사적 트라우마’라고 정의한 바 있다.

⁴⁸⁾ 도미니크 라카프라, 육영수 편역, 『치유의 역사학으로』 (서울: 푸른역사, 2008), p. 66.

하지만 그는 단지 트라우마가 ‘전염’된다고 말할 뿐 어떻게 전염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감기의 경우에도 그것을 앓고 있는 사람 곁에 있다고 하여 모두가 감기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어떤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 있을 때만이 전염이 가능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역사적 트라우마가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집단 전체에 전염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구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코리안이 경험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쫓아가면서 그것이 전승되는 바로 그 ‘어떤’ 사회적 구조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트라우마는 정신체계를 둘러싼 보호막이 충격으로 인해 파열구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외부 에너지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때 외부에서 유입된 에너지를 급격히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의 기관에 흩어져 있던 리비도(Libido)가 그 주변으로 몰려들어 묶음작업(Bindung)을 하게 된다. 이는 곧 원활하게 흐르고 있던 리비도가 더 이상 흐르지 못하게 되면서, 정신의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쾌락원칙’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한다.⁴⁹⁾ 마찬가지로 역사적 트라우마가 어떤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집단 전체가 외상 경험을 한 것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일차적으로 해명되어야 하는 것은 그 사건 당시 집단이 공동으로 지니고 있던 ‘집단 리비도’이다. 이는 곧 역사적 트라우마는 집단의 성격에 따라 또 사건 당시 그 집단이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인간 일반의 문제로 환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36년 동안의 일제 식민지 지배는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 일제가

⁴⁹⁾ Sigmund Freud, *Werke aus den Jahren 1925-1931* (Frankfurt: S. Fischer Verlag, 1972), p. 193.

패망하면서 끝난다. 사람들은 비로소 온전한 ‘민족=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에 차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희망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대중들의 압도적인 여론이 반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가결된 것이다. 결국 남·북은 분단되었고 대중들의 열망은 재차 좌절된다. 그리고 급기야 1948년 남북은 각각 단독 정부를 수립하게 된다. 일제 식민 지배에 의해 입었던 상처 위에 또다시 생채기가 나면서 상처는 더 깊어진 꼴이다. 하지만 이때의 ‘민족≠국가’는 그 이전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때의 어긋남은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국가로 나뉘지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분단 트라우마)

분단국가로서 남과 북은 온전한 국가일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민족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는 반쪽자리 국가, 즉 ‘결손국가(a broken nation state)’⁵⁰⁾인 것이다. 그렇기에 결손을 메우는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를 통합하여 하나가 되는 길밖에 없다. 하지만 미·소를 중심으로 한 동서 냉전체계가 강화되어 가고 있었던 당시의 국제적 정세 속에서 남과 북이 평화롭게 통합하는 길은 요원했다. 그렇기에 오기영은 “남북 조선이 갈려서 미·소전쟁의 전초전을 담당케 할 위험이 있는 것이며, 이리하여 민족 통일과는 반대로 총화(銃火)를 나누는 골육상잔으로써 민족 자멸의 참화를 두렵게 하는 바이다.”⁵¹⁾라고 하면서 이미 한국전쟁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행히도 그의 예견처럼 1950년 남과 북은 전면전에 돌입하게 된다. ‘민족≠국가’를 극복하고 ‘민족=국가’의 열망을 달성하겠다는 에로스적 욕망이 상대를 폭력적으로 내입(內入)하려는 타나토스적 욕망으로 전화된 결과인 것이다.

50) 임현진·정영철, 『21세기 통일한국을 위한 모색』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pp. 1~17.

51) 임현영, 『분단시대의 문학』 (파주: 태학사, 1992), p. 24.

I
II
III
IV
V

하지만 3년 동안의 전쟁은 수많은 죽음을 양산하고 결국 3.8선을 휴전선으로 대체하면서 끝이 난다. 여전히 남과 북은 그 이전과 동일하게 민족 전체를 대표할 수 없는 ‘민족≠국가’로서 결손국가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었다. 따라서 전후 국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그 결핍은 봉합될 필요가 있다. 이때 국가는 동족을 살해하였다는 죄의식을 억압하면서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중핵으로 하는 원한과 증오의 감정을 인출하기 시작한다. 각각의 분단국가는 반대편에 있는 민족을 분단과 전쟁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야기하고 민족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악=민족의 반역자’ 곧 괴뢰집단으로 규정한다. 반면에 자신은 민족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선=민족의 적자’임을 자처한다. 이는 한편으로 ‘민족≠국가’에서 상대를 삭제하고 ‘국가=민족’이라는 전치를 통해 국가가 곧 민족의 대표가 되었으며, 또 한편으로 자신을 절대적 사랑의 대상으로 윤리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윤리화의 결과물이 바로 ‘분단의 사회적 신체’이다. 국가는 외적 경계 태세와 강력한 내적 규율체계를 통해, 분단과 전쟁의 트라우마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면서 용공, 반공을 악에 맞선 윤리적 실천으로 승화하는 한편 국민을 배제와 포함, 죽음과 생명이라는 경계 위에 위치시키고, 분단국가가 생산하는 믿음과 성향체계를 절대적인 것으로서 내면화하는 분단의 아비투스(habitus)를 생산하여 왔던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유한다는 것은 단지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통일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역사적 트라우마를 재생산하는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키고, 분단의 아비투스를 통일의 아비투스로 바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비투스는 구조와 주체라는 두 요소 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통해 구성되어지는 신체에 आरो새겨진 습관화된 행위양식이라는 점에서 통일의 아비투스로의 전환은 우리의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장을

변화시키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교육의 현장에서부터 문화 정치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분단의 역사를 피해자주의에 입각해 서술하는 것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다. 전후 분단국가는 가해자로서의 죄의식을 억압하고 오로지 피해자의 관점에서만 역사를 서술하면서 상대를 비극적 역사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적대성을 강화시켜왔다. 하지만 앞서 보았다시피 민족적 리비도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한국전쟁은 일제 식민지배 시절부터 좌절되어 온 '민족=국가'에 대한 열망이 왜곡되고 폭력적인 형태로 드러난 결과였다. 때문에 어느 일방만이 역사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남과 북은 모두 한편으로는 피해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해자인 것이다. 즉, 분단과 전쟁의 역사를 민족 공동의 비극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민족공동체에 대한 환상적 구조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원형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를 복원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생성과 발전은 동일한 것들 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차이나는 것과의 만남 속에서 나오듯이, 남북 각자가 계승 발전시켜온 민족적 유산의 만남은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상상함으로써 우애와 상생에 근거한 민족공동체의 형성을 욕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분단의 적대성을 생산하는 분단의 논리가 곧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파괴적인 결과로 돌아온다는 반성적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분단의 논리는 민주적인 소통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폭력적으로 억압하면서 되레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곤 했다. 뿐만 아니라 안보의 논리는 상호 간의 군비경쟁을 부추기면서 오히려 상호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리의 안정적인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I
II
III
IV
V

3. 독일통일 사례를 통한 통일전략⁵²⁾

가. 동서독과 남북한 분단 과정 역사적 비교

독일통일 사례에서 한반도 통일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일과 한반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동서독과 남북한 분단체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단을 기점으로 차이점을 보인다. 동서독과 남북한 모두 분단 이전의 동서독이 나뉘고, 남북한이 나뉘는 원인은 각기 다르지만, 분단 이후에는 냉전이라는 상황과 체제적인 대립 관계로 인해 서로 대치되는 유사성을 띤다. 서독의 경우 사회적 합의와 평화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서독 특유의 방법으로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를 발전시키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소련을 포함한 동독은 구 동구권과의 경제 협력 기구(Communist Economic Conference: CMEA, 이하 코메콘)가 있었지만, 국가 내에서 독립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고 있었다.

한국에 경우에는, 1962년 박정희 정권 이후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반면 북한은, 해방 후 소련과 유사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해오다 1960년대 말부터 주체사상에 근거한, 탈소련 및 중국과의 협력 강화 정책을 추구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자립 경쟁의 노선을 걷게 되었다.

둘째, 동서독과 남북한 모두 체제 대립이라는 전형적인 현상적 측면에서의 공통점이 있음에도, 주변국의 영향력과 민족 내 갈등 관계의

⁵²⁾ 방만기(한양대학교) 교수의 원고를 바탕으로 정리·재구성 하였음.

측면에서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 서독의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속하여 소련 중심의 동유럽 군사체제인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대립 양상을 보였지만 서독과 동독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은 없었다. 또한 서독의 군사력 체계를 자국의 방위가 아닌 서유럽 전체의 시각 즉, NATO에서 재편되는 과정을 겪었고, 동독 역시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편입되어 동독의 군사력이 독립적으로 도발을 일으키는 구조가 되지 못했다. 또한 서독의 경우에는 급속히 성장한 경제 강국으로서의 힘을 바탕으로 주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적극적인 서유럽 핵심국가로 부상하고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전승국과 대등하거나 우월한 외교 관계를 갖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반면 동독 같은 경우 코메콘 국가 그룹에서 가장 큰 경제력을 갖고 있음에도 소련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점이 대조된다.

남북한은 6·25라는 비극의 한국 전쟁으로 남북한 모두 엄청난 인명 및 물적 피해를 보았으며 1953년 휴전협정 후에도 북측의 도발로 현재까지 끊임없는 무력 충돌을 겪고 있다. 한국은 특히 한국전쟁 이후로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으려 안정을 피하는 정책을 취하며 지금까지 군사적 안정을 유지해 왔으나, 북한은 자체적 군사력을 바탕으로 도발을 감행하는 정도로 주변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표 III-4 >> 독일과 한반도 체제 및 주변환경 비교

항목	동·서독	한반도
분단 이전의 상황	1871년 프로이센군주국의 비스마르크에 의한 통일 1,2차대전 시기 독일의 패권추구	오랜 통일의 역사와 민족적 단일성 유지 수많은 외세의 침입 일본 식민지과정과 항일운동
점령과 분단 과정	1945년 6월 독일나치제국의 항복 1946년 6월 미,영,프,소 4개국 분할 점령 1949년 9~10월 미,영,프 3개국 점령지역에 서독, 소련 점령지역에 동독 수립	1945년 8월 일본항복으로 미·소분할 점령
분단의 체제	서독: 자본주의(사회적 시장경제) 동독: 사회주의 체제	북한: 북한식 사회주의 남한: 자본주의(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외국 세력	미국과 나토 → 서독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기구 → 동독 서독정권에 대한 미국의 영향보다 동독정권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 우세	미국: 과거(3년간 군정, 북미회담), 현재(남한에 대한 영향력 큼) 소(러): 해방 직후 북한지원, 남·북한과 수교 중국: 과거(한국전 참전, 휴전협전의 한 당사자, 남북한과 수교), 현재(북한에 대한 영향력 큼) 일본: 지속적 영향력 확대의지
분단 국가의 충돌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대립구조 서독과 동독의 무력충돌 없음.	2차대전 종전 후 공산체제과 자유진영 대립과 민족 내 충돌 공존 한국전쟁(1950~53년), 전쟁후 국소적 규모의 지속적인 무력충돌
분단 내의 특이 사항	동독: 1953.6.16 동베를린 반소반공 봉기 베를린 장벽건설 전 동독 탈출민 20만 명 그 후에도 연 5천 명 이상 탈출(대부분 서독망명)	북한: 북한 내 반공반김정일 봉기는 거의 부존 한국전쟁 동안, 그 이후 급감 현재: 탈북자 총 3만 명 이내(매년 명 이내)
결론	전형적인 체제대립의 현상 소련 및 동유럽 봉과의 직접적 영향을 받음. 민족 내 갈등관계 적음.	체제대립 외에 주변국의 영향력이 큼. 민족 내 갈등관계 큼.

출처: 도진순, 『분단의 내일 통일의 역사』 (서울: 당대, 2001), p. 167. 재구성.

나. 군사적 대치 관계에서 나타난 동서독과 한반도 주요 사건의 특징 비교

동서독과 한반도 주요 사건을 통해 양측 간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심화될 때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정치, 경제적 사안과 한반도의 긴장 관계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먼저, 동·서독과 남북한 모두 냉전 시기와 긴장 완화 그리고 갈등 시기를 거쳤다는 유사점이 있다. 독일은 1962년 쿠바의 미사일 배치 문제 등 냉전이 격화될 때와 동·서유럽 간 핵전쟁 위기가 고조될 때 베를린은 유럽에서 그 지정학적 중심에 있었다. 동서로 이동하기 위해 베를린에 설치된 검문소인 체크포인트 찰리(Checkpoint Charlie)에서 동독진영의 탱크와 서독진영의 탱크가 불과 몇 미터를 바라보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3차 대전의 발발 위기 직전까지 있었다. 그 후 1975년 7~8월 헬싱키 협정에서 동서독을 포함하여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동등한 주권을 인정하고 무력 사용과 위협을 중단하는 영토 불가침 합의를 하게 되어 긴장이 점차 완화되기 시작했다.

1969년, 집권당 사민당 정권 빌리 브란트 수상을 중심으로 한 신동방정책⁵³⁾으로 서독과 동독 간의 관계 개선의 노력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1972년 12월 ‘사실상’ 동·서독 간의 1민족 2국가를 인정하는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양측 간의 각종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상호 방문이 크게 증가했는데, 매년 100만 명 이상의 동독인이 서독을 방문했고, 500만 명 이상의 서독인이 동독을 방문했다. 또한 동독에서는 서독의

⁵³⁾ 신동방정책이란 1969년 사민당 정권 빌리 브란트를 중심으로 한 대동유럽의 정책적 변화정책을 칭함. 동독의 존재를 부인하는 강경책을 버리고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과 국교를 맺음(예: 1970년 8월 모스크바 방문 등).

I
II
III
IV
V

TV를 시청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그간 자유가 제한되고 침체되었던 동독의 현실을 깨닫게 되는 창구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동, 서독 간의 냉전이 전개되면서 독일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1979년 소련이 서유럽을 겨냥해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에 SS-20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였고, 나토는 이에 대응하여 중거리 핵미사일을 개발, 배치함과 동시에 소련과 무기 감축 협상을 벌이는 이른바 ‘이중궤적(double track decision)’을 내렸는데, 이때 미국의 퍼싱II 미사일이 서독지역을 포함한 곳에 배치되기도 했다. 중요한 사실은 당시 서독 정부는 국내·외 평화주의자들의 반대에도 나토의 결정에 따라 중거리 이동식 핵미사일 퍼싱II 108기를 서독에 배치하는 것을 수용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서방진영이 공산진영에 대해 우선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난 후에 감축협상을 하는 전략이었다. 이러한 서독 내에 배치된 핵미사일 등을 기반으로 미국은 1980년대 소련과의 긴장완화와 전략무기 제한 협정에 성공하게 되는데 그 결과 1987년 미·소간의 전략무기 제한 협상을 체결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를 발로로, 1985년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문이 열리고, 1989년 1월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의 방북과 금강산 남북공동개발의정서가 체결되기도 했으며, 1991년에는 남북화해와 불가침 그리고 교류협력을 규정으로 하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국제적 정서와 데탕트 분위기에 맞춰 남북한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란 3대 통일 원칙을 기반으로 이전의 적대적인 관계에서 다소 완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1993년 북한의 핵개발을 시작으로 군사적 남북한 긴장관계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1998년 제 1차 연평해전 발발, 2002년 제 2차 연평해전, 2005년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에 이어, 2006년 1차 핵실험 감행, 2016년 9월 현재 5차까지 진행된 핵실험으로 인한 북한의 도발로 남북한은

다시 팽팽한 긴장 속에 대치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군사적 재긴장의 기간 동안 2000년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이나 2003년 개성공단의 착공, 2007년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등 일련의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간의 노력이 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독일과 한국은 동서독과 남북한 모두 세계의 흐름 속에서 냉전의 시기와 긴장 완화 그리고 다시 갈등의 시기를 겪었다는 유사점을 보인다. 반면 군사적 대치 관계에서는 양국이 상이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독은 동독에 비해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서독의 경우 효율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독일 특유의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를 구현하여 성장과 동시에 노사문제나 빈부차이에 있어서 격차를 줄이고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사회적 평화를 위주로 하는 사회경제 체제를 이룩했다. 반면에 한국은 정책적 일관성에 있어서도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군사적 우위를 점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상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2016년 수차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한 상황에서, 남한은 미국의 핵우산 도움 없이는 군사적 대결 구도에서 경쟁할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대외 의존적 상황은 향후 남한 주도형 통일을 지향하는 전략의 관점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비춰진다.

두 번째 차이점은 국제관계 및 외국의 영향에 관한 사안이다. 서독은 제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다시는 도발이 가능하지 못하도록 서독만의 독립적인 군사력 증강이 불가능했음에도 개별적인 전략을 택하기보다는 초기 나토의 회원국으로서, 미국의 우방국으로 군사적 협력과 핵우산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는 등 자국의 이익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으로 국제관계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주체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실사구시의 전략을 통해 1972년 12월 동서독 간의 기본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1민족 2국가를 인정하게

I
II
III
IV
V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983년 여름 당시 기사당 당수 프란츠 요셉 스트라우스(Franz Josef Strauß)가 수십 억 도이치 마르크(당시 가치 한화로 수 조원 상당)의 재정 지원을 했던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즉 서독은 국제관계와 외국의 영향에 있어서 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나토라는 보호막을 엮고 협력적인 군사협력 장치를 통해 국제무대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서독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에도 동독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며, ‘이중전략’⁵⁴⁾이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는 점이다. 소련이 서유럽을 겨냥해 동독과 체코에 SS-20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를 할 때, 나토는 중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독일에 퍼싱II 108기로 대응했다. 군사력에 대한 강한 우위로 대결하면서도, 실패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인 동독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기꺼이 당시의 화폐 가치인 수십억 도이치 마르크로 신용을 공여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탈동독인들이 동독에 수감되었을 때 과감히 ‘돈’으로 이들의 사면을 요구하면서 서독으로 이주를 꾀하는 정책을 병행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서독이 계속 일관된 ‘이중전략’을 취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72년 12월 동·서독 간의 1민족 2국가를 인정하는 기본 조약을 체결했음에도, 대동독 신용공여 및 탈동독인의 재정적 사면정책은 동독 내에 서독을 동경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 것이 분명했다. 특히 1983년 여름의 대규모 신용공여는 공산주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으로의 당시 오해 소지가 다분했을 것이다. 그러한 무리수에도 정책을 실시한 이유는 동독의 공산주의 체제에 비해 월등했던 서독의 경제 및 민주체제의 자신감이 우선 뒷받침했을

⁵⁴⁾ 여기서 ‘이중전략’이란 의미는 군사적 대치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대화 및 유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이중적인 전략을 의미함.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번 신용공여를 받으면 동독이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경제적으로 서독의 경제체제에 종속되고 종속되는 정책적 전략이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 호환으로 통일에의 긍정적 노선들이 생기는 동안, 한국은 국내의 이념 논쟁에 매몰되어 북한에 경제 원조를 하면 친북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공이 되는 이분법적 흑백 논리에 파묻혀 있었다. 예를 들어 김대중 및 노무현 정권에서는 남북한 대화가 진전되며 대북 지원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이는, 북한의 핵무기 실험이나 도발로 이어져 친북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다 다시 보수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남북관계의 경색 및 대북 지원 중단으로서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을 보임으로서 한국 정부는 계속 전형적인 ‘스톱 앤드 고(Stop and Go)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다. 동서독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프라이카우프)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서독정부의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구이다. 인권과 관계된 서독의 대동독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동서독 정치범 석방거래(Häftlingsfreikauf, 이하 프라이카우프)인데,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이후 동독에 억류되어 있는 정치범 등을 석방하기 위한 석방거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독일이 2차 대전 패전 이후 독일 내 소련 점령지역이 동독 사회주의 국가(이하 동독)로 전환되자, 서독 교회 측에서는 동독 지역에 전쟁 포로 등으로 잡혀있는 목사, 교회 관계자 등의 석방, 수행조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동독과 협상을 진행했다. 1962년 총 15명의 개신교계 인사를 대상으로 석방거래가 성사된 후 1963년부터

I
II
III
IV
V

정부 주도 아래 프라이카우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⁵⁵⁾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 11월이 지나 그 해 말까지 27년간 동독 정치범 33만 755명을 석방하고 그 가족 25만 여명을 서독으로 데려왔다. 다소 가격은 변동되었지만 정치범 일인당 약 10만 도이치마르크(미화로 약 6만 2천 달러 상당)로 총액 34억 6,400만 도이치마르크가 지불되었다.⁵⁶⁾

동독 정치범이 서독으로 풀려나는 데까지는 어려운 과정의 연속이었다. 먼저 서독에서 인권상황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동독 측이 체제 위협을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다⁵⁷⁾. 즉 동독에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했는데, 서독은 동독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UN 등을 통한 국제적 접근 방식은 자제하면서 서독의 특별사업형식으로 인권문제를 ‘비밀리에’ 접근하고자 했다.

서독 정부 측에서도 처음에는 거부감과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첫째, 동독의 인권 문제와 관련된 정책 방안으로 프라이카우프가 제기되었을 때, 동독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전독성(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 담당자들 사이에는 이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는데, 돈으로 사람을 사는 방식은 여론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아테나워 수상을 비롯한 당시 최고 결정권자는 대규모 정치범 문제뿐 아니라 베를린 장벽이 만들어지면서 생겨난 이산가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당시 독일 정부는 정권이 바뀌어도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자칫 사람을 돈으로 거래한다는

55) 손기용 외, 『동서독 정치범 석방거래 및 정책적 시사점』, (서울: 통일부, 2008), p. 9.

56) 위의 책, p. 51.

57) 위의 책, p. 19.

윤리적 비난으로 말미암아 반인권적 행위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언론인들을 상대로 암묵적인 보고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합의를 도출해낸 사실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둘째, 동독 정권을 설득시키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동독은 1949년 건국과 함께 사회주의 건설을 국가의 당면 과제로 천명하고, 이에 저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요소들은 체제에 반(反)한다고 여기고 단초를 없애는 것을 해당 정부의 주요 과제로 부각시켰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시민의 권리 지향과 그러한 분위기는 체제의 위험 요소로 간주, 국가보안성 슈타지(Stasi)를 중심으로 사회주의를 거부한 민주주의 신봉자, 종교관계자, 노조원, 예술가 등을 반체제 세력으로 구분하고 많은 이들을 수감했다.

그 결과 동독 정권에서는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범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불가피하게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독에서 제기한 프라이카우프 건은 반가운 제안이었다. 동독 체제의 불안요소인 정치범 문제는 분명 서독으로부터 대가를 전제로 한 프라이카우프를 통해 재정적으로도 큰 이득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돈을 주고 정치범을 서독 측에 판다는 것이 공론화되면, 동독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져 체제 유지 및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었기에 동독 측에서는 조심스럽게 이 사안을 다룰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동독은 1970년대 무역 수지 적자규모가 커지면서 해외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유동자금 결핍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었고 서독 측의 제안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서독의 동독 정치범 석방거래는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몇 가지 영향과 시사점을 주었다. 먼저 동독에게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선사했다는 사실이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다는 이유로 동독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세상의 누군가가 자신의 석방을 위해 애써주

I
II
III
IV
V

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은, 석방된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일 감옥소 전체에 알려지고, 감옥 밖에 있는 동독 사회 곳곳에서도 암암리에 회자되었다. 이러한 희망은 억압된 동독에서 처음엔 비록 소수였지만 점차 체제를 반대하고 자유를 외칠 수 있는 용기가 번져나가는 데에 큰 역할을 했음에 틀림없다. 예컨대 1989년 여름을 기점으로 일어난 라이프치히 월요데모 등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처음엔 소수의 가담자가 가을부터 대규모 시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에는 억압된 체제에 반대하는 용기가 사회전체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둘째, 통일이라는 것은 인권문제를 결부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독에서는 2차 대전에서의 패망으로 인해 그간 인권 탄압과 억압을 자행했던 나치 정권이 몰락하자 이에 대한 반성이 사회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는 기민/기사당 중심의 보수정권뿐 아니라 사민당 진보정당이 집권할 때에도 지켜졌다. 예컨대 1970년 12월 6일 사민당 정권 총리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 내에 있었던 악명 높은 나치 강제수용소 '아우슈비츠(Auswitz)'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있는 모습이 전 세계에서 보도될 때 독일의 진정성이 전달되고, 독일은 (구소련을 비롯한) 서구 유럽뿐 아니라 동구 유럽에서 대화의 상대자로 인식되었다.⁵⁸⁾ 그리하여 1970년 독일은 모스크바조약 등 소련, 폴란드와 조약을 맺으며 동서독 관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빌리 브란트가 1970년 동독지역 에어프루트(Erfurt)를 방문했을 때에는 전 동독 주민의 환대를 받게 되었다. 독일이 인권을 중요시하고 과거의 과오를 뉘우치며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면서, 당시 군사적 결정권을 쥐고 있던

⁵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독일에서 통일을 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야기』, 2015년 겨울호, p. 112.

소련의 입장에서도 서독에 대해 일방적인 적대관계를 취하기보다는 외교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서방의 주요 채널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뉘우침과 인권을 바탕으로 한 진심어린 외교정책은 당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 서방의 자본주의를 공격했던 동독의 비난이 날카롭지 못하고 동독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으며 오히려 서방, 특히 서독을 동경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경제적 우위와 이로 인한 경제적 여유를 동독의 인권 증진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동독이 비록 사회주의 경제 체제 코메콘에서 가장 잘 사는 사회주의 국가였음에도 서독과는 비교가 될 수 없었다. 서독은 1948년 화폐개혁을 시발점으로 독일 특유의 사회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여 1950년 한국전쟁을 거쳐 1960년대 초 일본과 더불어 부유한 국가로 변모했다. 이러한 라인 강의 기적(Wirtschaftswunder)으로 서독은 동독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선 감히 넘볼 수 없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도이치마르크는 가치의 안정성이란 측면에서 유럽에서는 미 달러화에 버금가는 주요한 결제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서독은 인권에 대해 어느 정도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개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넷째, 엘리트들의 정치 및 사회의식의 중요성이다. 전통적으로 서독 정치가들은 학식이 높고 시대 선두주자들이었다. 빌리 브란트를 포함하여 1950년대 라인 강의 기적을 주도한 기민당 정권의 아데나워 수상, 그 뒤를 이은 루드비히 에어하르트(Ludwig Erhardt) 수상, 그 뒤를 사민당 정권의 헬무트 슈미트, 기민당 정권의 콜 수상 등 국가 최고의 권력자들은 서독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 중요한 국가의 핵심 요소뿐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여겼다. 이들은 모두 국제정세 변화에 발맞춰 동구권과의 관계를 실용적으로 설정 및 개선했으며, 프라이카

I
II
III
IV
V

우프는 단순히 정부의 판단뿐 아니라 정치권 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었고 이에 동의했다. 심지어 동독과의 어떠한 공식접촉을 거부했던 대연정(1966년에서 1969년 사이)때 게오르그 키징거(Kurt Georg Kiseinger) 수상조차도 자신의 기본 정책을 일부 변경해 동독과의 공식접촉 의지를 표명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독일의 대의에 대한 정신과 추진력, 즉 인권개선이란 ‘대의’를 위해 일반적인 합의(consensus)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밀고 나가고 실행하는 그들의 능력은 참으로 본받을 만하다.

라. 독일통일 사례를 통한 통일전략

지금까지 동서독 분단 과정의 역사적 주요 특징과 군사적 대치 관계에서 나타난 동서독 주요사건, 그리고 인권과 관계된 독일의 주요 정책으로 동서독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독일 통일의 사례를 한반도에 응용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동독 사회주의 체제(마르크스-레닌 사상이 아닌)와 다른 점은 주체사상으로 지배된 체제로서 최고 지도자는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 개인을 중심으로 당의 권력이 집중되고 지도자 한 사람은 절대 권한을 행사하고, 이러한 구조는 갖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상의 교류가 필수인데, 고정된 주체사상으로 인해 다른 사상, 특히 자유주의적 사고가 들어갈 틈이 전혀 없다는 것에 가장 큰 문제를 들 수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독재당의 유일사상체계의 10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 사람들과 처형자 가족들, 종교를 믿다가 발각된 사람들 등 여러 분야에서 보위부에 걸려 수감된 숫자는 대략 15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⁵⁹⁾ 이러한 숫자는 국가보위성이 관리하는 14, 15, 16호 관리소와 인민 보안성이 관리하는 17, 18호 관리소 등 5개의 관리소에서 평균 3만 명이 수감된 것으로 가정하면 15만 명으로 추산된다. 감금된 정치범들 중에는 노동자나 일반 근로자 출신보다는 간부출신들이 많다고 한다. 추정해보았을 때, 대한민국 국군 출신으로 북한에 있는 몇 안 되는 장기수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정치범이 수감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북한 정치범의 인권문제를 접근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먼저 북한과의 관계를 지금보다는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사실상 현재로서는 남북한 대화 창구가 닫혀있다. 북한이 예뻐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대화 창구라도 있어야 무슨 대화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에 남북한 대화에 밀사로 활약했던 인사들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가 적극 북한에 방문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비로소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흥정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둘째, 우리의 경제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남한의 경제력은 공식적으로 2015년 말 기준 일인당 GNI가 남한은 북한의 22.3배, 명목 GNI는 45.4배에 달한다(한국은행 「남북한 주요지표 비교」 참조). 이러한 우리 남한의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한 정치범 탈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재원을

⁵⁹⁾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발간된 자료에 따르면 정치범의 숫자는 1,258명으로 이는 확인된 숫자 위주로 표시된 것으로서 탈북자 증언과 차이가 많이 나며 과소평가된 숫자라 판단됨.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10명 중 3명, 연좌제 감금,” 『미국의 소리』, 2016.8.1. 참조.

I
II
III
IV
V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독일의 ‘이중전략’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다. 위의 2장 ‘군사적 대치 관계에서 나타난 동서독과 한반도 주요 사건의 특징 비교’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서독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에도 동독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는 ‘이중전략’을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우리의 실정에 맞는 ‘이중전략’이란 결국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할 때 강력하게 응징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되, 한편으로는 그와 다르게 배후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갖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넷째, 비공개적 접근방법을 공개적 접근방법보다 우선할 필요가 있다. 비공개적 접근방법의 중요성은 동서독 사례에서도 보여주듯 남한에서도 북한인권을 ‘돈’으로 거래한다거나 북한정권 연장에 도움을 주는 행위 등의 비난이 가해질 공산이 크므로 이에 대해선 되도록 언론의 노출을 피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특히 대한민국 여야 정당을 막론한 중요 인사들의 콘센서스뿐 아니라 국정원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언론을 상대로 국익을 위한 철저한 보안유지의 약속과 확인이 필요하고 언론사에는 당근과 채찍전술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남한에서 북한동포가 정착할 수 있는 경제적 여권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독재정권의 비인권적 행위가 자행될 때 그 대안으로 탈출할 대상 국가가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 우리 정부는 탈북자들이 보다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직군들을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독일 사례로 바탕으로 하여, 북한 정치범 석방과 한국으로의 탈출을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단계별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북한에서 강제 수용 중인 정치범의 숫자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한 내 탈북자 수요인원의 확대 파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탈북자들에게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정원 조직 내 에이전시 기능의 강화, 우방국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취합, 과학적인 통계기법의 확대 등으로 최대한 북한 내 정치범의 정확한 인원 파악이 요구된다.

두 번째 단계는 북한 내 강제 수용된 정치범들의 분류이다. 언급했듯이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10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포함하여 종교를 믿다 발각된 사람 등 각계각층을 망라하여 노동자보다 오히려 간부출신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에 대한 직업별 행적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파악되고 난 후 분류가 가능하겠지만, 북한에서 수감 중인 남한 정치범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의 정보만으로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우선순위를 매길 수는 있을 것이다. 가령 체제에 가장 위협적이라 여겨지는 정치범들 중 남한 측에 북한의 최근 정보와 동향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고 반대로 정보획득 능력이 없는 수감자의 경우 후순위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렇게 북한 정치범의 석방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개선이라는 대명제와 결부되므로 종교나 민주사상의 자유를 내세우다 억압받은 정도가 높을 수록 그 구제대상의 명단에 올리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강제로 북한에 억류되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우리의 최우선 구제대상이 되어야 하겠다.

세 번째 단계는 북한과의 협상과정이다.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급한 정치범에 대해 부인할 공산이 크다. 특히 최근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압박 등으로 수용소를 폐쇄하거나 이전하는 등 그 숫자로 볼 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⁶⁰⁾ 그러나

I
II
III
IV
V

한번 수감되면 죽어서도 나올 수 없는 ‘완전통제구역’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 가령 출소 요덕 제 15호 관리소나 회령 22호 등 출소 가능했던 ‘혁명화구역’은 폐쇄시키고 관리소 전체를 ‘완전통제구역’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재구역 및 재배치 조치의 배경에는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피해가기 위한 방법으로 완전격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진다. 북한은 우리가 구제해야 할 대상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을 소지가 다분하다.

네 번째 단계는 북한 정치범 석방의 실행과 완료이다. 서독의 경우 동독이 약속한 정치범 석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당시 현물을 싣고 가는 서독의 배가 회항을 하는 등 철저하게 석방과 동시에 대금 지불이란 원칙을 지켰다.⁶¹⁾ 이러한 원칙을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은 동독에 비해서 결제나 돈에 대한 신용원칙이 덜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이 꼭 필요하다. 정치범이 어떤 경로로 남한에 안전하게 도착하고 인도되는지 그 완료시점까지 철저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독일통일 사례를 바탕으로 통일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공개적 접근방법을 적절히 통일전략에 응용할 필요가 있다. 서독 정부 측에서도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지만 아데나워 수상을 비롯하여 당시 최고결정권자는 대규모 정치범문제뿐 아니라 베를린 장벽이 만들어지면서 생겨난 이산가족문제 등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여론과 윤리의 측면에서 돈으로 사람을 사는 정책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상당 시간 수면 아래에서 실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정책의 일관성 유지이다. 당시

60) 한상미, “북한 정치범수용소수감자 10명 중 3명, 연좌제 감금,” 『미국의 소리』, 2016.8.1.

61) 손기웅 외, 『동서독 정치범 석방거래 및 정책적 시사점』, p. 42.

독일 정부는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행위가 사람을 돈으로 거래한다는 윤리적 비난을 받는 것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실행했다. 반인권적 행위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언론인들을 상대로 암묵적인 보도의 자제를 당부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을 일관성 있게 설득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역시 돈을 주고 정치범을 남한 측에 판다는 사실이 공론화되면 자국 내에서 비난 여론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스런 자세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북한은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국이고 외화자금 등 유동자금의 조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문제와 같이 가는 것이다. 서독은 지난 1970년 12월 6일 사민당 정권 총리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 내에 있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세계평화와 인권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남한은 전범국가도 아니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 전적도 없다.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로 UN 등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탄압하는 난민들을 수용하고, 좀 더 세계사회에서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위기는 북한이 우리와 좀 더 평화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에 충분한 방아쇠가 될 수 있다. 다섯째, 경제적 우위와 경제적인 여유를 북한의 인권증진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서독이 1948년 화폐개혁을 시발점으로 라인 강의 기적을 일으켜 동독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던 사실이 통일의 경제적 기초가 된 것은 자명하다. 우리도 지금보다 더 나은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경제적 성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원화 가치의 안정성을 높이고 노사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I
II
III
IV
V

강소 증견기업의 층을 두텁게 하는 등 자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이룩해야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경제적 우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야만 서독처럼 강한 경제력으로 인권에 대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개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Ⅳ. 통일공감대 확산방안



1. 대내적 통일공감대 확산방안

가. 추진방향

2017년 현재 한국 사회는 분열과 갈등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분열된 모습은 향후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내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도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한국 주도의 통일 전개에 대해 위협 인식을 가지면서 무력적화통일이 체제 보존의 유일한 방도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북한은 2016년 4,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급기야는 2017년도에도 서방세계에 ICBM 개발 및 핵무기 개발 의욕을 정면으로 드러내면서 한반도 긴장상황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대남 비난을 통해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 확보와 정치적 및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려고 하며 더 나아가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대남 비난을 통해 대내 결속을 다지면서 남남 갈등을 유도하고 남한과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공조를 균열시키려고 하고 있다. 즉,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을 흡수통일/체제통일이라고 비판함으로써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저지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저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 상황 속에서 국내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한데 첫째, 통일준비 작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은 우리 국민의 통합된 의지를 바탕으로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대국민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둘째, 통일에 대한 대국민 설득이 필요하다. 통일은 국가적 차원과 함께 개인적 차원에서도 당연적 필요성을 제시해야 한다.

I
II
III
IV
V

또한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지역 및 세계적 차원에서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연계 강화이다.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각각 분리된 정책이 아닌 서로 연계성이 강한 정책임을 인식하고 상호 간 연계성을 고려한 통일공감대 형성 방안 추진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통일 이후의 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 전략을 위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통일전략 모색을 통한 국내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개발과 미중의 새로운 패권구도,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의 변화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급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앞에서 기술한 북한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변화 유도,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인간중심의 통일전략 모색, 그리고 통독과정에서 경험한 통일정책을 교훈삼아 현재 우리의 통일정책에 투영하는 노력들이 당장의 한반도 통일의 견인차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내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이 활용한다면 장기적으로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기제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북한의 변화 유도와 대북 및 통일정책의 국민적 합의기반 형성을 위해서는 여야 간 정책 신뢰 및 남남갈등 구조의 해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건전한 논의 구도가 형성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요 남북관계 현안 및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람의 통일'이라는 인식을 확대하여 한국 사회 내에 인문학적 통일 접근법이 필요하다.

독일통일의 사례에서 서독정부의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통일전략 추구가 필수적이었으나, 통일과정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통합문제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통독 이후 독일의 사회를 바라볼

때, 한반도 통일 이후를 생각한다면 정치·경제적인 체제나 제도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통합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체제와 제도, 이념의 통일을 모색하고 이를 우리 국민들과 같이 고민해야 한다.

또한 소극적인 분단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통일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재 무엇보다 북한의 대남전략을 직시하는 가운데 실행가능한 것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현가능한 통일정책 추진은 정부 주도만으로는 부족하며, 시민사회, 종교단체, 언론계, 재계 등 각각의 이익단체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속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북한주민들에게 통일이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 문제를 한국사회가 공유하고 북한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여기에 통일의 미래상을 구체화하고 보완 및 발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유민주국가, 문화복지국가, 비핵·평화국가, 다문화 공동체 등 통일의 미래상에 우리 국민이 합의하고, 이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확산을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는 우리정부의 통일전략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통일정책이 추구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통일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하며, 여기에는 통일교육 강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통일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I

II

III

IV

V

나. 구체적 통일공감대 추진방안

한국 사회 내 통일공감대 추진방안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새로운 통일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3장에서 논의한 통일전략을 중심으로 국내 구체적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을 논하려 한다.

(1) 통일친화적인 북한인권 개선 노력

북한의 변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개개인의 권리의식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상의 혁명’이 동반되어야 한다. 북한 변화의 주체는 북한주민이며, 변화를 촉진하는 힘과 동력도 북한주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물론 외부의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북한 내 변화를 추구하는 대안세력의 형성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주민의 의식 성장과 북한 내 변화 주도세력의 형성 없이는 북한의 자유화와 민주화, 시장화는 지속성과 대안성을 갖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의 북한체제가 변화를 거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정기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향후 북한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변화를 하든 변화의 시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치적 자유나 민주주의, 시장경제화를 수용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치 사회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정권의 변화여부와 무관하게 지금부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리하는 정책과제가 아닌, 일관되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인권의 가치와 정책과제들이 통일 및 대북정책 전반에 적극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과제 내 북한인권 정책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져야 한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전반에 인권의 가치를 주류화(main-streaming)할 필요가 있다.⁶²⁾ 통일친화적인 북한인권 개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과 북한인권 개선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인권친화적인 한반도 통일정책 수립과 통일지향적인 북한인권 개선 노력들을 병행하는 전략과 로드맵이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정책과 북한인권 개선 전략과의 상보성(相補性) 및 연계성(連繫性)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북한의 시장화와 정보화는 북한사회 전반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의 친화성을 증대시켜 통일친화적인 사회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통일친화적인 북한인권 개선 노력은 북한주민들의 권리의식을 깨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2)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국내 통일공감대 확산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통일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국내 통일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으로 아래와 같은 구체적 사안을 언급하려 한다.

(가) 통일문화콘텐츠 구축 및 활용

‘통일문화콘텐츠’는 ‘사람의 통일’에 기초한 통일문화를 건설함으로써 통일의 시점을 견인하고 나아가 남북의 사회문화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의미한다.⁶³⁾ 이러한 통일문화콘텐츠

⁶²⁾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p. 38.

⁶³⁾ 정진아 외, 『통일문화콘텐츠 희(希) 스토리』 (서울: 박이정, 2016), p. 78.

는 인문정신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사회적 각성을 촉발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을 보다 풍부하게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통일문화 콘텐츠들은 역사적 상흔에 대한 남북 상호 간의 화해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남북의 적대적 분열의 극복과 평화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게 한다.⁶⁴⁾ 따라서 정서적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해선 통일문화콘텐츠의 구축과 활용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1) 남북 설화의 DB 구축 및 활용

남북의 설화는 남북이 분단되기 이전의 한반도 구성원들의 정서와 생활문화적 공통성을 담고 있는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기에는 한반도의 역사가 만들어진 여러 인문적 가치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반도 주민들의 보편적 정서가 가미된 여러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남북의 설화는 남북의 적대성을 넘어서는 소통과 화해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들이다. ‘옛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소중한 스토리텔링들은 남북의 분단극복과 통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고민을 확장시킨다. 따라서 남북 설화에 대한 발굴과 보급, 사회적 서비스 시스템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남북 설화를 DB화하여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 구축하고 이를 서비스하는 한편, 이러한 설화들을 통일교육에 활용한다고 한다면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일교육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2) 남북 민속문화의 재발굴과 보급

이와 비슷하게 남북 민속문화의 발굴과 보급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분단 이전과 이후 남북이 서로 보존하고 발전시켜온 민속문화는 남북

⁶⁴⁾ 위의 책, pp. 151~152.

의 차이는 물론이고 공통성을 드러내줄 수 있는 소중한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민속문화는 단순히 남북 주민의 가치와 정서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주민의 몸과 마음에 체화된 민족적 전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에 분단 이후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민속문화를 발굴하고 이를 정리해서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남북 민속문화에서 드러나는 그 차이들을 서로 이해하는 한편 그러한 차이들이 남북 모두에게 공유됨으로써 보다 풍부한 민속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3) DMZ 답사 프로그램 개발

DMZ는 현재 남북의 분단을 가장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소인 동시에, 남북의 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장소이다. 특히 DMZ는 인간과 역사의 상호 이해, 인간과 환경의 공존, 남과 북의 화해를 고민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적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DMZ 답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활동은 남북의 정서적 통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⁶⁵⁾ 이를테면 DMZ를 답사하면서 이곳을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재인식하는 과정은 결국 남북의 상호소통을 위한 공통의 가치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남북의 사회문화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⁶⁵⁾ 박영균 외, 『생명·평화·치유의 DMZ 디지털 스토리텔링』, pp. 183~185.

(나) 역사적 트라우마 치유

1) 분단 적대성 지표 개발

분단극복과 통일의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남북 주민 간의 원만한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상호 간의 적대성을 해소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막연하게 적대성의 정도를 추측하는 것으로는 실효성을 지닌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기 힘들다. 정확하게 어떤 지점에서 어떤 요소가 개입하였을 때 적대성이 고조·완화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분단의 적대성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로서 '분단 적대성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2) 통합서사를 활용한 인문학적 치유 프로그램

통합서사는 분단의 적대성에 기반한 분단서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상호 간의 소통과 화해,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통합서사는 분단과 전쟁의 역사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접근하면서 이해하는 자기-서사로 이해된다. 특히 이러한 서사는 역사적 트라우마가 낳은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하면서도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그 치유방안을 찾고 있는 분단문학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단지 문학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토론의 형식은 실질적으로 그 서사가 가진 함의를 몸으로 체감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다. 문학을 자기 스스로 재구성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과는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분단문학을 읽고 연극이나 춤 등의 퍼포먼스와 같은 나름의 방식으로 각색하고 재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3) 임상실험의 사례: 분단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나만의 자서전 쓰기'

'나만의 자서전 쓰기'는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기록된 역사가 아니라 자신의 체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사'를 기록한 자서전을

집필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반부는 이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분단의 역사와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로 진행된다. 그리고 중반부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직접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하였던 상처를 중심으로 생애담을 발표한다. 이 과정은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일차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상처의 기억과 대면하기 위함이다. 물론 자신의 상처를 타인들에게 ‘말’하는 과정에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면서 어느 정도의 치유의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이 발표한 내용을 직접 언어로 옮기면서 상처를 객관화하고 그것 역시 자신이 살아온 삶의 역사라는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자신의 서사로 통합한다.

(다) 독일통일 사례를 통한 국내 통일 공감대 확산

독일통일 사례를 통한 북한 인권개선의 응용 및 통일전략을 살펴본 있는데, 북한의 정치범을 비롯하여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한국식 프라이카우프(Freikauf)를 추진할 수 있다면 북한의 인권신장에 기여할 것이 틀림없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때 우리는 공개적 공감대 형성과 비공개적 공감대 형성이라는 두 가지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

비공개적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는 국가 위정자를 비롯하여 여야의 고위 책임자 및 언론 등에 대해서 비밀유지의 컨센서스가 필요함을 언급했었다. 이는 북한 정치범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경우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프라이카우프를 한다고 공개적으로 떠드는 것보다 최대한 조용히 그분들을 자유 대한민국의 품으로 모셔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공개적인 의미에서 국민적 공감대에 대한 원칙은 비공개적 공감대 형성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이때 한국식 프라이카우프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국민에게 보고하고 확인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해결 방식은 자명하다. 국민들에게는 최대한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동의를 구하고 이는 말하자면 ‘열린 비밀(Das offene Geheimnis)’로 다뤄져야 한다. 인간의 기본권 신장에 노력하는 국가가 되도록 교육 체계에 대한 인식이 저변에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지식교육 및 통일교육의 한 부분을 할애해서 국민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 통일연구권의 대국민 교육 역할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또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인권, 즉 집회, 결사, 사상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고 관장되도록 관철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적극 알리도록 연예인과 방송인들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한국식 프라이카우프를 한다고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 체제의 자유성과 민주주의 방식의 훌륭한 점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류의 한 부분을 최근에 일어나는 평화적 촛불집회 등에서 나타난 대한민국 국민의 집회 의식과 표현의 자유 등을 사례로 들어 이를 국제적으로 적극 홍보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평화적 촛불집회의 저력이 한반도 통일 의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 및 학계, 언론, 사회단체 등 여론 지도층의 역할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한 여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청소년 및 청년층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미래에 가져올 통일의 주역은 남북한 청소년과 청년들이 될 것이다. 북한의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역사적 교육과 더불어 통일 한반도에 대한 비전과 이득에 대해 뚜렷한 교육과정을 만들고 적극 홍보하고 교육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에는 통독과정에서 서독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대 동독 통일정책 추구 경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정부도 이를 거울 삼아 국내 기저에서부터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대외적 통일공감대 확산방안

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 입장 차이

앞서 국내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이번에는 대외적 통일공감대 확산방안을 논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들의 한반도통일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논리를 고찰하여 국가별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추진방향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1) 미국⁶⁶⁾

미국은 한국전쟁 이래 60여 년간 한결같이 한국의 가장 가깝고 확실한 동맹국이었으며 한미동맹은 현대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1953년 군사동맹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이제 전략 동맹, 글로벌 동맹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다. 굳건한 동맹의 바탕위에 한미 양국은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데 특히,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지지와 협력이 국제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

⁶⁶⁾ 김동수(부경대학교) 교수의 원고를 바탕으로 정리·재구성 하였음.

I
II
III
IV
V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맹국가 미국의 지지와 협력이 무조건적이며 당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에게 북한은 동북아시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이며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시아의 전략 환경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한국 주도의 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반도 통일에 따른 미국의 비용과 편익의 계산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하여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도의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상당한 재정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또한 북한의 핵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체제의 개발, 배치, 및 유지에도 상당한 금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미국이 지불하고 있는 비용은 단순히 물질적·재정적 비용에 그치지 않으며 상당한 정치·외교적 비용 또한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한국 방위 약속을 이행하고, 동북아 지역 질서유지를 위한 국제정치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비중 있게 고려되고 있다.

군사·안보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미국은 한반도 분단에 상당한 비용을 치르고 있는데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투자 기회의 상실 등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할 수 있다. 한미 FTA를 통해 한층 더 긴밀할 경제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양국의 경제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 때문에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하여 미국의 對한국 투자가 반감되고, 한국의 대외경제가 부정적으로 영향

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지불해야 할 분담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보듯이 미국은 한반도의 분단 상황 자체가 미국에게 상당한 비용을 강요하는 구조이며 따라서 일정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한반도의 통일은 그 비용들을 모두 편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구조적 변화라고 인식하고 있다.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한국 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미국은 주한 미군의 운영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또한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추구하는 미국의 세계 안보 전략에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보다 큰 틀에서 보자면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미국은 동북아 지역 및 아태지역 전략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걸림돌이었던 북한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협력적인 미중 관계의 발전도 도모할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북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지역적 차원의 다자안보협의체를 현실화하고, 유럽과 안정된 다자안보협의체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은 경제·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안보 위협과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동안 국방·안보를 위해 투자되었던 비용의 상당부분을 경제적 투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더구나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재건사업에 미국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한미 FTA를 북한 지역까지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 지역의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의 기회도 제공될 수 있다. 통일한국의 등장은

I
II
III
IV
V

북한 지역, 중국의 동북3성 지역,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 지역을 연계하는 3각 개발을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과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된다면 동북아시아 경제 체제를 미국의 가치 확산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편익들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아니라 몇 가지의 중요한 조건들 하에서 가능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통일한국의 등장이 자칫 미국의 국익을 해칠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아무리 한국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통일한국의 등장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

우선적으로 미국은 공식적으로 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성명에도 담겨 있다.⁶⁷⁾ 미국의 입장에서 통일한국은 미국과 국가의 가치와 체제의 원리를 공유하는 국가이기를 원하고 미국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없더라도 이러한 기초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한국 주도로 통일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큰 전제의 위에서 한미관계의 틀이 마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통일한국이 비핵화된 국가이기를 원한다. 이것은 곧 한반도가 북한의 핵문제가 완벽히 해결된 이후에 통일되기를 원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통일이 된 이후에는 혹시라도 남아 있는 북한의 핵무기와 핵무기의 개발기술, 핵물질 등이 완벽하게 처리되기를 원하고 그것들이 불량국가나 비국가 단체의 수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

67)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선언 전문,” 『연합뉴스』, 2013.5.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247208>>. (검색일: 2017.1.10.).

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비확산과 비핵화는 미국의 세계 전략을 구성하는 중요한 원칙의 하나라는 것을 감안할 때 미국이 비핵화된 통일한국을 원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통일한국의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적지 않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 편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와 중국과의 물리적 거리, 북한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통일과정에서 중국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한미 간의 협력 관계를 해칠 정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중 관계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상으로 긴밀해진다는 것은 통일한국의 등장 이후 형성될 새로운 동북아 질서가 미국의 이익과 지역의 안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통일한국의 등장이 안보·군사·경제·사회 등 여러 측면에서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몇 가지 점에서 우려를 갖고 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전략과 세부적인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2) 중국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공식입장은 한반도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지지이다.⁶⁸⁾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는 이유는 한반도

⁶⁸⁾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 제5조는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지지한다. 중국은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의 분단보다 통일이 외세의 개입 여지를 축소시킴으로써 안보적 불안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점, 한반도 통일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중국의 번영 및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유리한 점,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통일에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에 근거하고 있다.⁶⁹⁾

그러나 중국은 통일의 가능성이란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의 통일과정은 무력충돌 내지는 급격한 변혁이 불가피한 점, 한국 주도의 통일은 잠재적 경쟁국인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통일한국을 의미하며, 이는 한중관계가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점, 한반도의 통일이 조선족 등 중국 내 소수민족의 민족주의를 자극할 수 있는 점, 통일한국은 간도·북중국경조약 승계문제 등 복잡한 국제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부담도 갖고 있다.⁷⁰⁾

이를 통해 볼 때, 중국이 지지하는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 당사자 간 평화적 합의통일을 의미한다. 즉, 중국은 외세에 의한 비자주적 통일이나 무력에 의한 통일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통일은 통일과정에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무관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출현한 통일한국의 정책이 중국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서 자국의 영향력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한중수교 공동성명』, 제5조 (1992).

69) 陳龍山, “朝鮮半島統一問題略論,” 『東北亞研究』, 1999年 第2期; 張璉瑰, “朝鮮半島的統一與中國,” 『當代亞太』, 2004年 第5期.

70) Jun Byoung-kon and Kim Jang-ho, “China’s Role and Perception of a Unified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5, no. 3 (2013), p. 378.

확대를 추구하려는 한반도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 및 보유를 반대하면서도 북핵문제의 강제적 해결 방식보다 6자회담을 통한 안정적 관리와 협상을 통한 장기적 해결 구상을 갖고 있다.⁷¹⁾ 중국은 한반도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자국의 이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면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한반도의 단기적이고 급격한 통일을 반대하고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통일을 선호한다. 중국은 불확실성이 큰 한반도의 상황에서 점진적인 통일과정을 통해 남북한 및 주변국과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중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구도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등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중국은 북한의 붕괴와 급변으로 인한 한국 주도의 통일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우호협력적인 통일한국의 성립에 찬성할 것이며, 최소한 중립적인 통일한국을 선호할 것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 일본 등의 영향력 하에 통일한국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공식적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해서 북한 붕괴나 흡수통일로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오인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소극적인 정책을 취해왔다. 오히려 남북한 균형적 입장에서 등거리외교를 수행하면서 미국의 대중 견제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북한을 전략적으로 지원, 활용하는 등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행태를 보여 주고 있다. 비록 2013년 2월 3차 북핵 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제재가 이전보다 강화되는 변화를 보였지만, 이는 중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었다기보다 북한을 대화의 장인 6자회담으로 유인하기 위

71) 王聯合, “朝核問題解決路徑的三個層次選擇,” 『現代國際關係』, 2009年 第1期, pp. 20~25.

I
II
III
IV
V

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평가된다.⁷²⁾ 이 점은 2016년 1월 4차와 9월 5차 북핵 실험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즉,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및 한반도의 안정관리가 여전히 우선적 목표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중국은 가능한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 정세의 현상유지를 추구하고 있어 한반도 통일과 같은 현상 변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⁷³⁾ 아울러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중 간의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한국은 한미동맹을 유지, 또는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협력을 얻어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과 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반도 통일에 대한 범민족적 의지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한반도 통일이 당위의 문제이고 대세라는 국내외적인 분위기를 고조시켜갈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만이 아닌 중국 국민들 역시 한반도 통일에 대해 비우호적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⁷⁴⁾

따라서 무엇보다 중국 내부의 다양한 대상들에게 한반도 통일 및 한국 주도의 통일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중국정부의 정책을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⁷⁵⁾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정부 차원의 통일외교에 우리의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공공외교적 접근을 확대하고 이를 통일과 결합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72) 전병곤 외, 『한국의 대중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129.

73) 위의 책, p. 130.

74) 한 조사에 의하면, 중국 국민의 36.7%만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고 답한 반면, 반대(10.9%)하거나 지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50.5%)는 의견이 과반을 상회하고 있다. 정재호 외, 『중국을 고민하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1), pp. 46~53.

75) 전병곤 외, 『한국의 대중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p. 145.

(3) 일본

사실 일본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미국과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많지 않다. 현재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한미일 공조체제의 구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특히 아베 정부가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피’를 주장하며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실현은 아베 수상과 같은 보수파가 원하는 전후 처리의 완결을 의미하고, 이는 국제적으로 커다란 역할을 담당할 보통국가 일본의 새출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북일 국교정상화 실현과 통일된 한반도의 출현은 ‘전후 체제’를 벗어난 새로운 일본과 한반도의 새로운 관계 형성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사실 한반도와 일본은 역사적으로 불행한 과거와 함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책임 문제가 자주 언급된다. 즉 일본은 1910~1945년까지 한반도를 식민 통치하였고, 연합국과 한민족의 끊임없는 저항에 굴복하면서 한반도는 1945년에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곧이은 민족 분단의 아픔 속에 한반도 분단에 일본의 책임이 있다는 일부의 논의가 한국 내에 존재한다.

한반도 분단의 책임 소재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은 ‘일본에게 책임 없음’이다. 물론 1995년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수상은 국회에서 “일본국민으로서 역사적 책임이 있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자민당 등 보수세력이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자 다음날 바로 발언을 전면적으로 취소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는 당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외상도 ‘직접적 책임은 없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이와 같이 한반도 분단의 책임을 일본 정부에 전적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일본은 한반도 분단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함께 향후 한반도 통일을 향한 일정 정도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

한편, 한반도 통일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 한국과 미국 내에서는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 통일 과정에 따르는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에 대한 비교 분석, 통일 이후의 한반도 통일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한반도 통일을 논의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논의가 전개된다. 즉, 북한의 실질적 붕괴를 전제로 한반도 통일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 일본 내에서의 전반적인 논의이다. 이것은 북한체제 및 그 행태 자체를 하나의 비정상적인 국가로 간주하고 있는 일본 내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일본은 북한 붕괴로 인한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북한 문제가 일본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⁷⁶⁾

이와 같이 한반도 통일 문제는 일본과 동아시아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부정적인 평가로 나뉜다. 긍정적인 시각은 첫째, 남북한 대결 상황의 종결은 한반도의 안정은 물론, 일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즉 한반도 통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적 위협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며, 통일한국이 출현하더라도 현재의 북한위협보다는 비교적 위협 수준이 낮은 인접국의 출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둘째, 통일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는 일본과 경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⁷⁷⁾

76) 김진하 외,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 199.

77) 이기태 외, 『한국의 대일본 통일공공외교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 28.

반면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우려이다. 즉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군사강국의 출현을 의미하며 일본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통일한국의 경제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기술, 자금과 북한의 자원, 노동력이 결합할 경우 통일한국의 경제는 일본의 유력한 수출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셋째, 통일한국은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관계 강화를 중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통일한국의 일본 경시를 의미하는 것임과 동시에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의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⁷⁸⁾

한반도 통일에 대해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고 바람직한 통일 형태는 남북한이 합의하에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즉, 한반도에 남북 공존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 노선의 온건화가 한반도 통일의 전제 조건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통일 시나리오를 상정한 대북 정책을 구체적으로 준비했고 북한 최고 지도자와 합의에 이른 적이 있다. 바로 2002년 ‘북일평양선언’이다.

일본 정부는 2005년 2월 19일에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공동발표문에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지지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실질적으로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추인하는 현상유지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일본의 일반 국민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⁷⁹⁾ 하지만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 및 정치인들의 한반도 통일에

⁷⁸⁾ 위의 책, p. 77.

⁷⁹⁾ 이노구치 다카시,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일본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편,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4국의 입장 및 역할』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 65.

대한 견해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일본은 통일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한다. 둘째, 일본은 통일한국의 반일 내셔널리즘에 반대한다. 셋째, 일본은 통일한국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할 것을 환영한다.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교수도 “일본은 한국 주도 통일을 지지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대다수 학자 및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3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우선 통일된 한반도에 핵이 없어야 하고, 통일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통일된 한반도가 일본과 선린우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3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일본은 통일이 언제 이뤄지든 환영할 것이라고 주장한다.⁸⁰⁾

사실 일본은 한반도 통일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입장은 아니지만, 통일 문제가 가시화되는 단계에서 통일 과정에서의 군사 분쟁에 대한 우려, 통일 이후의 핵 폐기 필요성, 통일에 즈음한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일본은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에 대해 관심이 많다. 따라서 학계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가 다수 발표되고 있다. 사실 통일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본 학계는 대체로 한국 주도, 그리고 군사 작전을 통한 통일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 경우 주일미군의 출동을 생각할 수 있고 이는 일본과 연관성을 가진 사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한국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은 통일의 필수 조건이다. 한국의 일부는 통일 이후 핵보유국의 유혹에 동의하고 있지만, 통일한국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은 일본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국제사회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⁸⁰⁾ “‘김정은 없는 북한’ 국제적 공감대 필요,” 『세계일보』, 2016.10.6.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시 일본의 자금 협력의 문제이다. 통일한국은 1965년 일본의 대한경제협력을 염두에 두고 일본에게 북한 지역의 경제개발에 관한 상당한 자금 협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일본도 기본적으로는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한반도의 남북 분단으로 일본은 북한 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 지출, 일본인 납치 문제라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남북 통일은 일본의 이익이라는 것이다.⁸¹⁾

일본은 남북 통일에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입장은 아니지만, 통일에 앞서 군사 작전에서 주일미군기지가 완수해야 할 역할, 통일 이후의 광범위한 경제 지원에 있어 일본의 중요성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남북 통일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일본은 중요한 자금 공급자가 될 수 있다. 일본은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한국에 6~8억 달러의 개발원조를 했지만, 이것은 현재 가치로 100억 달러에 상당한다. 일본이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그만큼의 지원을 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사실 일본이 한반도 통일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통일 이후의 국가 형태에 관한 것이다. 통일 이후의 국가가 핵을 폐기하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희망한다. 통일 이후의 국가가 중국으로 경사(傾斜)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통일 이후 국가 모습을 논의해서 명확히 정한 후 이를 일본과 미국에 설명해야 한다. 특히 아직 한반도 통일 문제가 일본에서 구체적인 외교 정책 과제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⁸¹⁾ Bruce Klingner, "Allies should include Japan in Korea Unification Plans," *Backgrounder*, no. 3065 (The Heritage Foundation, 2015), pp. 1~4.

I
II
III
IV
V

(4) 러시아⁸²⁾

러시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찬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떠한 통일’에 대한 찬성이냐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한국 주도 통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한국 주도 혹은 흡수 통일 방식에 대한 속내를 살펴보면 매우 복잡하다.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을 필연적으로 생각하지만 방식으로는 양자의 이해와 국제사회의 이해가 반영된 조율된 통일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지도부의 수차례에 걸친 언급에서도 나타난다.⁸³⁾ 푸틴뿐 아니라 바실리 미헤예프 등과 같은 러시아의 국제문제 전문가들과 관리들은 한반도의 통일은 필연적일 것⁸⁴⁾이며 이것이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공식·비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기본 입장을 자세히 뜯어보면 조건이 여럿 개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러시아는 한반도의 통일이 무력이 아닌 ‘평화적’으로 그리고 ‘합의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비평화적이며 남북한 모두의 이해를 반영한 통일을 지지한다. 국제 사회와의 합의가 배제된 급격한 방식, 그리고 한쪽 당사자에게만 의한 통일은 반대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현상 유지 및 긴장 완화 조치에 방점을 찍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6자회담이나 북한 핵 이슈를 둘러싼 각종

⁸²⁾ 김석환(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원고를 바탕으로 정리·재구성 하였음.

⁸³⁾ 역대 러시아 대통령들은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는 1990년 12월 이루어진 노태우-고르바초프 회담 때부터 지속되어 왔다. 푸틴 대통령은 2013년 11월 한국 방문을 앞두고 모스크바에서 KBS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반도 통일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 한다”고 말할 바 있다. “Russia supports Korea’s drive for unification as ‘natural process’-Putin,” 『RT』, November 12, 2013.

⁸⁴⁾ 알렉산드르 단킨, 『글로벌 전망 2030: 러시아의 전략적 시각』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2), pp. 394~398.

국제 회의, 그리고 한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 등에서 여러 차례 목격된 바 있다. 푸틴 대통령도 가장 최근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가졌던 2013년의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⁸⁵⁾

러시아는 한반도의 현상 변경을 초래하는 일체의 무력적 행동의 반대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유지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상당기간 불변할 한반도 관련 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러시아는 한반도의 통일이 러시아의 국익과 전략적 이해에 저해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통일 한반도’를 환영한다.

러시아의 국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통일 움직임이 작용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는 러시아 외교안보 정책의 기조와도 연계되며 한반도 통일 및 인접 국경 지역의 변경에 대한 기본 입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경직되어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주한 미군의 문제와 한미 동맹의 미래 등과도 연계된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존재가 동북아 세력 균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패권국 지위

⁸⁵⁾ 당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언론을 통해 공개된 보도문을 통해 KBS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푸틴은 이 인터뷰에서 한반도 통일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를 지지하지만 평화적이고 남북한 모두의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래는 푸틴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혹은 전제 조건을 보도한 KBS의 한글 보도문과 RT의 영어 보도문 내용 중 일부다. “러시아는 당연히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지합니다. 통일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양측의 이익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통일의 과정이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때 지지할 것입니다.” “시사기획 창: KBS 단독대담 ‘푸틴 극동의 문을 열다’, 『KBS NEWS』, 2013.11.10. “But I proceed from the certitude that it must be absolutely peaceful and the interests of both the northern and southern parts of the peninsula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Russia supports Korea’s drive for unification as ‘natural process’-Putin,” 『RT』, November 12, 2013.

I
II
III
IV
V

에 대한 향수가 강한 러시아 민족주의 성향 군부 인사들 및 안보 전문가들 일부에 이러한 견해가 강하다.

대표적인 인물이 레오니드 이바쇼프다. 그는 북한을 지정학적 관점에서 러시아의 우호적 국가로서 미국 및 일본과의 대립에서 러시아 편에 선 국가로 간주하면서 북한을 일종의 범퍼 존으로 보고 있다.⁸⁶⁾ 이바쇼프와는 다르지만 러시아 국익의 관점에서 한-러 양국 관계의 한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러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견해는 게오르기 톨로라야 등에서 표출되고 있다.⁸⁷⁾

물론 러시아가 더 이상 북한을 범퍼 국가로 보지 않고 동북아 핵질서 및 평화 유지에 잠재적 위협 및 도전 세력이라고 인식하는 견해들도 있다.⁸⁸⁾ 이는 학계뿐 아니라 러시아 내 정당 세력들 사이에서도 관찰되며 한반도 인접 지역인 극동 지역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다.⁸⁹⁾ 러시아의 정당 야블로코당의 아무르 지역당이 북한 핵 실험이 재개된 2013년 2월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다”라는 견해를 피력한 것들이 대표적이다.⁹⁰⁾

⁸⁶⁾ Leonid Ivashov, “Severnuiu Koreiu ne slomit,” Леонид Ивашов, <<http://www.prawda.ru/video/pravdablog/11695.html>>. (검색일: 201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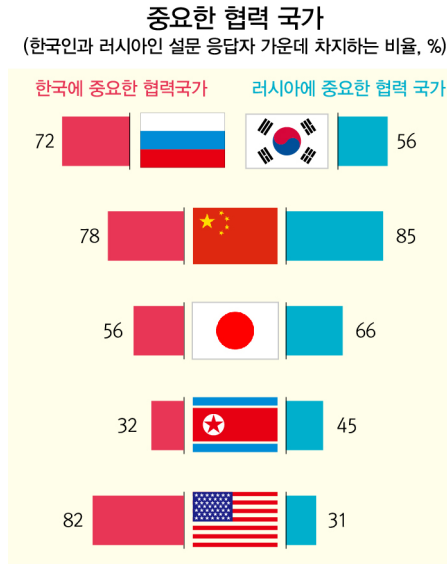
⁸⁷⁾ V. Nokonov and G. Toloraia, A. Vorontsov eds., *Koreiskii Poluostrov: Vyzovy i Vozmozhnosti dlia Rossii: Kollektivnyi Doklad Ekspertov dlia Rossiiskogo Natsional'nogo Komiteta Aziatsko-Tikhookeanskogo Soveta Sotrudnichestva po Bezopasnosti* (ATSSB), Collective expert report for the Russian National Committee of the Asia-Pacific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CSCAP) on the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Russia (Moscow: MGU, 2011).

⁸⁸⁾ Alexander Vorontsov, “Current Russia-North Korea Relations: Challenges and Achievements,” Working Papers by CEAP visiting Fellows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7).

⁸⁹⁾ “Sudite sami” Program, October 12, 2006 (Transcript), *TV Channel 1*, <<http://www.nemtsov.ru/?id=705032&PHPSESSID=1d417e1d4e584dafaacf40b173cc3626>>. (검색일: 2017.1.8.)

하지만 적어도 지난 30여 년간 필자가 직접 접촉해 본 러시아 외교부 및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총체적 인식은 비록 북한이 문제국가이지만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국익에 반하는 국가는 아니라는 정서가 강하다. 이러한 정서는 특히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는 국방 및 안보 분야 전문가들에 많았다. 또한 일반인들의 정서도 여기에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아래의 <그림Ⅳ-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와 러시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프치옴’이 2016년에 진행한 ‘한-러 양국 국민 상호 인식 조사: 미래협력전망’에서 러시아 응답자들 중 45%는 여전히 북한이 협력의 중요한 국가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림 Ⅳ-1 ▶ 한러 양국 국민이 평가하는 자국에 중요한 협력 국가



출처: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한-러 양국 국민 상호 인식 조사: 미래협력전망』 (서울: 도서출판 이환, 2016), p. 27.

⁹⁰⁾ ЭКОНОМУС, February 12, 2013, <<http://www.eco-nomos.ru/2013/03/yabloko-11/>>. (검색일: 2017.1.10.)

I
II
III
IV
V

셋째, 러시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통일 한반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남한 주도의 통일이 구조적 측면에서 필연적일 것으로 예측하는 견해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세계 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IMEMO)가 2011년에 발간한 ‘글로벌 전망 2030’에 피력된 견해다. 당시 IMEMO는 인구, 도시화, 산업구조, 정치 변화 과정 등을 검토해 북한의 붕괴 과정이 가속화하고 전망 기간인 2030년까지 완전한 한반도 통일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지만 “통일과정이 실질적 단계로 접어들 것이며 북한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⁹¹⁾

이러한 입장은 미국의 애틀랜틱 카운슬과 러시아의 IMEMO가 공동으로 작업해 2016년 1월에 발간한 *Global System on the Brink: Pathways toward a New Normal*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이 책에서 연구진들은 “북한 핵 이슈를 둘러싼 한반도 긴장은 관계 당사국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며 궁극적인 해결책은 한반도 통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통일의 과정과 방식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북한 경제의 급격한 붕괴 등으로 인한 남한 주도의 통일을 들고 있다.⁹²⁾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한 주도 통일을 촉진하거나 남한 편에서 북한을 압박해 붕괴시키거나 흡수시키는 데에 있어 러시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다만 러시아는 이러한 과정이 자연스럽고 평화적으로 남북한 양측의 이해를 반영한 조율된 통일이기를 바라며 그 결과가 러시아의 국익과 주변 국제사회 및 세력 균형의 파괴를 가져 오지 않기를 희망하는 입장이다.

91) 알렉산드르 딘킨, 『글로벌 전망 2030: 러시아의 전략적 시각』, p. 394.

92) Mathew Burrows et al., *Global System on the Brink: Pathways toward a New Normal* (Atlantic Council and IMEMO, 2016), p. 14.

나. 국가별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1) 대미국 통일공감대 확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은 한국의 통일외교에 있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자산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한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한반도 통일은 한층 더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확산되어야 한다.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일반대중들 사이에서도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명확한 원칙 또는 방향성이 면밀하게 검토되고 세부추진 계획이 효과적으로 수립되어야만 가능하다. 본 절에서는 미국 내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 방향과 세부추진 계획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가) 추진 방향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대전제는 미국 내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그 전제 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의 통일한국을 건설해 나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1) 대한민국의 통일비전 제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제시하는 통일의 콘텐츠, 즉 통일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정부를 포함하여 미국과 중국을

I
II
III
IV
V

대표하는 국제사회는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어떻게 이뤄나가겠다는 공동의 비전이 부재한 상태이다. 현재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1989년에 초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3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의 현실성 및 실용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다양한 대북정책 및 통일 정책이 시행되어 왔으나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에 역부족이었고 또한 우리 사회 내부에서의 통일 비전에 대한 합의를 확보하는 데도 실패하였다. 통일 비전의 부재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통일외교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전략의 부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통일외교를 전담하는 부서도 없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통일외교와 관련된 명확한 개념도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다. 통일에 대한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는 통일과 관련한 어떠한 정책과 전략도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공감하고 확신할 수 있는 통일에 대한 명확한 비전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통일 비전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할 지라도 최소한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는 통일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에 대한 국내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통일외교, 즉 세계무대에서 우리를 지지해줄 우방을 확보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통일 비전에는 북한 핵에 대한 해결 방안을 비롯하여 통일과정, 그리고 통일 한국의 정체성 및 대외관계에 대한 사항들이 망라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2)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우려 해소에 집중하는 전략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은 한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통일한국이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정치체제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을 전제로 한다면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미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정책과 대중국 관련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이런 주제들에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많은 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에 남아 있을 수 있는 핵 관련 시설과 기술, 물질, 그리고 인력들을 완벽하게 통제함으로써 통일한국이 핵보유국이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북한에는 핵 관련 기술과 인력들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고 통일한국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해야 할 것이다. 비확산이라는 주제는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의 하나의 큰 줄기가 되어 있는 바, 핵보유국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는 것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통일한국이 가져야 하는 하나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국 관계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부터 추진하였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은 수많은 추측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그만큼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경계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통일한국의 대중국 관계는 한반도와 중국의 지리적 거리 때문에라도 미국 대외정책의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통일한국의 등장과 새로운 한중관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한미

I
II
III
IV
V

동맹에 전혀 위협이 될 수 없음을 홍보해 나가야 한다.

세 번째로 미국이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는 북한주민의 인권이다. 미 의회는 몇 년 전에 이미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고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표명해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 문제는 미국의 일반 국민들도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반도 통일의 공감대 확대를 위한 전략에 안성맞춤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미국인들에게 북한정권의 비민주성과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설득해 나간다면 한반도 통일의 공감대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다원화된 통일 외교의 확립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한국의 통일외교를 강화해 나간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한국의 통일외교가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의 통일외교가 정부 주도의 매우 단선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루어진 관계로 미국 사회에서 정부의 한반도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회, 싱크탱크, 민간전문가 등과 같은 다양한 루트를 통한 통일 외교 활동이 극히 부진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은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체제이며 대북한 관련 중요한 정책의 경우 의회의 역할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워싱턴에 상주하는 여러 싱크탱크들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정책지식들을 생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한반도 통일을 위한 미국 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작업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와 싱크탱크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 의회와 민간전문가 등 행정부 외부에서 정부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친한(親韓)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 네트워크는 향후 한국의 통일외교에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세부 추진방안

위에서 논의한 추진 방향 하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 통일 비전 확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공식 통일방안은 1989년 노태우 정부당시 초안을 마련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그러나 그 이후 30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 국내적·국제적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음에 따라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비전의 정립이 필요한 때가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 등 국내의 주요 행위자들 대표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 내에서는 통일 비전을 세우는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새로운 통일 비전의 초안을 세우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통일 비전을 세우는 작업은 그 속성상 어느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며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가 요구될 것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통일에 대한 비전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통일 비전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이 과정을 정부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초안 단계에서부터 정부, 전문가 집단, 그리고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우리 국민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통일 한국의 비전을 수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통일 비전에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지만,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정치체제에 관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통일한국은 대내적으로 자유민주적 토대 위에 인간의 존엄성이 구현되고 남북한 주민 모두의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는 복지국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하되 일정 범위 내에서의 합리적인 국가개입을 바탕으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간,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간 적절할 균형을 이루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통일한국은 평화와 번영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비핵화 정책을 천명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평화 협력에 기여할 것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한국은 평화적으로 통일을 달성하고 평화적 분쟁해결을 대외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동북아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을 대표하여 패권적 지위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통일한국이 이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촉진자 역할을 할 것을 천명함으로써 통일한국이 중국과 급속히 가까워질 것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도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 정치외교·경제적 정체성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정체성도 생각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통일한국의 비전들을 정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으며 전문가 및 여러 사회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2) 다자회담의 모색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에 시작된 6자회담은 2006년을 끝으로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 2005년에는 9·19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지만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을 계기로 6자회담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한 체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는 남북문제의 성격 못지않게 미북관계의 성격도 강하게 들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6자회담은 여전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6자회담을 비롯한 북핵 문제와 관련된 당사국들의 다자회담은 현재로서 북핵문제의 유일한 해결창구이다. 2006년 6자회담이 중단된 이후로 북한은 현재까지 5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고 다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 기간 동안 6자회담은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할 수 있는 채널을 가동하지 않았고 마땅한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무력사용을 제외한 거의 유일한 정책옵션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6자회담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물론 기존 6자회담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의 다자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4자(남한과 북한, 중국, 그리고 미국)회담이나 미국과 북한 간의 양자회담도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적으로는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를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은 북핵문제를 해결할 창구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통일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총괄적으로 논의할 장이 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직후 1990년 서독의 콜 수상은 주변국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2+4(동·서독,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회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당시 독일통일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한 2+4 회담은 통일독일과 폴란드와의 국경문제, 통일독일에서의 2차 대전 전승 4개국의 법적 지위문제, 통일 이후 미·소 양국군 철수문제, 그리고 통일독일의 군사적 지위문제 등을 다루었다. 결국 1990년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4차 2+4 회담에서 “독일에 관한 최종 합의협정”에 조인하게 되었다.⁹³⁾ 여기서 독일통일과 관련하여 주변국들에게 민감한 사안들을 합의하고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6자회담을 비롯한 다자회담은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주변국들과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통일과정 또는 통일 이후의 문제까지도 폭넓게 다룰 수 있으며 주변국들이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우려를 이 채널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비핵화나 통일 이후 중국과의 관계, 또는 주한미군의 지위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관해서도 관련국들의 의견을 듣고 입장을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다자회담이 담당할 수 있다.

3) 북한 인권문제의 이슈화

핵과 장거리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이슈 이외에 북한이 세계로부터 관심을 끄는 주제는 단연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미 UN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인권특별보좌관 보고서를 통하여 전 세계에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태를 고발한 바 있다.⁹⁴⁾ 북한 인권 보고서는 유엔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고문, 공개 처형, 자의적 구금, 적법절차 및 법치주의의 부재,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⁹³⁾ 정용길, “통일 전후의 동·서독 및 주변국 관계가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한독 사회과학논총』, 제17권 제2호 (2007), p. 23.

⁹⁴⁾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서울: 통일연구원, 2013).

사형, 연좌제, 다수의 정치범수용소 존재 및 과도한 강제 노동 등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증대한 침해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그리고 보다 강경한 태도로 우려를 표명해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서 유엔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증대하고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북한 당국과 국제 공동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는 유엔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 지구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답게 미국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이다. 미국 의회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하여 2004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고 2012년에는 이 법을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조차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가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필요성 홍보에 치중해 있으며 북한인권 개선의 필요성 홍보 등의 일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⁹⁵⁾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함께 북한주민의 참혹한 인권의 실상을 알림으로써 미국 사회 내부로부터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효과적으로 한국 주도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4) 통일 공공외교의 확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 공감대 확대는 곧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의

⁹⁵⁾ 박영호 외, 『한국의 對미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p. 118~119.

I
II
III
IV
V

확대를 의미한다. 정부 간에 이루어지는 공식 외교와는 다르게 공공외교는 해당국의 정부, 주요 단체 및 기관, 주요 정치인·관료뿐 아니라, 언론, 학계, NGO, 기업계 등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를 말한다. 통일 공공외교는 이 대상목표를 상대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한국 주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켜 통일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일을 일컫는다.⁹⁶⁾ 대미 통일 공감대 확대는 통일외교가 정부 간 외교 못지않게 공공외교 영역으로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이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미 통일 공공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수행하고 있는 통일 관련 공공외교는 정부 간 외교에 치중되어 있으며 민간 부분에 대한 공공외교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주요 행위자만 보더라도 통일부와 외교부 등 정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마저도 부처 간 역할분담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협의 방식도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이다. 한국의 경우 공공외교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담당하는 통일 공공외교의 기능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통일외교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통일공공외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논의를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공공외교를 전담하는 차관이 존재하며, 해외에 설치된 모든 외교공관에 공공외교를 전담하는 국장급 부서를 두고 있다. 통일공공외교의 특징을 고려하여 정부가 주도하되 다양한 민간기관도 참여시킨 협의체를 설치하고 통일공공외교를 종합적으로 관리

⁹⁶⁾ 위의 책, p. 7.

및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미국 내 한인 사회의 역량 강화

미국에서 한인 이민의 역사는 1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에서 한인 커뮤니티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아직도 지극히 미미하다. LA나 뉴욕, 시카고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인 타운이 형성되어 있고 한인 타운이 경제활동과 생활기반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이민이 시작된 이후 한인 사회는 백인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그다지 큰 의지도 갖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향은 이제 바뀔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미국 주류 사회에 진입하여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민 사회가 미국 정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오바마 정부의 대쿠바 정책 전환에도 미국 내 쿠바 이민사회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쿠바 이민자들은 일찍부터 정치적 영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81년 재미쿠바민족재단(the Cuban American National Foundation, CANF)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이때부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주로 쿠바에 대한 보수정책을 지지하면서 1992년 ‘쿠바민주화법’과 1996년 ‘쿠바자유민주연대법(일명 헬름스-버튼법)’ 등 쿠바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재미쿠바민족재단과 그것의 정치활동위원회인 자유쿠바정치위원회(Free Cuba PAC)은 선거 때마다 특정 후보에게 막대한 금액의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특히, 쿠바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플로리다의 경우는 그들의 영향력이 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수적인 성향이 주류를 이루던 쿠바 이민사회에 기성세대와는 다른

성향의 젊은 세대가 등장하고 이들이 미국의 쿠바와의 관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면서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對쿠바 전략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 한인 커뮤니티는 아직 정치적 영향력을 결집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이 부족하다. 미국 내 200만 명의 규모를 갖고 있는 한인 커뮤니티는 이제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모색할 때가 되었다. 한인 이익 단체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로컬 정치부터 관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 한국 또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쿠바 이민자단체와 같이 한인 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대중국 통일공감대 확산방안

(가) 추진 방향

첫째, 추진목표의 설정 및 공유이다. 한국의 통일공감대 국제적 확산의 핵심 목표는 국제사회가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주도의 통일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시적 목표 하에서 대중국 통일공감대 확산의 목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협조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획득할 수 있는 맞춤형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안정과 비핵화를 통한 평화통일 실현은 우리의 핵심 외교목표인 바, 이를 담아낼 수 있는 공공외교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다시 중국에 적용한 대중국 통일공감대 확산의 목표를 수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과 우리 주도의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우선 중국인들이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목표가 설정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우리의 대중국 통일공감대 확산의 목표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중국 내에 한반도 ‘통일부담론’을 완화시키고 ‘통일편익론’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정된 목표는 대중국 통일공감대 확산을 담당하는 각 주체들이 모두 공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다양한 주체들이 각기 다양한 영역과 특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원적인 목표를 강요할 수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각 주체 간 대중국 통일공감대 확산 목표에 대한 합의된 인식을 바탕으로 각 주체별 특성과 영역별 활동에 반영해야 체계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체계적·장기적 관리이다. 대중국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대상들에 대한 면밀하고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책적 영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전문가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가 등을 선별하고 특징을 분석해야 한다. 또한 광활한 지역에 넓게 포진해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와 특성도 파악해야 하며, 세대별, 소득별, 지역별 분류를 통해 한국 주도의 통일공감대 확산에 효과적이고 필요한 대상을 선별해야 한다. 대상의 선정 작업도 중요하지만, 선정된 대상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리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셋째, 여론주도층 위주, 일반대중을 보조로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대중국 통일공감대 확산은 여론주도층을 주요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물론 우리의 대북 및 통일정책을 중국 국민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식을 갖추고 여론 및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정치체제와 북한과의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한반도 문제와 통일 관련 문제에 대해

I
II
III
IV
V

서로 상이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대중국 통일공감대 확산 전략의 핵심 대상은 여론주도층이 맞다.

그러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전 중국인의 우호적 감정은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을 전 중국인으로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중국의 정책, 특히 한반도 통일 관련 정책에 대한 국내 여론의 영향력이 일반 민주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언론에 대한 통제력은 상대적으로 강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정책 및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있는 학자 및 관료 등 전문가를 주요 타깃으로, 일반대중을 보조 타깃으로 삼되, 향후 국내여론이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의 증가 추세를 반영, 중장기적으로는 주 타깃을 여론주도층에서 일반대중으로 점차 확산하는 방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넷째, 중국 특성을 고려한 다원적 접근이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통일 공공외교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중국의 특성에 적용 가능하도록 보다 정교하게 가공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점진적 한국 주도의 통일방식을 기대하는 미국 및 일본 등 주변국과 달리 중국은 점진적 남북합의 통일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과 전통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했었던 정서와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중국 내에 상대적으로 높게 포진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 주도의 점진적 통일을 지지할 수 있도록 통일편익론을 확산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북한만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기보다 한반도를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국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한국의 대북정책과 평화적 통일과정의 구체적 내용과 진척과정에 따른 설득 및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중국어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며, 중국

어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발굴해야 한다. 한국이 대중국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는 대부분 한국어 및 영어를 위주로 하며, 중국어의 사용은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통일공감대 확산 활동은 중국의 일부 전문가와 조선족, 그리고 한국어에 관심 있는 일부 중국인에 한정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국 통일공감대 확산의 대상은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존 접근은 특정 지역이나 기관 및 전문가 등에 편중되어 왔다. 따라서 중국 내 정책 및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의 풀을 확대, 확충하고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향후 중국의 주역으로 성장할 차세대를 발굴하고 친한 인사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국적이긴 하나 중국인보다 통일에 관심이 많고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 조선족도 그 특성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전문가나 중국 유학생도 우리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처럼 다양한 대상들에 대한 접근을 다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다양한 방안들을 놓고 필요시 또는 상황에 맞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통일공감대 확산 대상의 다변화는 대중국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이 중국 국민의 인식 변화를 유도해 한반도 통일에 유리하도록 중국의 협조를 얻으려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다섯째, 국제사회와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 대중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효과는 약하더라도 국제사회를 통한 우회 전략이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 주도의 통일에 중국의 지지를 얻는 것이 국제적 지지 확산에 관건이지만, 역으로 국제적 지지의 확산이 중국의 지지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I
II
III
IV
V

따라서 국제사회를 통한 대중국 통일공감대 확산은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을 통한 중국의 지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보완,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안과 함께 이러한 방안이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국가별 방안과 상호 조응되는 방향을 유지해야 하며,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 대한 포괄적인 추진 방안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반도 통일에 대한 당사국인 한국의 주장을 중국이 수용하기 어렵거나 설득력이 약한 측면도 존재할 수 있으나,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과 대세에 접하게 될 경우 중국도 자기고집만 부릴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스스로의 인식을 전환하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G2로 부상하는 중국은 국제사회의 책임대국 이미지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한중관계가 어려울 경우, 우리의 대중국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류협력 채널이 제약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도 국제사회 통한 우회 방안은 유용하다.

(나) 세부 추진방안

1) 체계적 통합관리를 통한 인물지형도 작성

지금까지 한국의 대중국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 및 성과가 가장 활발한 영역은 지식 외교 분야이다.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 및 내용은 중복과 산발적인 특성 속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이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우선 국내 주요 정책연구기관의 중국 담당 전문가들만이라도 상호 협업을 통한 통합적 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⁹⁷⁾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전병곤 외, 『한국의 대중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13).

구체적으로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 국방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연구기관에서 중국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중국과의 교류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중복을 방지하고 사전 논의를 통한 상호협력 및 역할분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업무는 아무래도 국책연구기관의 학자들이 담당하는 것이 민간 학자들이 담당하는 것보다 더 적합할 수 있다. 다만, 사안별로 필요할 경우 대학의 중국 관련 연구소나 학회 차원의 민간학자들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되, 일부 민간 학자들이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이나 통일 관련 이슈를 발굴하고, 그동안 민감 사안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북한인권 문제나 북한급변 및 붕괴 시 협력 방안들을 의제로 설정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중국 통일공감대의 형성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의 전환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의 통일 관련 내용 및 이슈를 중국에 일방적으로 전달, 이해시키기보다 중국의 통일문제와 한반도 통일 관련 내용 및 이슈를 함께 논의하고 공통점을 찾아나가는 것도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중국 통일공감대 확산 대상인 중국의 전문가와 기관 등에 관한 국내 연구와 교류는 특정 개인과 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바, 국내 정책연구기관의 중국 담당 연구자들이 자료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식공공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전문가의 현황, 성향, 영향력, 전문분야(영역 및 이슈)에 대해 심층분석하고 전문가별 출신 지역, 경력, 학맥 등 관계망(network)을 지속 추적한 인물분류도를 작성해 DB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효율적 정책협력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다목적으로

I
II
III
IV
V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중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식 분야의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에도 유용할 수 있다.

2) 중국어 활용방안

중국인에게 북핵 및 대북정책 등 한반도의 현실을 이해시키고 한반도 통일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국인들의 모국어인 중국어를 활용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 방안의 주요 타깃은 일반 국민은 물론 전문가들도 해당된다. 주요 목표는 한국 및 한국 주도의 통일에 관한 객관적 정보의 제공을 통한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우호적 여론 확산이다. 이를 위해 추진해야 할 내용은 중국어본으로 된 책자 및 자료의 배포, 중국어 방송 및 언론보도의 양과 질 확충, 중국어 사용 가능자 양성 등이 있다.

먼저, 중국어본 책자는 일반 대중용과 전문가용으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즉, 일반 대중용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의 평화통일정책을 쉽게 풀어쓴 내용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나, 전문가용은 국내 민간대학의 중국 관련 연구소가 계간지 형태로 발간하되, 학술 논문이 아닌 칼럼이나 오피니언 형식 등 한국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⁹⁸⁾

주제는 통일 관련 사안만이 아닌 한국이해 및 한중관계 등을 포괄하되 중국학자를 포함하는 외국학자에게도 개방함으로써 한중 상호 간의 객관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자료의 배포는 한국에서 직접 중국으로 우송할 경우 유실률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용은 중국의 배포 대행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반대중용은 중국 주재 공관이나 기업 또는 중국인을 상대하는 교민 및 조선족 등을

⁹⁸⁾ 이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성균 중국연구소에서 발간하는 『中國觀察』을 들 수 있다.

이용하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중국어 방송 및 언론보도의 양과 질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다수의 주요 언론들은 제한적이거나 인터넷 상에서 중국어판을 운용하고 있으나 아직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통일 관련 연구소나 단체들 중에서 중국어 자료나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활용하는 곳은 드문 편이다.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해 한중 간의 인식의 차이가 큰 이유 중에는 국가이익 이외에도 상호 정치체제의 상이성과 민주화와 경제발전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전문가들조차도 한국정부의 세부 정책은 물론 한국인의 북핵 위협 인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의 대북정책 및 통일 관련 정책을 중국어본으로 이해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은 이미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생산하고 있는바, 이를 선별해 중국어로 번역, 제공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셋째, 앞의 두 가지 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어 사용 가능자를 집중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에서 조기 유학 경험자를 비롯해 중국어 가능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중국어를 사용할 줄 아는 후보자들은 과거에 비해 많이 배양되어 있는 편이다. 더욱이 중국인 유학생들과 조선족들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상기 업무를 수행하려면 전문적 지식과 함께 국가와 민족의식도 투철해야 하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인재 양성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한중 언론 협력 방안

이 방안의 추진배경은 인터넷과 SNS 등의 매체가 중국인이 한국에

I
II
III
IV
V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 여기에서 한국에 대한 왜곡된 정보도 함께 유통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왜곡된 정보의 유통은 한중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증진을 저해함으로써 한중관계의 진전 및 도약을 방해하게 되고, 한중관계의 정체 내지 악화는 한국 주도의 통일공감대 확산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방안의 목표는 한국과 관련된 왜곡된 정보의 교정 및 역사 문화 관련 한중간 불필요한 논쟁의 방지를 통한 중국 내 험한 또는 반한 감정 확산의 저지에 있다. 그리고 주요 타깃은 넓은 의미에서 네티즌이지만, 협력 대상은 주요 언론사 및 언론인, 파워블로거 등이라 할 수 있다. 주요 방안은 한중 언론 협업적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한중 언론사 및 언론인들 간 한중 상호간 왜곡된 정보의 유통이 양국 국민들의 상호 신뢰를 저해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는 교정보도 및 관련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에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 기존 한중 언론사 및 언론인 교류모임이 존재하는 바, 이 모임을 통해 인식을 확산시키고 단순 교류 차원을 넘어서는 건설적인 합의를 이룸으로써 향후 한중관계의 진전과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한반도 전문가 활용방안

대중국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중국 내 한반도 통일에 관한 발언권을 갖고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이고 유력한 방안이다. 이 방안의 주요 목표는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상호 인식 차이를 극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방안의 주요 타깃은 중국 내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종사하는 한반도 전문가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중국 내에서 한반도 관련 정책적 영향력이나 여론과 담론을 형성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이다. 물론 중국적 관점에서 한반도를 바라보고 자국의 이익에 기반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어 우리와의 차이는 적지 않다. 그렇다고 이들을 무시하거나 우회한다면 대중국 통일공감대 확산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과는 한반도 통일 관련 직접적이고 치열한 논쟁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첫 번째 방안으로는 민간 차원의 학술회의 공동개최를 들 수 있다. 중국 내 한반도 인식 및 정책 형성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회의를 한중 양국에서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상호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의 정책 홍보 및 확산에 활용한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상호 이해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이다. 한중 양국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부담이 되는 현안문제와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써 상호 입장 및 인식의 차이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히는 데 활용한다. 특히, 민감한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한 한중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 간 대북정책 및 입장 차이를 축소하고 협력분야를 발굴,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한반도 관련 중국의 정책협력과 변화를 유도하는 1.5 차원의 비공개 회의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정책적·대외적 영향력을 갖춘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한 비핵화,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에 긍정적인 바,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과정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는 데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공개 회의를 통해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한국의 통일정책 및 한국주도의 통일 당위성, 통일 편익론을 꾸준히 설명하고 주지시킬

I
II
III
IV
V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통일정책이 무력이나 외세에 의존해 북한붕괴 후 흡수통일을 목표로 한다는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한반도 통일은 남북합의에 기초해 북핵문제의 해결과 평화체제의 수립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것임을 주지시키고, 통일한국이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통일편익론'을 꾸준히 설명하고 확산시켜야 한다.

5) 지역별 추진 방안: 동북3성 중심

중국에서 수도권 북경과 경제중심지인 상해의 비중은 적지 않으며 중요한 지역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통일공감대 확산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56개의 다민족 국가로 구성된 중국은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하더라도 31개의 행정구역에 약 13억 인구가 포진해있다. 게다가 지역별 발전수준과 관심사항이 다르며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영향은 지역별로 커다란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별 특성에 맞춘 대중국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지역을 다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바, 북경과 상해 그리고 통일 이슈와 깊은 관련이 있는 동북3성 지역을 특화시켜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대중국 통일공감대 확산은 정책적·학문적 영향력과 비중이 높은 북경 및 상해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바, 기존의 다양한 활동을 중단시킬 필요 없이 그대로 유지, 발전시키면 된다.

그러나 중국의 동북3성 지역의 경우는 다르다. 비록 북경과 상해보다 중요성은 떨어질지라도 요녕성과 길림성은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 북한과의 교류는 물론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동북 지역은 주변국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경협과 통일한국의 미래 개척지로서의 의미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지역의 한국에 대한 국가 호감도는 중국의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55.6%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 전체 평균 66.1%의 10% 이상 낮은 수준이다.⁹⁹⁾ 주된 이유는 북핵문제로 인해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투자와 교류가 상대적으로 낮은데다가 북한과의 긴밀한 교류협력에 따른 우호적 정서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지역의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해 현지의 사정과 우리의 장점을 고려한 ‘한국-동북3성 경제협력 포럼’의 정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의 주요 타깃은 동북3성에 기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 및 중국의 기업과 성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담당자들이다. 이 방안의 목표는 국내 기업과 현지의 정부 및 주요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현지의 관심인 경제발전과 한국의 경험 및 상품이 결합됨으로써 양측에게 모두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이 지역에서의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지역의 정책적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과 전문가들을 타깃으로 하는 한국-동북3성 정책협력 네트워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동북지역의 경우, 북핵문제나 북한 관련 주요 정책은 중앙에서 결정하나 실질적인 시행은 인접하고 있는 요녕성과 길림성의 정부가 주도하며, 이러한 지방정부의 입장이 중앙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지리적 인접성과 북중 간의 오랜 교류 및 경제적 의존성 등은 이 지역 지방정부의 정책성향을 친북화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지역 사람들도 북한에 대한 동정심이

⁹⁹⁾ 삼정 KPMG, 『(주요 국가 대상)한국 이미지 조사 및 권역별 공공외교 증장기 전략수립』 (서울: 외교부, 2013), p. 292.

I
II
III
IV
V

한국보다 강한 편이다.

따라서 이 방안의 목표는 체계화되고 정례화된 정책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유대감을 강화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정책의 친화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 지역과 민간 대학 차원이나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교류는 있으나, 영향력 있는 성 정부 관료나 성 정부 산하 싱크탱크 등과의 상시적인 네트워크 구축은 제한적이었다. 이를 개선하는 맥락에서, 동북3성의 성별 정부관료 및 주요 정책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해서 매년 1개 성을 순회하며 3회 개최하든지, 3개 성 관련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를 순회하며 3회 개최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6) 차세대 발굴, 육성 방안

대중국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정책적, 여론형성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이 기성세대인 만큼, 이미 다른 방안의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의 한중관계에까지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향후 10~20년 뒤 여론주도층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차세대를 장기적으로 발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국립국제교육원과 여성가족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외교부 등이 주체가 되어 중국의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한중 인력교류 프로그램은 긍정적이다. 다만, 수많은 중국 청년들을 충분히 초청하기엔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바,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최초 방문자를 타깃으로 삼아 재초청하는 행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의 주요 목표는 한국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주지시키는 데 있다. 그리고 기존 인력교류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도 예상보다 클 것이다.

그리고 후속 세대 전문가를 발굴, 양성해야 한다. 이 방안의 주요 타깃은 향후 여론주도층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30대의 전문가들이다. 여기에는 학자, 언론인, 경제인, 지방정부 관료 및 공청단(共靑團) 멤버가 포함되며, 주요 목표는 잠재적 후속 세대를 발굴해 친한 인사로 발굴, 양성하는 데 있다. 이들은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지만, 기회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의 교류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 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발굴과 양성의 2단계 접근이 필수적이다. 우선 철저한 현지조사와 1차 검증을 통한 발굴 작업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현지 대사관의 도움이나 분야별 중견 중국 전문가의 견해를 복수로 수렴해 선별해야 한다. 기존의 정서적, 전통적 관점에서 한반도를 인식하는 전문가들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 국제 감각을 갖춘 신규 세대들을 발굴해 친한적 인사로 양성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별된 전문가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의 발전상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한국 소개 및 주요 정책 자료의 중국어본을 제공한다. 또 학자들의 경우에는 연구를 지원해 주며, 1회성이 아닌 상호 방문을 통한 교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7) 국내 중국인 유학생 관리 방안

최근 국내 중국인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한국의 각급 대학들이 경제적 목적으로만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지향적 한중관계나 통일공감대 확산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인 유학생들은 우리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와 편의를 제공해주는 고마운 대상이다. 물론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일부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초보적이고 시작단계에 있는 만큼 좀 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장기적 플랜에서 접근할

I
II
III
IV
V

필요가 있다. 이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반한이나 혐한(嫌韓) 감정을 품고 귀국하는 것보다 한국에 대한 호감이나 이해심을 품고 귀국하는 것이 한국의 대중국 통일공감대 확산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¹⁰⁰⁾

그런 점에서 이 방안의 주요 타깃은 한국 내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생이며, 목표는 이들이 한국에 대한 혐한 감정이 아닌 호감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주요 방안은 교육부의 협조를 통해 현지에서 유학 희망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학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공인된 현지기관과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내 각급 교육기관과의 실질적인 연계와 생활, 장학 정보 등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한국 유학 경험이 있는 현지인을 채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제도를 개선해 한국의 대학 본과에 바로 입학하기 전 어학코스를 수료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어 습득과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혐한 감정을 줄여줄 수 있다. 또한 우수 학생에 부여하는 장학금을 늘리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8) 조선족 활용방안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조선족은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중국인에 비해 한반도 통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언어적 강점도 있는 바,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통일공감대 확산의 개인 행위자로서의 역할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선족들의 혐한 감정이 위험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¹⁰¹⁾ 이후 재외동포정책의 변화에 따라 조선족의 체류가 합법

¹⁰⁰⁾ 전병곤 외, 『한국의 대중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p. 154.

¹⁰¹⁾ 2011년 7월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주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

화되었지만 노동력 관리라는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동포로서의 배려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동포에 대한 포용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선족 동포가 집거하는 연변자치주를 비롯한 접경지역은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통일에 대비한 물리적·인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략적 장소이다. 따라서 북한의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당기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조선족의 한족화(漢族化) 현상을 억제하여 조선족 사회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인 바,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조선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연변 등의 지역에 산업 부흥을 통해 조선족 인구 유출을 막고, 경제적 발전을 통한 출산율을 높여 나가도록 정책적 지원책을 간접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연변지역에 한국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한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남북중 협력을 대비함으로써 중국 내 통일공감대 확산에 기여하도록 한다.

더욱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코리아 드림’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사회의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반조선족 정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시민운동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중 경제교류의 증가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도 증가하

면, 응답자의 52%가 한국에서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52.2%가 대한민국에, 또한 73.7%가 한국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박영균, “재중 조선족의 정체성과 다문화의 사회심리적 토양,” 『디아스포라와 다문화: 해외 이주민의 문화적 장벽과 적응』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원 국제심포지엄, 2011.10.12.), p. 74.

I
II
III
IV
V

고 있으며, 특히 결혼 등을 통한 귀화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어, 한국에서 친한국적 정서를 가지고 귀국한다면 모두 한국의 대중국 통일공감대 확산의 기여자가 될 것이다.

9) 동북아 전문가 복합 네트워크 형성 및 추진

대중국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한중 양자 간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으나, 이를 동북아 각국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로 확대하거나 별도의 동북아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안이다. 주의할 점은 어느 형식이든 중국의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 방안의 주요 타깃은 한반도 통일의 주요 이해당사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학자, 관료, 언론인 등의 여론주도층이다.

이 방안의 1차적 목표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주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내부로의 연계 및 확산이 궁극적 목표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한반도 관련 및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이슈를 의제로 설정하고 관련국의 정책 및 여론주도층이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 우선 동북아 각국의 영향력 있는 주요 전문가들에 대한 풀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전문가 회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는 북한의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즉, 민간차원의 2트랙에서 1.5트랙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회의의 주제나 안전에 따라 참여국도 한미중, 한미일, 남북중 등 3자, 남북한 및 미중 등 4자, 북한을 제외한 5자, 북한을 포함한 6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

물론 북한 전문가의 참여는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정세의 대화국면 등 정세변화를 고려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북중관계를 활용해 중국에

서 비공개로 개최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 유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는 한반도 통일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관련국 간의 정책협력체로서의 역할도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적 통일 공감대 형성이 확보될 경우에 한해 추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 대일본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가) 추진방향

일본 내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한반도 통일문제는 한반도를 비롯해 동아시아 및 일본의 ‘평화’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비롯한 불행한 과거사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또한 냉전 기간 동안 일본 사회에서 지속된 조총련과 민단의 대립에서 보듯이 한반도의 냉전 구조는 재일동포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에 의해 동아시아의 평화를 해쳤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점령기 미국의 정책과 내부 반성을 통해 전후에 과거 군국주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평화국가를 향한 국가노선을 유지해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일본이 과거 역사적 사실에 대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100% 동의할 수 없지만, 일본의 평화헌법 제정 및 반핵 운동 등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음을 평가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일본, 특히 일본 국민들은 평화에 대한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이 한반도의 평화와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 정부는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 등 민간단

I
II
III
IV
V

체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평화’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일본에 널리 알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북핵문제와 탈원전문제를 연계시키는 통일공감대 형성 노력이다. 한국과 일본은 6자회담의 당사국이면서 최근 북한의 핵실험 등에 미국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함께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제로’와 같은 ‘탈핵운동’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원전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정부와 민간단체 사이에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민간단체는 북핵문제의 위험성을 단순히 일본에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 핵무기 혹은 원전의 위험성을 일본에 알리는 역할을 일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 아래 추진하고 있다.¹⁰²⁾

한국 정부도 반드시 탈원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핵 위협과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민간단체와 인식을 공유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일본 정부 및 민간단체와 북핵문제 및 원전의 안정성 문제가 한반도와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안전에 중요하다는 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대일본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다자간 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일본은 한반도 통일이 국제적인 협력의 틀 속에서 실현될 것이며, 이것이 자국에게도 가장 바람직한 통일의 형태라고 보고 있다. 일본이 이러한 다자주의적 접근법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는 각종 다자간

¹⁰²⁾ 이기태 외, 『한국의 대일본 통일공공외교 실태』, p. 142.

보협력 기구, 예를 들면 아세안지역포럼(ARF), 아세안+3, 6자회담,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한중일 협력사무국 등과 같은 협력기구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¹⁰³⁾ 즉 이러한 협력기구를 통해 논의의 장을 마련해서 한국의 통일정책 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주변국의 협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넷째, ‘청소년’ 중심의 문화교류를 통해 통일공감대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 비록 최근에 일본 내 한류 열풍이 주춤하고 있지만, 2000년대 이후 일본 내에서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에 관심을 갖는 일본인, 그 중에서도 일본 청소년들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간에는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특히 대중문화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외교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무엇보다 세대별로 나누었을 때 기성세대는 과거 한국의 반일 교육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편견이 강한 반면에 청소년들은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 편견보다는 상대국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이와 같이 활발히 전개된 문화외교를 단순한 양국 간 문화교류에 국한하지 말고, ‘통일’을 주제로 하는 ‘통일공공외교’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한일 연극 페스티벌’이나 ‘한일 콘서트’와 같이 청소년들이 대상이 되고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문화외교에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미래의 양국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구상하고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종교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공통의

¹⁰³⁾ 위의 책, p. 150.

I
II
III
IV
V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해 통일공공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산시는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해 일본의 후쿠오카시와 협력하고 있는데 한반도 종단의 최종단계인 한일 터널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일본측과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나) 세부 추진방안

1) 한일 간 신뢰 형성 및 ‘과거’ 문제 극복

한국의 대일본 통일공감대 확산을 추진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한일 간의 신뢰관계 구축이다. 하지만 한일 간에는 식민지 지배 역사 등 ‘과거’ 문제에 따른 한일관계의 특수성이 있음을 감안하면 대일정책은 일본 사회, 일본인의 감성,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2012년 8월 일본 천황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죄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으로 한일관계가 급속히 악화된 것은 천황에 대한 일본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향후 ‘과거’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일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양호하게 유지해 나가는 대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한일 간 ‘과거’ 문제 극복을 통해 일본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세력으로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일본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이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일본은 북한과 수교할 가능성이 있으며,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의 국력에 걸맞는 정치군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현재 일본은 ‘보통국가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을 전후한 시점에서 이러한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실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고려해서 한국의 대일정책은 역사, 영토문제 등 ‘과거’에

만 집착하는 형태로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과거’ 문제에 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철학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적극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일본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세력으로 유도해 나가고, 이러한 기반 위에 일본 내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지 세력을 넓혀나 가야 한다.

2) 재일동포사회의 통일공감대 확산

재일코리아사회를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은 한일 간의 가교 역할을 해왔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

일본 사회에서 동포사회는 크게 민단과 조총련으로 나뉘어 냉전 기간부터 격렬히 대립해 왔다. 이는 재일동포사회의 분열과 함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차이부터 통일과 관련된 남북 관계,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 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일동포사회의 분열상은 일본 사회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부정적 기류 및 무관심을 확산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현재도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안보 위협은 일본 사회 내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과 함께 재일동포사회에 대한 배척과 같은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재일동포사회에서 민단과 조총련의 협력은 중장기적인 목표로 놔두고, 우선 민단을 중심으로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교육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재일동포사회 내 통일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단 간부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통일교육원 같은 곳에서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I

II

III

IV

V

재외동포사회의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교육은 최근에도 실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16년 11월 15일에 민단 간부 70명이 통일교육원에서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 비전에 대한 공감 형성'이라는 테마로 열린 연수였으며 지방민단의장과 사무국장 등이 참가했다. '통일미래 비전과 재외동포의 역할', '최근 북한 동향 변화와 전망', '북한 핵문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도 열렸다.

하지만 단순한 정부와 민단 간부진만의 교류가 아닌 비정부 차원의 보다 폭넓은 통일공감대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1.5트랙의 정부 연구기관과 재일동포 학자들 간의 보다 활발한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공동연구의 실시와 재일동포 3세 이후의 새로운 세대들의 한반도 상황 이해 및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향상을 위한 청소년 교류의 확대 등 재일동포사회의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통일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

3) 북한의 납치 문제에 대한 한일 인권 연대 추진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일본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 노력을 인도적 견지에서 이해하지만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본 정부가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일본의 노력이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는 지난 6자회담 과정에서 일본이 납치 문제 해결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6자회담의 공조체제에 부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 납치 문제에 대한 미묘한 인식 차이가 있는 가운데 민간 차원에서 북한의 납치 문제를 인권 문제로 이해하고 시민

단체 간의 연대를 통한 해결, 더 나아가 납치 문제의 해결이 곧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은 지난 2006년 6월, 납치된 일본인의 생사확인을 비롯한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침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북한인권법(공식명칭: 납치문제와 북조선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 대처 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인권법은 총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4조에서는 납치자 등 전반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매년 세계인권의 날인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북한인권 개선 주간’으로 지정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인권 개선 주간’ 개최는 그 동안 북한인권 문제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일본 사회 내에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2007년에 열린 ‘북한인권 개선 주간’에는 요코타 메구미의 고향인 니가타에 유럽, 미국, 한국 등의 세계 언론사를 초청해 당시 납치 상황 등의 현장을 취재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납치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한국, 일본 그리고 태국의 납치자 가족들이 모여서 ‘납치해결 국제연합’이라는 단체도 만들었다. 이러한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한국과 일본의 납치자 문제 연대는 단순한 양국 간의 관계를 넘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 차원에서 논의됨과 동시에 보다 많은 납치 관련 국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06년 5월 27~30일에 한국의 납북자 가족 단체들은 일본을 방문해 일본 납치자 관련 단체들과 연대를 강화해서 납북자 송환운동을 국제적 운동으로 확산시킬 것을 약속했다. 사실 북한에 의한 납치자는 한국과 일본이 가장 많지만 전 세계 12개국에도 북한에 의한 납치자가 존재한다. 일본 정부는 납치자 문제를 한일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고 국제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I

II

III

IV

V

하지만 이러한 납치자 문제를 한일 양국 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 무엇보다 가장 극복해야 할 과제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관심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정부 내 실무자의 증원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 내에서 남북경제협력 관련 실무자는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에 납북자 관련 실무자는 매우 적다. 또한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의원 연대 강화가 필요하다. 기존에 한일 의회 간에 존재하고 있는 ‘한일의원연맹’이 북한의 한일 양국에 대한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향후 한국은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와 같은 인류의 보편적 인권문제를 대일본 통일공공외교와 연계시킴으로써 한반도 통일의 평화를 향한 한국과 일본의 통일공감대 형성의 협력 자산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4)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번영의 비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한국 주도 아래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통일한국의 경제력 성장과 함께 일본의 경제적 편익이 있음을 주장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에 의해 북한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이는 더 나아가 중국의 동북3성 지역의 개발,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개발 등과 연계되어 극동경제권의 구축, 동북아 경제권의 조성 등이 촉진될 것이며, 이는 일본 경제의 커다란 활력소가 될 것이다. 특히 통일한국에 의한 한반도 시장의 확대, 통일한국과 일본의 FTA 체결 등이 일본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점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통일 이후 통일한국이 북한 핵무기를 폐기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고,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건설을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전망은 추진방향에서 얘기한 일본이 선호하는 다자간 안보협력 체를 통한 방안 제시가 되어야 한다.

앞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은 통일한국이 안보적 측면에서 일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인식해야 한반도 통일에 찬성할 것이다. 특히 일본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한국 주도의 평화적 방법을 지지하고 있다. 만일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주한미군 나아가 주일미군의 성공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일본의 역할(예를 들어 후방지원활동 등)에 대해 일본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물론 한반도 유사 상황에 대해 주일미군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후방지원 역할 수행과 같은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평화적 방법이 일본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일본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 이것이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인식시켜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5) 한국학 외교를 통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 및 인식 확산

한반도 통일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제 조건은 한국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반도와 가까운 일본조차도 정작 한국에 대한 이해는 영화나 K-Pop, 한국음식과 같은 문화에 대한 이해에 치중된 측면이 강하고, 게다가 북한에 대해서는 방송매체에서 나오는 정상적이지 않은 국가로서 호기심 대상의 국가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과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문학 등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한국에 대한 이해는 향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에서의 공감대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학 외교는 특히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중심이 되어 전개될 수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1994년부터 교육과 연구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을 알린다는 목표 하에 한국학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에도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어/한국학 교수직 설치 프로그램’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1년 와세다 대학에 객원교수를 파견하여 한국학 강좌를 운영한 적이 있다. 특히 ‘KF Global e-school’ 사업을 통해 도쿄대, 리츠메이칸대, 게이오대 등 5개 대학에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 등을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업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일방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기 보다는 일본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일본국제교류기금(The Japan Foundation)’과의 사업 협력도 중요하다.

한편, 문화 외교 차원에서도 다양한 대일 통일공감대 확산을 추진할 수 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2000년대 이후 드라마 ‘겨울연가’를 시작으로 한 한류 바람은 일본인들에게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게다가 한반도 분단 현실을 다룬 영화나 연극은 일본인들에게 한반도 분단 현실 및 통일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012년 영화감독 장진의 동명영화를 원작으로 하는 연극 ‘웰컴 투 동막골’이 도쿄와 오사카에서 공연되었다. 이러한 연극 공연을 통해 한국전쟁 및 분단된 한국의 이미지를 부정적인 것만이 아닌 동아시아 시민들이 교류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¹⁰⁴⁾

이와 같이 한국 정부는 한반도 통일의 당면 과제를 일본인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문학, 연극, 영화 등을 통한 인문학적 중심의 한국학 사업을 보다 일본 사회에 보급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¹⁰⁴⁾ 이기태 외, 『한국의 대일본 통일공공외교 실태』, p. 76.

같은 1.5트랙과 작가, 연극인, 예술인을 포함한 민간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의 민간단체와 교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5) 대러시아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가) 추진 방향

러시아를 상대로 한 한국 주도 통일에 대한 관심 및 지지의 확대 정책은 크게 3가지 방향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양국 정부 간 공식 접촉과 대화체인 1.0 트랙, 반관반민의 1.5 트랙, 순수 민간 관계인 2.0 트랙 모두를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적 통치 성향이 강한 나라에서는 1.0 트랙을 통한 제도적 접근방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나머지 트랙의 공감대나 기능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1.0 트랙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각 트랙별 접촉에서 공통의 방향성을 지향해야 한다. 한국 주도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를 얻고 관심을 확대하며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방향은 아래와 같다.

1) 러시아 엘리트의 관심 증대 및 한국 주도 통일 확산 전략

현재 러시아에서 한반도 관련 안보 및 정치 이슈는 대부분 북한 핵문제와 연관해 다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한반도 통일 관련 의견들은 자칫 '남북한 어느 편을 드느냐'는 체제 경쟁처럼 비쳐질 수도 있고 논리가 경직될 수밖에 없다.

엘리트 및 분석가들의 관심이나 입장, 분석들도 대부분 러시아의 현실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한국 정부도 통일을 지향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통일 문제와 북핵 문제 해결을 동시

I

II

III

IV

V

에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당면 이슈로 북한 핵 문제에 집중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 내 엘리트 층에게 한반도 통일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들은 동북아 지역 전체 및 세계 체제의 대결 구도 속에서 한반도 및 북핵 이슈를 다루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통일방안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지식·한국학 분야, 문화 분야, 경제 분야, 스포츠 및 관광 분야 등 분야별 종사자들 및 전문가들을 상대로 세분화된 접근법과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대단히 설득력 있는 논리를 창출하고 제공해야 한다. 대응 논리로는 북핵 문제의 궁극적 해법은 평화적인 방법의 한반도 통일이라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북한 핵문제 해법에 대한 공감과 동의를 문제를 다루는 것과 중장기적 통일 목표가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현재보다 더욱 증대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하고 이를 확산해야 한다. 이는 한반도 통일은 필연적이며 한반도의 통일이 러시아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의 21세기 국가 아젠다 중의 하나인 극동 시베리아 개발 정책 및 국경 인접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2) '통일 한반도'가 글로벌 번영과 러시아의 안보에 순기능 역할을 한다는 점 강조

이는 북한 핵 문제 해결 및 통일 한반도의 안보 지향성이 동북아 지역 및 러시아 접경 지역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안정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방안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러시아의 전략

적 이익에 대한 도전과 불안 요소가 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3) 남한 주도의 통일이 필연적임을 인식

이는 현재의 인구 추계, 북한 경제의 붕괴 가속화, 글로벌 통합의 추세, 북한의 정치 및 경제 구조의 경직화에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우월한 남한의 정치 경제 체제의 유연성 및 매력도 증가 등을 통한 장기 추계가 결국 남한 주도의 통일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러시아에 대한 통일 공감대 확산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러시아 국민과 전문가 등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의 정당성과 당위성에 대한 자발적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대러 통일 공감대 확산 외교 및 협력을 추진할 때 중요한 점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연방-지방’ 관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러시아는 연방 국가이며 지리적 다양성 및 편재성이 강하다. 국경 인접 지역 및 지방(주, 자치 공화국 등) 이 느끼는 현실적 필요성과 러시아 연방 중앙정부가 느끼는 현안에 대한 시급성 등은 시차가 있을 수 있다.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통일 공감대 확산 정책 추진은 러시아의 연방-지방 관계의 특성을 반영해 복합적인 접근법을 써야 한다.

이는 러시아의 지역적 특성(유라시아 국가) 및 인구 분포, 주변국과의 경제적 상호 의존의 특징, 정책 결정력에 대한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유용하고 필수적인 방법이다.

러시아의 대외정책 특히 안보 관련 정책은 연방차원의 결정에 기속

I
II
III
IV
V

된다. 접경 지역의 경우 인접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관계, 혹은 문화협력 관계 등이 지역 정부 차원에서 입안되고 이것이 연방 정부에 의해 수용되거나 연방 정부의 정책 변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외교 안보 정책 및 대외협력 정책의 근간은 연방 정부의 정책 방향을 벗어나지 않는다.

접경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 엘리트들의 인접국에 대한 정보 및 이해의 정향(orientation) 또한 연방 정부의 정보, 정책 방향, 연방 언론 매체, 모스크바 등 수도권 중심의 정책 엘리트들의 견해에 기속되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부분적으로 주변국과의 실질적 협력을 주도하는 인사들의 현장 정보나 대외 인식이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한국 주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접경한 극동 지역과 정책 결정력을 구사하는 모스크바 등 유럽 러시아 지역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이를 수행할 실행 전략적 관점에서 방안을 개발하고 방향이 상실되지 않도록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면서 단계별, 시기별로 실행 전략들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여기서 정책의 세분화를 시도할 때 전문가들 및 대중들에 대한 공감대 확산 전략을 구분해 마련해야 한다.

(나) 세부 추진방안

1) 외교안보 양 장관급이 참여하는 2+2 체제로 확대

러시아의 외교안보 전략은 대통령 등 국가 지도부의 인식 및 세계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하지만 한국은 이들 고위급 레벨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례적인 메시지를 투사할 수단과 틀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한국 통일 및 한반도 정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일본, 중국과

비교해 제도적 장치가 너무 약하다.

현재 한국과 러시아 간에는 부정기적으로 열리는 최고위급 레벨의 정상회담과 정례적으로 열리는 고위급 레벨(부총리급)의 한러경제과학 공동위원회, 국장급 레벨의 한러극동협력위원회가 있다. 여기다 안보 대화체인 러시아 안보위원회와 한국 청와대 NSC간 협력 대화가 있다.

하지만 이는 중국, 일본과 비교해 급이 떨어지거나 빈도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시급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16년 러시아 극동 문제를 전담하는 장관직을 지명했고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도 정례화를 제안하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는 2013년부터 외교장관 및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체제의 외교안보 전략대화들도 갖추고 있다.

중국은 양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될 다양한 다자간 틀(SCO, BRICS 등) 외에도 양국 간 정상회담을 보완할 양국 총리회담의 정례화 및 외교안보 장관 회담 등을 비롯해 정례화된 다양한 지방 차원의 협의체가 있다.

〈그림 IV-2〉에서 알 수 있듯 러시아와 중국은 양자 관계뿐 아니라 상하이 협력구조(SCO) 체제 내에서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들이 역내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정상은 글로벌 안보 이슈 중 핵 관련 이슈 특히 한반도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한반도의 통일 관련 이슈는 고위급 차원의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정세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 때문에 다양한 계기에 자연스럽게 수시로 한반도 안보 이슈 및 통일 아젠다에 대한 러시아 고위급 정책 책임자들 및 정부 지도자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은 정상회담의 정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G20, APEC 정상회담 등 다자간 회의에서 계기적으로 만난다 해도 아주 짧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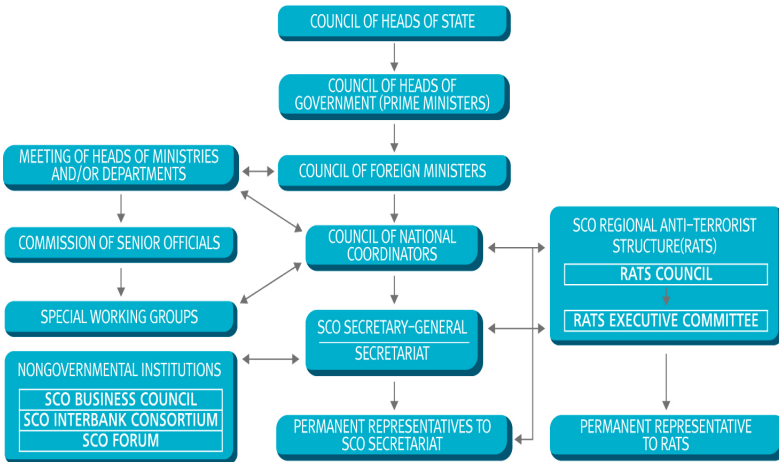
은 시간에 다양한 이슈를 다루어야 한다. 당연히 한국 주도 통일 방식과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한반도 통일 및 당면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 러시아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 공조를 하려면 최소한 주변국가와의 수준에 걸맞는 대화협력 틀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통일 문제에 대한 양자간 협력과 이해의 틀을 넓히는 것이 가능하며 한국 주도 혹은 한국식 방식에 대한 러시아의 폭넓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

그림 IV-2 >> 상하이 협력 기구 구조

THE STRUCTURE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출처: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Wikipedia. Wikimedia Foundation, <https://en.wikipedia.org/wiki/Shanghai_Cooperation_Organisation> (검색일: 2017.01.14.)

2) 지방 엘리트 및 접경 지역을 대상, 대화협력 모델 개발

모스크바나 상트 페테르부르크 등 서쪽 러시아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은 기본적으로 저조하다.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를 제외할 경우 정책 엘리트 사이에서도 통일 문제를 관심 있게 접근하는 연구자들도 별로 없다. 하지만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경우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다. 때문에 두 지역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가 한미 FTA 및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내 지지를 확보하려 할 때 한국과 교역 규모가 크고 관심이 상대적으로 큰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과 같은 태평양 연안 주들을 활용했던 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까지 주로 모스크바를 대상으로 하는 협력 대화체나 포럼 등을 시도해왔다. 경제협의체로 한러 극동경제협력체가 국장급 레벨로 존재하고 있지만 러시아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 대화체나 포럼 등은 없다.

하지만 이 지역은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러시아 접경 지역이고 한반도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때문에 1.5 트랙 형식으로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포럼이나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한국의 총영사관 및 분관이 설치되어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사할린 등을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지역에는 러시아 연방의 극동 관련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학아카데미 극동 지부 및 연구소, 유서 깊은 대학들이 있다.

독일의 경우 1973년부터 DAAD(Deutscher Akademischer Austauschdienst, 독일 학술 교류처)를 통해 러시아의 지방 연구소 및 대학 등과 뿌리 깊은 협력의 역사를 만들었고 이것이 나중에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독일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I
II
III
IV
V

〈그림 IV-3〉은 이러한 협력 사례 중 하나로 DAAD가 러시아 지방에서 진행한 2011년 협력 프로그램 중 일부다.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은 한국과 러시아 간 협력의 역사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한국계 동포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다. 또 러시아 극동과 이르쿠츠크 등은 일제 치하 독립운동의 주요한 기지이기도 했다.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연례적인 통일 관련 세미나 및 심포지움, 학생 및 연구진 교환 연수 등을 실시해 한국 주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예를 따라 관련 지역 대학에 섬머 스쿨이나 특정 기간 한국 관련 토픽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 강좌 시리즈를 개발하고 이 과정 중 하나로 한반도 통일 문제를 자연스럽게 확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또한 한국과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 간 민간 지역 대화협의체인 'Korea-Russia Far East and Siberia Dialogue' 같은 포럼을 개발해 이를 통해 한반도 및 한반도 통일 관련 관심과 이해를 지속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의 엘리트들 및 한국학(동양학)연구자들의 범위 및 지식 정보 등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통일독일 이전 서독과 소련 간에 존재했던 다양한 차원의 협의 및 대화체는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독일통일 및 소련군의 베를린 철군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기다 KfW(독일재건은행) 등 서독 경험 담당 기관들도 경제협력 프로그램 및 자금을 활용해 이러한 안보 협력 대화틀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림 IV-3 >> 독일과 러시아간 교육 및 연구 협력 사례

e.g. GoEast-Summerschools 2011 in Russia and their topics

Archangel'sk	• Besonderheiten der professionellen Familienarbeit und Elternbetreuung im Norden Russlands
Barnaul	• Sommerschule in Humangeographie
Irkutsk	• Computer Technologies in Mechanical Engineering • Botanical and ornithological field course in the Lake Baikal region
Kazan	• Fundamentals and Boundaries of Tolerance in Ethno-cultural and Interfaith relations
Kirov	• Summer Medical School
Kostroma	• Die Wirtschaft Russlands : Einführungskurs
Krasnoyarsk	• Life Support for Space Systems • Internationale Sommerschule in Recht 2011
Moskau	• Modern Russian Language • Innovations in Russian Agriculture
Novosibirsk	• Modern problem of Laser Technology
Om'sk	• Environmental Policy in Western Siberia : A study trip between Taiga und Steppe
St. Petersburg	• Russian Business
Tscheljabinsk	• Im Schnittbereich Europas und Asiens : nomadische und sesshafte Kulturen im Sudural von der Vorzeit bis in die Frühe Neuzeit : Rätsel, Hypothesen und Entdeckungen
Ulyanovsk	• Earth trough the cockpit • History of the Volga region in architectural landmarks
Vladimir	• Culture and History of Ancient Russia
Westibirien	• Landschaftsplanung und nachhaltige Nutzung natürlicher Ressourcen
Wolgograd	• Volgr-Don territory : ecology and wildlife management
Woronesh	• Russland : Ein Imperium und seine Regionen
Yakutsk	• Sakha-Yakutia : Living Culture in Permafrost Area

출처: Benedikt Brisch, Bi-lateral German-Russian Cooperation in the filed of Higher Education, April 27, 2012, p. 15. <https://eu.daad.de/medien/eu/veranstaltungen/brisch_2012_04_kazan_e_rev5.pdf> (검색일: 2017.1.15).

3) 러시아 주요 대학 내에 한국 센터를 개설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모스크바 대학, 상트 페테르부르크 대학은 물론이고 사할린,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니즈니 노브고로드 등 6개 지역에 일본 센터를 개설해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비슷하다.

국제교류재단이 후원해 구축한 러시아 한국학 지원 사업 콘소시엄 협의체인 한국학 컨소시엄 'RAUK'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I
II
III
IV
V

4) 한국 싱크 탱크의 국제협력 프로그램 활용

현재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및 주요 대학 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소의 예산과 인력 운용에 있어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한반도 관련 연구자들도 예산 배정이 많이 되는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쏟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글로벌 이슈나 중국 이슈 등에 내몰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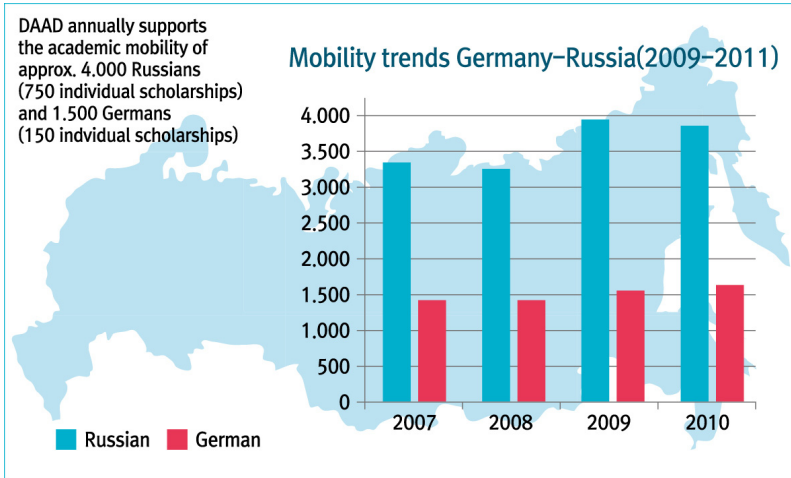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한반도 관련 연구나 정책 페이지는 점점 더 사라지게 되고 관련 연구진들의 숫자나 한반도 관련 지식도 점점 약화될 것이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글로벌 협력 연구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한 러시아내 싱크탱크의 영향력 확산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예산 배정도 경쟁체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일연구원 등 국내 싱크 탱크들이 이를 활용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러시아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연구나 공동 세미나, 공동 여론조사 등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정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공동 저널 등을 발간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이는 통일연구원 등 국내 싱크 탱크의 국제 인지도 제고 및 영향력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중국학이나 일본학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한반도 관련 신진 연구자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한반도에 대한 관심 있는 학자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V-4 ▶ 독일과 러시아간 학자 교류 및 지원 사업 사례



출처: Benedikt Brisch, Bi-lateral German-Russia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igher Education, April 27, 2012, p. 8. <https://eu.daad.de/medien/eu-veranstaltungen/brisch_2012_04_kazan_e_rev5.pdf>. (검색일: 2017.1.15.)

5) 한반도 통일 관련 3자 연구 혹은 1.5 트랙의 대화체 구성

러시아 내에서 한국 통일에 대한 관심의 확산을 피하면서 중앙아시아나 옛 소련권 국가들 연구자들 및 전문가들 그리고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 국가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형태의 다자틀 대화체나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인 동포들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러시아에서는 소련 해체 후 옛 소련권 공간에 흩어진 러시아계 혹은 러시아 국민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 중 정주와 이민, 이산의 측면에서 소수 민족의 이동을 연구하는 프로그램들도 있다. 한반도 통일 문제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한반도에서 이주한 소수 민족인 옛 소련권 고려인들의 정주와 이민, 이산의 한 사례로 연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I
II
III
IV
V

다양한 형태의 역내 공동체 형성과 초국경 투자 및 기술 교류 등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정례적으로 열리는 고위급 회담을 계기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고위급 다자 대화 과정 속에서도 통일 관련 내용을 브리핑 할 수 있도록 회담이 열리는 기회를 활용해 한반도 통일 및 극동 시베리아 지역 공동 연구 혹은 공동 조사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홍보 배포할 필요가 있다.

6) 러시아어 및 영어 등의 번역 서비스

러시아 전문가 및 대중은 공히 한반도 및 통일에 대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언론 매체를 통해 입수한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 언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접촉이 필요하다. 또한 언론인들을 상대로 한 한국 주도 통일의 필연성을 인식시키고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들이 한반도 통일 관련 정보를 입수할 러시아어 소스가 많지 않다.

때문에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일 자료원을 별도의 홈페이지로 개설하고 이를 대사관이나 문화원 그리고 통일연구원 홈페이지 같은 곳에 링크해 노출 시킬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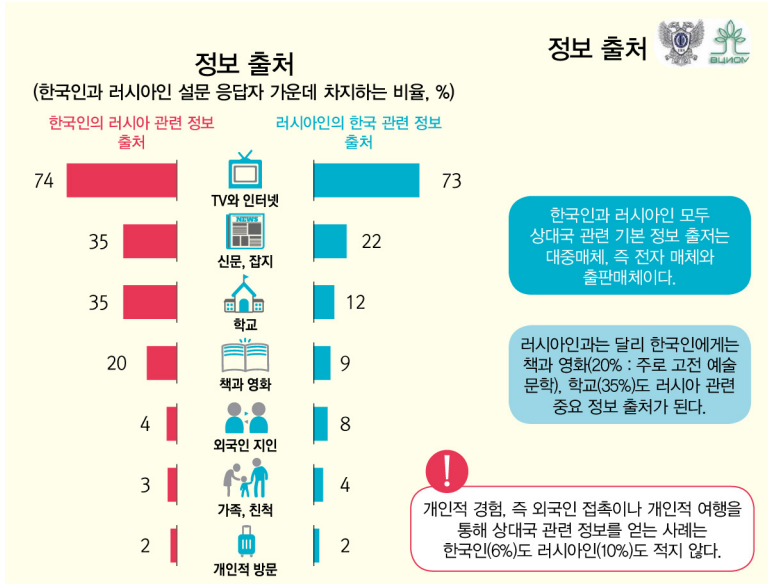
7) 관련 연구자들의 저변 확대와 한국 호감도 증진 사업

최근 한국외대 러시아 연구소가 진행한 2016년 한러 양국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표출된 바 있듯 러시아인 대부분은 한반도 관련 정보를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언론에서 한반도 관련 논조를 결정하는 주요 필진들은 대부분 소수다. 전문가들의 인재풀도 좁은 편이다.

한국 주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대상 인재풀의 확대에 대한 고민과 함께 비한반도 전문가이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 혹은 관여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모스크바 등 중앙 언론뿐 아니라 극동시베리아 지역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 자료 및 데이터 제공 등이 필요하다.

그림 IV-5 >> 한국인의 러시아 관련, 러시아인의 한국 관련 정보 출처



출처: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한-러 양국 국민 상호 인식 조사: 미래협력전망』, p. 11.

- I
- II
- III
- IV
- V

V. 결론



남북은 분단 7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헌법상 우선적 가치인 통일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2016년 두 차례의 핵실험 이후에도 지속적인 증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ICBM 위협 등을 통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켜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북한정권의 핵무기·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강행 등의 무모한 군사주의와 북한 인권 유린 사태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와 연결되어 적대적 대결국면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외적으로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와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 사이 자국의 이익과 안보 전략적 충돌은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정치적 갈등 상황의 연장선에서 젊은 세대의 통일 무관심 현상은 한반도 통일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기존 통일전략 연구는 체제 중심적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물론 한반도 통일에 있어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체제 중심적 통일전략을 수립해야 함은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신생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병진 노선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모험주의를 고려할 때, 체제 중심적 통일론을 기반으로 새로운 통일전략을 부과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통한 통일전략과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모색, 독일통일 사례를 역사적으로 조명하여 서독정부의 지속적인 통일전략 추구, 그리고 통일 인문학적 접근법을 통한 새로운 통일전략의 모색과 국내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한국사회 내부의 남남갈등과 역사적 트라우마 치유를 통해 남북한 통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목적이었다.

북한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정부는 북한사회의 변화를 통해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I
II
III
IV
V

변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며,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인권문제를 남북한 모두 고민해야 하며, 개개인의 권리의식과 변화의 필요성을 북한주민들이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북한 변화의 주체는 북한주민이며, 변화를 촉진하는 힘과 동력도 북한주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북한정치 변화를 유도하는 동인이라는 인식이 우리사회에서도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법은 보다 폭넓은 통일전략 제고에 다양한 토양을 제공해 준다. 기존 체제통합에 치중하는 통일전략이 존재해 왔다면, 인문학적 접근법은 사람의 통일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소통과 화해는 분단 극복과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임을 지적한다. 분단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이를 치유하고,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이미지를 창출하여 발전적 형상을 만들고 통일전략 발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분단의 논리가 남북의 적대성을 만들게 된다면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을 방해하고 상호간 군비경쟁과 긴장감 고조를 만드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통독과정에서 서독정부가 보여주었던 대동독 정책은 지속적인 통일 전략과 독일의 '이중전략'과 '비공개적 접근방법'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서독의 강한 경제력과 인권문제에 대한 활용이다. 이처럼 독일 통일에 있어 서독 정부의 지속적 통일전략 수립과 지속은 핵심요소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통일 공감대 확산 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먼저 미국을 대상으로 통일공감대 확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한국이 제시하

는 통일의 콘텐츠, 즉 통일의 비전을 만들고 이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확한 비전 수립이 선행되어야만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 통일공감대 확산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전문가 그룹 및 여러 사회단체들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통일 공공외교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하여 통일공감대 형성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한인권 문제의 이슈화를 통해 미국 사회 내부로부터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한국 주도의 통일이 왜 필요한가를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중국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으로 지식외교 분야의 활성화를 제안하고 있다. 국내 외교 안보 분야의 정책연구기관들이 중심으로 중국 담당 협업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대중국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에 기여하게 만드는 것에 주목한다. 또한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를 활용하여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고, 한국 주도의 통일이 중국의 국익에 반하지 않고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통일편익론’을 설득시켜 나가야 한다. 지역적으로 동북3성은 상대적으로 중국 주변부이지만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북한과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한 우호적 정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한국의 호감도를 높이고 이 지역의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동북3성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친한화를 유도해야 한다.

일본을 대상을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에 있어, 한국 정부는 한일 간 신뢰관계 구축이 우선함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이 한국 주도의 통일의 지지세력으로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일본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일동포사회의 통일공감대 확산과 함께, 인권문제에 기반한 북한의 납치 문제에 한일 정부가 공동 대응해 나가면서 한반도 통일이 동아시아 평화·번영 비전에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확산

I
II
III
IV
V

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에 대한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러시아는 한국 주도의 통일을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북한 붕괴나 흡수통일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다른 한반도 주변국과 마찬가지로 대러시아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이 있어 한국이 핵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별 종사자들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세분화된 접근법과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러시아 엘리트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러시아 역시 극동 시베리아 개발이 21세기 국가 아젠다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이 러시아와 경제적 협력을 통해 동북아 번영과 안보에 순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결국, 한반도 주변국의 대외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순기능 역할을 담당하며 나아가 통일한국은 글로벌 번영에 이익이 됨을 강조해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 환경이 부각되고 있지만, 남북한의 통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필수적 요소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현 시점에서 한반도 통일은 체제 중심적 통일론을 기반으로 새로운 통일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통일은 북한 사회 내부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분단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여 인간 통일의 밑거름을 만들어 통일을 앞당겨야 한다. 한반도 통일은 동아시아, 그리고 전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단초가 됨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정부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통일전략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의 청사진을 전문가 및 사회단체들과 함께 만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편. 『소통, 치유, 통합의 통일인문학』. 서울: 도서출판선인, 2009.
- _____. 『인문학자의 통일사유』. 서울: 도서출판선인, 2010.
- _____. 『통일에 대한 인문학적 패러다임』. 서울: 도서출판선인, 2011.
- _____. 『통일인문학』. 서울: 알렙, 2015.
-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이명박 정부 국정백서 5권』.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2013.
- 김수암 외. 『한반도에 있어서 과도기 정의』.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김진하 외.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도미니크 라카프라. 육영수 편역. 『치유의 역사학으로』. 서울: 푸른역사, 2008.
- 도진순. 『분단의 내일 통일의 역사』. 서울: 당대, 2001.
- 박영균 외. 『생명·평화·치유의 DMZ 디지털 스토리텔링』. 서울: 한국문화사, 2016.
- 박영호 외. 『한국의 對미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박철언.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 1』. 서울: 랜덤하우스중앙, 2005.
- _____.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 2』. 서울: 랜덤하우스중앙, 2005.
- 배정호.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 및 역할』.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사단법인 남북언론연구회. 『대북방송 백서 2013』. 서울: 사단법인 남북언론연구회, 2013.
- 삼정 KPMG. 『(주요 국가 대상)한국 이미지 조사 및 권역별 공공외교 중장기 전략수립』. 서울: 외교부, 2013.
- 손기웅 외. 『동서독 정치범 석방거래 및 정책적 시사점』. 서울: 통일부, 2008.
- 신장섭. 『김우중과의 대화』. 서울: 북스코프, 2014.
- 알렉산드르 딘킨. 『글로벌 전망 2030: 러시아의 전략적 시각』.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2.
- 양영식. 『통일정책론』. 서울: 박영사, 1997.
- 오경섭 외. 『북한 내 정보유입실태조사』. 서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2011.
- 외교통상부. 『한반도 문제 주요현안 자료집』. 서울: 외교통상부 북미국, 2004.
-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이금순. 『북한주민 인권인식 실태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이기태 외. 『한국의 대일본 통일공공외교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이명박. 『대통령의 시간』.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2015.
- 임동원. 『피스메이커』. 서울: 중앙북스, 2008.
- 임현영. 『분단시대의 문학』. 파주: 태학사, 1992.
- 임현진·정영철. 『21세기 통일한국을 위한 모색』.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전병곤 외. 『한국의 대중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정재호 외. 『중국을 고민하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1.
- 정진아 외. 『통일문화콘텐츠 희(希) 스토리』. 서울: 박이정, 2016.
- 토마스 쿤. 김명자·홍성욱 역. 『과학혁명의 구조』. 서울: 까치글방, 2013.
- 통일노력 60년 발간위원회 편.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서울: 도서출판 다해, 2005.
- 통일부. 『통일백서1998』. 서울: 통일부, 1999.
- 통일부. 『통일백서2000』. 서울: 통일부, 2000.
- 통일부. 『통일백서2014』. 서울: 통일부, 2014.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통일문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15.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통일연구원.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허문영 외.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허문영. “외교정책,” 『김정일 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한-러 양국 국민 상호 인식 조사: 미래협력전망』. 서울: 도서출판 이환, 2016.
- 홍우택.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인권외교의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Burrows, Mathew *et al.* *Global System on the Brink: Pathways toward a New Normal*. Atlantic Council, 2016.
- Freud, Sigmund. *Werke aus den Jahren 1925-1931*. Frankfurt: S.Fischer Verlag, 1972.

Nikonov, Vyacheslav, Georgy Toloraya and Alexander Vorontsov. (eds.). *Koreiskii Poluostrov: Vyzovy i Vozmozhnosti dlia Rossii: Kollektivnyi Doklad Ekspertov dlia Rossiiskogo Natsional'nogo Komiteta Aziatsko-Tikhookeanskogo Soveta Sotrudnichestva po Bezopasnosti (ATSSB)*, Collective expert report for the Russian National Committee of the Asia-Pacific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CSCAP) on the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Russia. Moscow: M.G.U., 2011.

2. 논문

김윤태. “북한정권은 통일과 북한인권의 공동장애물.” 『시대정신』. 제 71호, 2016.

_____. “1990년대 식량난 이후 북한주민의 생애경험이 인권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김익환. “대북 라디오 방송청취 실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독일에서 통일을 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야기』. 2015년 겨울호.

박영균, “재중 조선족의 정체성과 다문화의 사회심리적 토양.” 『디아스포라와 다문화: 해외 이주민의 문화적 장벽과 적응』.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국제심포지엄, 2011.10.12.

이병수. “통일과 평화의 길항관계-통일이념, 통일국가형태, 민족성과 국가성.” 『시대와 철학』. 제26권 1호, 2015.

이노구치 다카시.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일본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편.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 및 역할』.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전병곤 외. 『한국의 대중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정용길. “통일 전후의 동·서독 및 주변국 관계가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7권 2호, 2007.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통일문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15.
- 허문영. “북한의 대남 및 통일정책.” 『북한외교정책』. 서울: 서울프레스, 1995.
- 허문영. 김영수 역음. “외교정책.”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 홍양호. “한반도 정세 변화속의 새로운 통일전략의 모색.” 『혼돈의 시대! 통일을 논하다』. 여의도연구원 외교안보통일분과 토론회, 2016.10.27.

Vorontsov, Alexander. “Current Russia-North Korea Relations: Challenges and Achievements.” Working Papers by CEAP visiting Fellows, 2007.

Klinger, Bruce. “Allies should Include Japan in Korea Unification Plans.” *Backgrounder*. no. 3065, 2015.

Jun, Byoung-kon and Jang-ho Kim. “China’s Role and Perception of a Unified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5, no. 3, 2013.

陳龍山. “朝鮮半島統一問題略論.” 『東北亞研究』. 1999年 第2期

王聯合. “朝核問題解決路徑的三個層次選擇.” 『現代國際關係』. 2009年 第1期.

張璉瑰. “朝鮮半島的統一與中國.” 『當代亞太』. 2004年 第5期.

3. 기타자료

『세계일보』.

『연합뉴스』.

『KBS NEWS』.

『RT』

『TV Channel 1』.

『미국의 소리』.

통일교육원. <<https://www.uniedu.go.kr>>

DAAD. <<https://eu.daad.de>>.

Economos. <www.eco-nomos.ru>.

Nemtsov. <<http://www.nemtsov.ru>>.

Pravda. <<http://www.pravda.ru>>.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

박근혜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문. 2016.10.

박근혜 대통령 제20대 국회개원 연설문. 2016.6.

박근혜 대통령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 2016.8.

「남북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문」.

「한중수교 공동성명」.

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4-01 제1차 KINU 통일포럼: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통일연구원
2014-02 제2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보유 및 대남정책	통일연구원
2014-03 제3차 KINU 통일포럼: 북일 스톡홀름 합의와 동북아정세	통일연구원
2014-04 제4차 KINU 통일포럼: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와 전략	통일연구원
2014-05 제5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통일연구원
2014-06 제6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통일연구원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2015-03 제9차 KINU 통일포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업그레이드 전략 - 8·25남북합의 평가와 박근혜정부 후반기 대북·통일정책 방향 -	통일연구원
2015-04 제10차 KINU 통일포럼: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통일연구원
2015-05 제11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2016-01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
2016-02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2016-03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통일정세분석)

■ 통일정세분석 ■

2014-01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박형중 외
2014-02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결과 분석과 전망	박영자 외
2014-03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 통일나침반 ■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2015-02 최근 2년 간 미·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 외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욱
2015-04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김석진
2015-05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이애리아, 이창호
2015-05 The Reality and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Workers in the Maritime Province of Russia	Lee Aeliah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 석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2016-06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2017-01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주요 발언
 2017-02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
 통일연구원
 홍민외

통일플러스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2016-01 KINU 통일 + Vol.2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6-02 KINU 통일 + Vol.2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6-03 KINU 통일 + Vol.2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6-04 KINU 통일 + Vol.2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4 한동호 외 24,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 한동호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옥 외 19,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 도경옥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옥 외 18,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 도경옥 외 22,500원
 북한인권백서 2017 도경옥 외 20,000원

연구보고서

2014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4-01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이교덕 외 7,500원
 2014-02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박형중, 박영자 7,500원
 2014-03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김석진, 양문수 9,000원
 2014-04 신동북아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성기영 외 7,000원
 2014-05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EC/EU 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손기웅 외 6,000원
 2014-06 탈북청소년의 경제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조정아, 홍민, 이희영, 이항규, 조영주 14,000원

2014-07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한동호	6,000원
2014-08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이론과 실제	이금순, 도경욱	8,000원
2014-09	신뢰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 외	11,000원
2014-10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김규륜 외	10,500원
2014-11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정영태, 홍우택 외	12,000원
2014-12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7,000원
2014-13	한반도에 있어서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김수암 외	
2014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 (통일대계연구 13-03)	최진욱 편저	8,000원
2014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 정책협력방안 2014)	전병곤, 홍우택, 신중호 외	9,000원
2014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북한인권연구센터	11,000원
2014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 외	9,500원
2014	2014년 통일에측시계	박영호, 김형기	9,500원
2014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2014-01)	배정호 외	15,500원
2014	China's Strategic Environ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the Transition Period (A Comprehensive Strategic Study on China in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2014-02)	Bae, Jung-Ho et al.	18,000원
2014	Global Expect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1)	Kyuryoon Kim et al.	19,000원
2014	Lessons of Transformation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2)	Kyuryoon Kim et al.	15,500원
2014	한반도 통일의 효과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4-3)	김규륜 외	4,500원
2014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종철, 허문영, 송영훈, 김갑식, 이상신, 조원빈	12,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1)	조정아 외	7,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2)	조정아 외	22,000원
2014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허문영 외	12,000원
2014	Law and Policy on Korean Unification: Analysis and Implications	박종철 외	11,000원
2014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DMZ 평화생태적 이용방안	손기웅 외	17,000원

■ 북한인권 ■

2014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9권 1호	이금순 외
2014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9권 2호	이금순 외

■ 정책연구시리즈 ■

2014-01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 협력방안 모색	임강택, 권태진
---------	-------------------------------	----------

■ Study Series ■

2014-01 Korea'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oon et al.
 2014-02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Bae, Jung-Ho et al.
 2014-03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et al.
 2014-04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et al.
 2014-05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Park Hyeong Jung, Choi Sahyun

2015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5-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외 9,000원
 2015-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홍민 13,000원
 2015-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교육과정·교과서
 조정아 외 13,500원
 2015-04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외 16,500원
 2015-05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박영자 외 10,500원
 2015-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외 6,500원
 2015-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이기현 외 7,500원
 2015-10 한반도 중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 박형중 외 16,500원
 2015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손기웅 외 10,500원
 2015 2015년 통일에측시계
 홍석훈 외 10,000원
 2015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외 15,500원
 2015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0,000원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규창 외 8,000원
 2015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9,000원
 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외 10,000원
 2015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 외 8,000원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분야
 조한범 외 11,500원
 20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조한범 외 14,000원
 2015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종합요약보고서)
 전병곤 외 10,000원
 2015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배종렬 외 13,000원
 2015 Inter Korean Relations and the Unification Process in Regional and Global Contexts 박종철 외

■ 정책연구시리즈 ■

2015-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박영자 외

■ Study Series ■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2015-04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2016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6-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윤 외	14,000원
2016-02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6,500원
2016-04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정구연, 이기태	6,000원
2016-0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섭, 이경화	8,000원
2016-06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이규창	8,000원
2016-0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6-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홍우택 외	7,000원
2016-09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김석진, 홍제환	8,000원
2016-10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박영자 외	13,000원
2016-11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식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한범 외	9,500원
2016-12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임예준 외	8,500원
20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김진하 외	7,000원
2016-14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7,000원
2016-15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욱 외	14,000원
2016-16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 외	8,000원
2016-17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김수암 외	8,500원
2016-1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김수암 외	15,000원
2016-19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신중호 외	16,500원
2016-20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 외	12,000원
2016-21	2016년 통일에측시계	홍우택 외	7,000원
2016-22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 외	19,000원
2016-23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홍민 외	13,000원
2016-24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홍민 외	13,000원
2016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7,500원

2016 북한의 제4차, 5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전략 모색과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홍석훈 외 9,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6-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민태은
 2016-02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신중호 외
 2016-03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임강택, 이강우

■ Study Series ■

2016-01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2015-2030) Park, Hyeong Jung et al.
 2016-02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2016-03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2016-04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2016-05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m et al.

2017년도 연구보고서

■ 정책연구시리즈 ■

2017-01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 분석과 추진방향 이규창 외

연례정보보고서

201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4~2015 6,000원
 201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8,000원
 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6~2017 8,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3, No. 1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3, No. 2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4, No. 1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2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3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1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2 (2016)	10,000원

기 타

2014 북핵일지 1955~2014

조민, 김진하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